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14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책모니터링 운영 중심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Jeonbuk You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 Focusing on Policy Monitoring

이주연 조경욱 전희진 최지훈 전아람



##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협력

## 연구진 소개

###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조경옥

日本 福岛대학 사회학박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 전아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14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책모니터링 운영 중심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Jeonbuk You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 Focusing on Policy Monitoring

이주연 조경욱 전희진 최지훈 전아람



##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 책임	이주연	연구위원	연구총괄
공동 연구	조경옥	선임연구위원	제2장 1절·3절
	전희진	연구위원	제4장 1절
	최지훈	전문연구원	제1장 3절, 3장 2절·3절, 5장 2절 일부
	전아람	전문연구원	제1장 3절

---

자문위원 도인정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

연구협력관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

연구관리 코드 : 23GI1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목적 및 방법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배경) 전북 청년인구의 타 시도로 지속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전북 청년인구 중 청년여성의 타 시도로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청년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한다면, 전북 청년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적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정책 수혜자 입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으로 정책적 체감도 제고 또한 필요하다.
- (목적) 본 연구는 전북 2023년 청년정책(3개 분야 중심)을 청년 수요 기반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진단하여 성 형평성을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별요구도 분석,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평가·모니터링, 그리고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 당사자의 정책 수요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2) 연구 방법

- 첫째,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정책동향 자료 등 문헌과 행정자료 검토, 둘째, 전북 청년의 인구 현황과 성별 요구도 파악을 위해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이동통계,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거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2022) 등의 원자료 재분석, 셋째,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와 청년정책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젠더 전문가와 성별영향평가분석, 넷째, 청년 주도의 성인지관점의 정책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2. 결론 및 정책제언

### ■ 요약 및 결론

- 요약 및 결론으로 (1) 전북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 지속 확대, (2) 성별 분리통계 데이터 생성·구축 필요 및 시급, (3) 성인지 관점의 청년정책 기획·집행·환류 체계 기반 조성 필요, (4) 청년층의 이질성과 수요를 고려한 정책 대상 세분화 지원 필요, (5)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가 갖춰야 할 중요 조건들로 나타났다.

###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개선 방안

-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모니터링, 청년정책 성인지 분석 및 정책적 수요(여성가족부 성별 영향평가 양식 기준) 관련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향을 크게 (1) 전라북도 청년정책 분야별 개선 사항, (2)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2개로 구분하고 세부 정책과제(안) 12개를 제안한다.

[표 5-1] 전북 청년정책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개선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안)
전라북도 청년정책 분야별 개선 사항	(일자리) '전북 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 사업개선, 청년여성 오픈채팅방 운영
	(일자리) 청년 여성 특화 미래산업 (중소기업)분야 취업박람회 및 취업캠프
	(일자리) 청년여성 특화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공모전 및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거)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북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설
	(주거) 전북 청년 주거 지원 센터 운영
	(주거) '(가칭)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복지·문화) 청년 자산 형성 아카데미 및 사례관리 센터 운영
	(복지·문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개선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정책 사업별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생산·(시계열)구축·활용
	청년정책 행정체계 조직 구성원 성인지적 관점 강화
	청년정책 사업 대상 선정 결정권자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
	청년정책 분야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

# 차례

## CONTENTS

---

요 약 ..... i

---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 목적 ..... 4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7  
다. 연구 추진 절차 ..... 8  
3. 선행 연구 검토 ..... 10

---

### 제2장 성인지적 관점과 청년정책의 이론적 논의

1. 성인지적 관점과 성인지 정책의 이해 ..... 27  
가. 성인지적 관점의 개념 ..... 27  
나. 성인지 정책 추진 및 실현을 위한 수단 ..... 28  
2. 청년 개념 및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 ..... 30  
가. 청년의 개념 ..... 30  
나. 청년정책의 개념 및 분야 ..... 32  
다. 청년정책의 청년 연령 규정에 대한 논의 ..... 36  
3.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이슈 ..... 41

**제3장 전북 청년정책 현황 및 성별 요구도 분석**

- 1. 전북 청년정책 현황 분석 ..... 47
  - 가.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추진 과정 ..... 47
  - 나. 법·제도 측면의 변천 과정 ..... 49
  - 다. 행정집행 체계 측면의 변천 과정 ..... 53
- 2. 전북 청년 현황과 성별 요구도 분석 ..... 55
  - 가. 청년인구 관련 현황 ..... 55
  - 나. 청년 일자리 관련 현황 ..... 79
  - 다. 청년 주거 관련 현황 ..... 92
  - 라. 청년의 삶 관련 현황 ..... 102
- 3. 요약 및 시사점 ..... 111

**제4장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분석**

- 1.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결과 ..... 121
  - 가.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 121
  - 나.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 126
- 2.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분석 ..... 131
  - 가.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분석 ..... 131
  - 나.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분석 ..... 144
- 3. 전북 청년 대상 심층 면접 결과분석 ..... 161
  - 가. 심층 면접조사 개요 ..... 161
  - 나. 심층 면접조사 결과분석 ..... 163
- 4. 요약 및 시사점 ..... 180

---

## 차 례

### CONTENTS

---

<b>제5장</b>	<b>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개선방안</b>	
	1.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진단 .....	185
	2.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안 .....	192
	가.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개선 방안 .....	192
	나.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안 .....	195
<b>참고문헌</b> .....		205
<b>영문요약 (Summary)</b> .....		208

## 표 차례

### LIST OF TABLES

[표 1-1]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	13
[표 1-2] 주거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	16
[표 1-3] 안전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	18
[표 1-4]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	20
[표 2-1]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기초 .....	35
[표 2-2] 국내·외 청년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의 연령 범위 .....	36
[표 2-3] 전국 17개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연령 현황 .....	38
[표 2-4] 전북 14개 시군별 청년 관련 조례의 청년 연령 현황 .....	38
[표 2-5] 40대를 청년으로 조례상 규정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현황 ...	39
[표 3-1]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조례·기본계획, 행정체계(전담부서), 집행체계 변천 과정 ...	48
[표 3-2] 전북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1차('18~'22)와 제2차('23~'27)의 핵심 과제 ...	50
[표 3-3] 전북 청년정책시행계획('18~'23)의 분야별 사업과 예산 현황 .....	51
[표 3-4] 전국 시도별 청년인구 현황(2023.6) .....	56
[표 3-5] 전라북도 성별 총인구 및 청년인구 추이(2010~2023.6) .....	57
[표 3-6] 전라북도 성별 총인구 및 청년인구 추이(2025~2050) .....	58
[표 3-7] 전국 시도별 청년 인구 현황(2023.6) .....	59
[표 3-8]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총인구 및 청년인구(2023.6) .....	60
[표 3-9]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수 추이(2015~2022) .....	63
[표 3-10] 전국 및 전북 성별 청년 1인가구 현황(2015/2022) .....	65
[표 3-11] 전북 시군별*성별 청년 1인가구 현황(2022) .....	67
[표 3-12]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수 추이(2015~2022) .....	69
[표 3-13] 전국 시도별 청년층 순이동자 수(2022) .....	70
[표 3-14] 전북 성별 청년층 이동자 수(2022) .....	72
[표 3-15] 전출한 전북청년의 전입지별 순이동자 수(2022) .....	75
[표 3-16] 전북 시군별 청년층 순이동자 수(2022) .....	76

---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표 3-17] 전국 및 전북 청년 경제활동 현황	79
[표 3-18]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80
[표 3-19]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82
[표 3-20] 전국 및 전북 청년 산업별*성별 취업 현황	85
[표 3-21]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직업별*성별 취업 현황	86
[표 3-22]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종사상지위별*성별 취업 현황	87
[표 3-23]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고용계약상태 현황	88
[표 3-24] 전국 및 전북 청년 성별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현황	89
[표 3-25] 전북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희망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90
[표 3-26] 전북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 비희망자의 현재 활동 상태	91
[표 3-27] 전국 시도별 청년가구 유형(2022)	92
[표 3-28]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2022)	95
[표 3-29]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주택자금 마련 방법(1순위)	97
[표 3-30]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주거불안 경험률(2022)	98
[표 3-31] 전국 및 전북 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2022)	101
[표 3-32]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의 학력 현황	102
[표 3-33]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연령별 혼인율 추이(2012~2022)	105
[표 3-34] 전국 및 전북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2022)	106
[표 3-35]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의향(2022)	107
[표 3-36]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문화예술여가 경험 현황(2022)	110
[표 4-1] 전북 가점형 양성평등센터에서 운영한 지역 청년 정책 모니터링 참여자 현황	123
[표 4-2]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참여자의 역량강화 교육 현황	124
[표 4-3]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활동 추진 과정	125
[표 4-4]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132
[표 4-5]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의 조항별 내용	133
[표 4-6]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162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책모니터링 운영 중심

---

[표 4-7] 심층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 163

[표 4-8] 심층 면접 내용 분석 결과 요약 ..... 165

[표 5-1] 전북 청년정책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개선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 .... 195

[표 5-2] 전국 시도별 청년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지원 조례 현황 ..... 200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9
[그림 3-1] 전국 청년인구의 시도별 구성비 .....	55
[그림 3-2] 전국 시도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구성비 .....	56
[그림 3-3] 전북 연도별 청년인구 추이 .....	57
[그림 3-4] 전북 전체 여성인구 대비 청년여성 구성비 추이 .....	58
[그림 3-5] 전북 시군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구성비 .....	60
[그림 3-6] 전북 성별 청년인구의 시군별 구성비(2023.6) .....	61
[그림 3-7]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 중 여성 비중 .....	61
[그림 3-8] 전북 시군별 여성인구 중 청년여성 비중 .....	62
[그림 3-9]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 수 추이 .....	63
[그림 3-10] 전국 및 전북 1인가구 중 청년층 구성비 .....	64
[그림 3-11]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	64
[그림 3-12] 전북 성별 청년 1인가구 수 추이 .....	66
[그림 3-13]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 성별 증감률('15년대비) .....	66
[그림 3-14]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	66
[그림 3-15]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 현황 .....	67
[그림 3-16]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비중 .....	68
[그림 3-17]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비중 .....	68
[그림 3-18]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수 추이 .....	69
[그림 3-19] 전국 시도별 20대 순이동률 비교 .....	71
[그림 3-20] 전국 시도별 30대 순이동률 비교 .....	71
[그림 3-21] 전북 청년의 성별*연령별 시도 간 순이동자수 .....	73
[그림 3-22] 전북 전체 시도간 전입/전출 인구의 청년층 구성비 .....	73
[그림 3-23] 전북 청년층 시도 간 순이동자수 추이 .....	74
[그림 3-24] 전출한 전북청년의 연령대별 및 전입지별 순이동자수 .....	75
[그림 3-25] 전북 시군별 청년층 순이동자수 중 여성 비중 .....	77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책모니터링 운영 중심

[그림 3-26] 시군별 청년 전출자 중 여성 비중 .....	77
[그림 3-27] 타지역에서 청년층이 전북으로 전입하는 사유 .....	78
[그림 3-28] 전국 및 전북의 청년 경제활동 추이 .....	79
[그림 3-29] 전국 및 전북 청년남성 경제활동 추이 .....	80
[그림 3-30] 전국 및 전북 청년여성 경제활동 추이 .....	81
[그림 3-31] 전국 및 전북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차이 비교 .....	81
[그림 3-32] 전국 및 전북 청년 고용률 성별 차이 비교 .....	82
[그림 3-33] 전국 및 전북 청년층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	83
[그림 3-34] 전국 및 전북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	84
[그림 3-35] 전국 및 전북의 주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성별 비교 .....	84
[그림 3-36]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직업별 취업 현황 .....	86
[그림 3-37] 전국 및 전북의 주요 직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성별 비교 .....	87
[그림 3-38]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고용계약상태 현황 .....	88
[그림 3-39] 전북 성별 미취업 청년인구의 최근 한 달간 취업 희망 경험 여부 .....	89
[그림 3-40] 전북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 비희망자의 현재 활동 상태 .....	91
[그림 3-41] 전국 시도별 청년가구 유형별 구성비(2022) .....	93
[그림 3-42]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가구유형 비교(2022) .....	94
[그림 3-43]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	94
[그림 3-44] 전국 및 전북 청년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의 성별격차 .....	96
[그림 3-45]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주택자금 마련 방법 .....	96
[그림 3-46] 전국 및 전북 독립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	99
[그림 3-47]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	99
[그림 3-48]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	100
[그림 3-49] 전북 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	101
[그림 3-50]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의 학력 현황 .....	102
[그림 3-51] 전국 시도별*성별 초혼연령 .....	103
[그림 3-52] 전북 성별 초혼연령 추이 .....	103

---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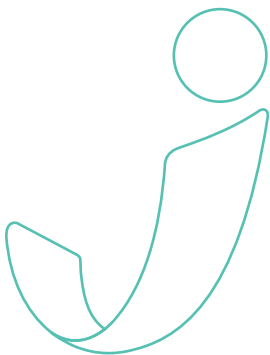
[그림 3-53] 전북 시군별*성별 초혼연령 .....	104
[그림 3-54] 전국 시도별 첫 자녀 출산연령 .....	105
[그림 3-55]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의향 .....	107
[그림 3-56] 전국 및 전북 청년의 문화예술여가 경험률 .....	108
[그림 3-57] 전국 및 전북 청년의 문화예술여가 경험률 성별 비교 .....	109
[그림 3-58] 전북 청년들이 문화예술여가활동을 안(못)하는 이유 .....	109



# 제 1 장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청년의 고용과 실업 관련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청년이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후 청년의 높은 빈곤율, 88만원 세대, 3포 세대, N포 세대, 니트족, 캥거루족 등 청년들의 위기적 상황을 나타내는 신조어 생성들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는 청년 문제를 청년 미취업자의 실업과 취업에서 찾았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초점을 두어 고용(일자리) 관점에서의 청년정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04년 「청년 실업해소특별법」(향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변경, 청년고용법)을 제정하였다. 청년 고용(일자리) 문제는 결국 주거 빈곤과 부채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하여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안이 되며 생애 전체의 삶과도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후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기본법 8조에 의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25)을 수립하면서부터 청년층의 실업과 고용 분야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이외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의 영역까지 확대·연계시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범주를 만 19~34세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청년기본법 근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발표 하고, 2021년부터 중앙 행정 기관과 시·도지사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분석·평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가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보다 빠르게 제정되면서 지자체별 지역 맞춤형의 다양한 청년정책이 도입·시행되었다. 각 지자체의 도정이 바뀔 때마다 주요 공약에 청년정책이 필수적으로

---

포함되어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은 컸다.

그러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청년 당사자의 참여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정책에 청년층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 또한 미흡하여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리고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대처에 치중되어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 내부에서 발생 되는 성별간 사회적 차별과 경험, 성별에 기인한 지위와 권력, 그리고 고정관념 등을 민감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하여 청년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은 성별 간의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여성과 남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별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시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요소들을 고려하듯이 젠더를 정책의 중요한 준거로 설정하여 정책의 효율성·효과성·형평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살펴본다는 것은 기존의 청년정책인 청년남성과 청년여성 모두의 경험과 이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이들 간의 성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기존의 청년정책을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북 청년인구의 타 시도로의 지속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북 청년인구 중 청년 여성의 타 시도로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청년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한다면 전라북도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추진되고 있는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진단과 청년 당사자 입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여 청년정책의 성 형평성을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성인지 정책 제안으로 환류가 가능한 개선 방안을

---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성평등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통계(성별분리 통계) 분석을 중점 활용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고자 한다. 또한,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그 결과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전라북도 청년인구 현황과 청년정책 분야별 주요 현황을 성별 분리 통계로 작성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전북도 내·외 이동분석 및 주요 분야별 성별 요구도를 공식적인 통계자료 재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라북도 청년들의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성인지적 청년정책 개선 사항과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책적 수요 파악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라북도 청년 관련 주요 조례와 2023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중 3개 분야(일자리·주거 및 문화·복지)의 핵심 과제를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와 최종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양식을 토대로 분석·진단하여 환류가 가능한 성인지적 청년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 입장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분석 진단하여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북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북 청년정책 5개 분야 중 성별 간 이질적 성격과 차이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내는 일자리, 주거(안전), 문화·복지 등 3개 정책분야로 제한하여 선행연구 고찰,

---

기존 통계자료를 통한 성별 요구도 현황, 성인지적 관점과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정책모니터링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방법과 절차,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개념과 성인지 분석의 이해, 청년 개념과 청년정책의 흐름과 분야, 청년정책의 청년 연령 규정에 대한 논의 및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분야별 이슈 등 성인지적 관점과 청년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북의 청년정책 중 일자리·주거안전·문화복지 분야 중심의 현황분석을 통해 전북 청년정책의 세부사업 및 대표 사업 및 예산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식적인 다양한 통계자료(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주거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2022)의 재분석을 통해 전북지역 청년 현황과 청년정책 분야별(일자리, 주거안전, 복지) 성별 요구도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먼저 젠더 전문가(전북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와 전라북도 청년 관련 주요 조례와 2023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중 일자리·주거안전 및 문화·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를 2개씩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양식을 토대로 분석 진단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청년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성인지적 청년정책 개선 사항과 심층면접 조사를 통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책적 수요 파악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3장(전북 청년 성별 요구도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4장(전북 청년정책의 성인 분석 결과와 정책모니터링 운영 결과 및 심층면접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진단 및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제안으로 환류가 가능한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 나.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청년을 둘러싼 담론과 국내·외 청년정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부처별 청년정책 행정자료, 청년정책과 성인지적 관점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인터넷 기사 검색 등의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및 전북의 청년 관련 인구학적 현황, 생활 실태 전반에 대한 특성과 성별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사회조사, 주거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2022) 등 통계청 승인 통계 2차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의 원자료 등을 재분석하였다.

### 2) 전북 청년 관련 조례 및 청년정책 분야별 성인지 분석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전라북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들을 젠더 전문가와 함께 최종 5건을 선정하여 젠더 전문가가 청년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분석·진단하였다. 다음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내용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2023년도 청년정책 중 성별 특성 간 상대적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정책들을 3개 분야별 2개의 핵심사업을 젠더 전문가와 함께 최종 선정 후, 젠더 전문가의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 지침과 매뉴얼을 토대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성인지 분석·진단하고 시사점과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3)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전북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역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가 2023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평등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전반의 진행 절차를 본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면서 모니터링의 결과 내용을 개선 방안 내용으로 담았다.

---

#### 4) 심층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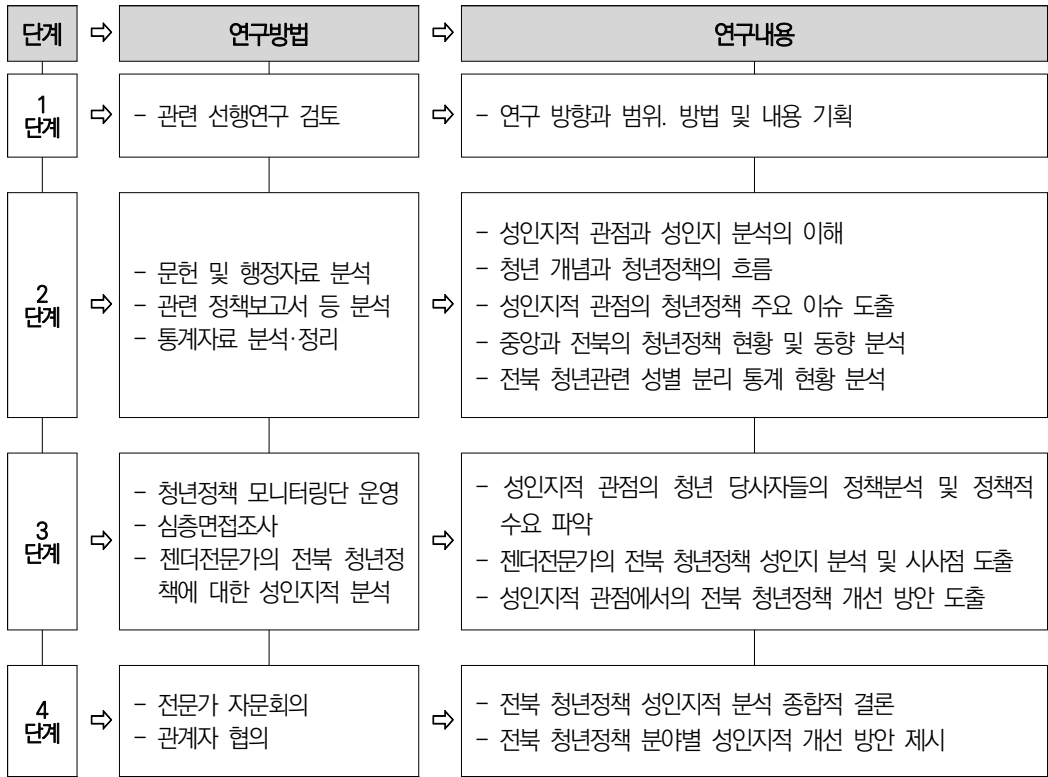
통계청의 2차 자료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청년 당사자의 청년정책 인지도(체감도), 청년정책 수혜 경험과 만족도, 정책(사업)의 추진체계의 한계(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성인지적 관점의 성별에 따른 정책개선 과제와 분야별 필요 지원 요구 등을 연령대별·지역별·부모동거여부별·결혼유무별 등 다양한 여건들과 함께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정책활동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 5) 전문가 자문

먼저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과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해 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도내·외 젠더 전문가 대상의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과 성인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는 청년정책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섭외·선정 및 청년정책 개선안과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다. 연구 추진 절차

이상 지금까지의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추진 절차를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 3. 선행 연구 검토

---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묶어 지원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청년정책의 여러 분야 중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주거, 안전 영역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청년 남녀 성별 차이나 청년 여성 대상 연구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 ■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및 성별 차이 분석

류유선(2019)의 연구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취업 중인 청년여성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취업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시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대전 청년 및 일자리 관련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참여 학생의 세분화된 만족도, 고용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속근무연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 셋째, 학교, 학생, 기업 등 이해당사자 간 사업의 목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목표에 따른 성과 목표가 구성될 필요가 있고, 넷째, 청년여성의 주요 취업 업종을 고려하여 참여 기업의 다양화 및 여성 특화 기업을 발굴, 다섯째, 학점과 연계한 기업에 나가 있는 학생의 경우,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기업 관리 책임자의 교육(성희롱 예방, 노동/인권) 필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경, 정유진(2020)의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에게 있어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이기는 하나 일자리와 관련된 성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

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과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별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첫째, 지원사업 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 조례에서의 강소기업 정의를 개정할 필요(성평등 관련 내용 추가)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서울형 강소기업 심사기준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 준수사항'을 추가할 것, 나아가 재인증을 위해서는 최소 65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형 강소기업 일자리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생활균형 및 수평적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강소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경우 첫째, 사업 내실화 강화와 청년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근로환경 심사기준이 보완이 필요하고, 청년 대표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다양한 청년 창업 성공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현정, 김아란(2022)의 연구에서는 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당장 직면한 문제임과 동시에 미래 생애과정 설계와 연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청년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세대에게 성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성인지 관점의 장벽은 없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크게 법·제도적 측면, 사업기반, 사업운영 등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총 15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 계획 및 운영지침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사업기반 개선방안으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인지 통계 생산과 각종 서식 성별 분리 작성,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성별 목표 제시 필요, 기업 선정 기준 개정, 정책결정 과정에 성평등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마지막 사업운영 개선방안으로는 기업 담당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일·생활균형 및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제공, 참여 기업과 청년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다양한 청년 성공사례 발굴, 여성청년 취업

---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오유진, 김교성(2019)의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집단별 노동이행 궤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성별과 학력을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비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졸 여성은 남성보다 세분화된 유형이 도출되었다. 즉, 고졸여성 과 남성은 비슷한 유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고졸남성은 좋지 못한 일자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고, 고졸여성은 이에 더해 미취업상태와 가사양육형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우 일자리 지속 후 가사양육 유형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을 모두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청년 개인이 가진 특성,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정미(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성인지적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졸자직업이동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대졸자 남성과 여성의 인적 자원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기업의 수요 측면에 따른 성별 분포의 차이는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등과 같이 여성 취업자 수가 많은 계열에서 나타난 고임금 일자리의 성별분포 차이는 남녀의 자질 차이라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배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에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는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고용형태 및 임금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윤선, 남승연, 장미(2016)의 연구에서는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이 청년 여성들의 고용시장 이행을 돕고, 완전한 고용상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여성의 일 경험은 현재의 일자리나 직무와 관련성이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에 사회 초년생들이나 일 경험 중인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1-1]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대전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특성영향평가  류유선(2019) 대전세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특성상별영향평가를 통해 취업 준비부터 취업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li> <li>• 청년일자리사업 가운데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인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 정책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결과분석</li> <li>-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정책 및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자료 수집/검토</li> <li>- 연도별, 기관별 정책개선 현황에 따른 우수사례 검토 및 분석과 정책개선에 대한 점검</li> <li>• 이해관계자 및 청년 인터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성과 평가 기준 및 지표 설정 필요</li> <li>- 기업에 대한 참여 학생의 만족도, 고용조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속근무연수 등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평가할 시스템 마련</li> <li>• 학교/학생/기업 입장에서 개별 목표에 따른 성과목표 구성 필요</li> <li>• 성별통계 자료 구축 필요성</li> <li>- 대학별, 학년별, 학과별 참여자, 수료인원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성별통계, 체험기업 참여자 및 취업자에 대한 성별 통계, 만족도 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통계 필요</li> <li>• 사업 참여 기업의 다양화 및 여성특화기업 발굴 필요</li> <li>• 기업 관리 책임자의 교육 강화(성희롱 예방교육, 노동 및 인권 교육 필수 지정 필요)</li> </ul>
서울시 청년정책 특성상별영향평가-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정장유진(2020) 서울여성가족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나, 일자리 성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li> <li>• 이에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li> <li>• 특성상별영향평가는 대상 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원자료 재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면접조사</li> <li>• 서울시 강소기업 지원사업과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법적 근거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li> <li>• 각 사업에 대한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환경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분석하고 정책요구도 파악</li> <li>•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사업별 정책 개선과제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방안</li> <li>-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재정의 및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모니터링 필요</li> <li>-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증 기준 수립 필요</li> <li>- 서울형 강소기업 일자리 질 강화를 위한 기업 노력 요구</li> <li>•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개선방안</li> <li>- 사업 내실화를 위해 양성평등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의 자를 심화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li> <li>- 청년 대표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필요</li> <li>- 청년 프로젝트 사업의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청년 창업 성공사례 지속적 발굴 필요</li> <li>-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li> </ul>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특성상별영향평가  임현정김아린(2022) 부산여성가족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특성상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여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환류가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li> <li>- 청년일자리사업 참여한 남녀 청년 대상 설문조사 및 FGI</li> <li>•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11개)</li> <li>- 최근 3년 연속사업 참여인원 20명 이상 기준으로 선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 및 격차 해소'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li> <li>• 계획 및 운영자침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필요</li> <li>- 세부사업 심사기준에서는 청년 참여자 성별 균형이나 청년 세대 내 격차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평등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li> <li>• 향후 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추진방향 및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이 필요함</li> <li>• 향후 시행계획에서는 추진성과에 수혜자 성비를 작성하여, 각 세부 과제별 수혜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차해야 하며, 성별 격차를 고려하여 성인지 예산서 상 성과지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li> <li>• 참여 기업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li> <li>• 참여 기업과 청년 대상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li> <li>• 참여 기업과 청년 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조차해 줄 수 있는 중재자 필요함</li> <li>•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여성청년 취업 전문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해야함</li> </ul>

<p>성별 하위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p> <p>오유진김교성 (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과 성별로 구분되는 '청년 집단별 노동이행 궤적'의 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청년 집단 간 노동이행 궤적'의 유형은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을 규명하여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노동시장의 실태와 이행과정</li> <li>- 청년 노동시장 내 학력과 성별 격차</li> </ul> </li> <li>• 2차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패널조사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에 따라 관점은 일자리 비율의 격차가 크고, 대졸여성은 대졸 남성보다 세분화된 유형을 나타냄</li> <li>• 고졸여성과 남성은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만, 고졸남성은 인졸은 일자리가 지속되는 반면, 고졸여성은 미취업상태와 가사양육형태까지 나타나 복잡한 이행 궤적 보임</li> <li>• 따라서 청년정책의 대상을 단일한 청년으로 설정하지 말고, 개별 청년이 가진 특성과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요구됨</li> </ul>
<p>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p> <p>유정미(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세대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제하여 성인지적 청년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세대 고용의 전단계차</li> </ul> </li> <li>• 2차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졸자직업이동조사(2013) 자료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고용형태 및 임금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 포함되어야 함</li> <li>• 평등한 채용이 이루어지는 방향 여성 집중형 일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li> <li>• 여성 집중 일자리는 임금 보상 수준이 낮은 경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서 여성 중심 일자의 직무 가치 제고 방안이 시급함</li> </ul>
<p>미취업 여성청년층의 현황과 고용정책 과제</p> <p>신성미(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고용정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양한 정책대상 집단 중에서도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li> <li>• 청년고용정책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어야 할 집단을 찾아내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진단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업 청년층 특성</li> <li>- 청년고용정책 동향</li> </ul> </li> <li>• 2차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부조사(2012)와 지역고용조사 2012년 2분기자료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미취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만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청년층은 남성청년층에 비해 취업준비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취업준비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남성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li> <li>•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들이 희망하는 직업도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무직 희망자 비율이 더 높은데 비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자 군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li> <li>• 이러한 인적자본의 특성 차이는 성별, 전공계열, 희망하는 직업분야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정책대상 집단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li> </ul>
<p>청년 여성 일경험 실태조사</p> <p>최윤선 외(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여성의 일 경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늘어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청년 여성들의 고용시장 이행을 돕고 불안정한 고용에서 완전한 고용상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검토 및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자료분석</li> <li>- 정부/자치체 일 경험 관련 사업운영 현황 분석</li> </ul> </li> <li>• 설문조사 및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4세 여성취업자 대상 온라인 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은 현재 일자리나 직무 관련성이 미미한 수준임</li> <li>• 향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도 실업상태 청년 여성 그리고 현재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여성에게 대한 경력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li>• 양성평등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li> <li>• 사회 초강대들이나 일 경험 중인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 필요</li> </ul>



## ■ 주거 분야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및 성별 차이 분석

만 19~39세인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부모동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1인 가구로 살거나(청년 단독 혹은 1인가구), 결혼하여 부부로 거주하거나(청년부부), 혈연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등 다양한 가구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년층의 가구유형 중 부모동거유형은 감소하는 반면, 부모 독립 혼자 사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성, 주거여건의 다양성 등 청년층들은 주거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관련 선행연구들도 지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청년여성의 주거와 관련해서는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주거 안전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김강산(2021)은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가구의 주거 실태와 주거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에 대한 대표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지원제도는 정책의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보았다. 또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분양 제도 역시 함께 개선해야 필요가 있고,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주, 최유정(2020)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용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지적하면서 특히, 안전에 대한 추가 비용이 필수적인 청년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주거환경 조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청년여성의 주거 안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사는 공공주택의 확대가 필요하고,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거 관련 범죄의 대처방안과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지원 강화’ 방안으로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입주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청년이 원가족으로부터 주거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 원가족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직업군에 대한 임차료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자, 이경숙(2018)의 연구에서는 청년 주거정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여성 가구

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여성의 주거지원 단계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청년여성의 주거원 기반 강화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청년 1인가구에게 불리한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주거비 지원 항목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준비-진입-정착 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1-2] 주거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경선(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가구의 주거실태 및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가구 주거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가구 1인가구 현황</li> <li>- 청년가구 자립유율 및 자가보유율</li> <li>- 청년가구 주거형태 및 수준</li> <li>-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li> <li>- 청년가구 정책수요</li> </ul> </li> <li>• 청년 주거지원 제도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양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분양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li> <li>• 청년 거주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li> </ul>
서울시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연구 공중취유정(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높은 임대료와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년여성의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로 인해 청년여성들이 주거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li> <li>• 이에 서울 청년여성의 가구구성 및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 실태 파악</li> <li>• 서울시 청년여성 주거안전 관련 정책 검토</li> <li>• 청년여성 대상 심층면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안전 제고를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의 확대</li> <li>- 범죄예방 환경 조성</li> <li>- 안전홈세트 지원 확대 및 사후점검 강화</li> <li>- 주거지 기반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추가 지원</li> <li>- 위험발생 시 대피방안 교육과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li> </ul> </li> <li>• 주거지원 현실화를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안정성 강화</li> <li>- 비규정규직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li> <li>- 공유주택의 입주자격 완화</li> <li>- 위험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공동체 시설 확대 방안 마련</li> </ul> </li> </ul>
광주지역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박주희(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에서 증가하는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제상태를 중심으로 주거 안전과 관련한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안정적인 주거 지원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 1인가구 현황 파악</li> <li>•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전 정책 현황 분석</li> <li>•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전 관련 정책 수요(FG)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 1인가구를 대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등 특성별 욕구 파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지원 조례 개정</li> </ul> </li> <li>• 다양한 임대주택 보급 및 주택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1인가구 및 사회초년생 여성 안심 행복주택 공급</li> <li>- 여성 안심 행복주택 및 여성 안심마을 조성</li> </ul> </li> <li>• 저소득 청년여성 1인가구 지원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택 비우려 자금</li> </ul> </li> <li>• 안전 증진 정책 강화</li> </ul>
대구지역 청년여성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민지(강숙(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 및 여성안전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여성 가구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청년여성의 연령별특성별 주거 지원 방안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 및 주거지원 정책 분석</li> <li>• 대구 청년여성 주거실태 및 주거지원 수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원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거지원 지원 조례 제정</li> <li>- 주거지원 협력체계 구축</li> <li>- 주거비 지원 강화(대상 및 자격 확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li> </ul> </li> <li>• 맞춤형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단계/초기진입단계/정착단계별</li> </ul> </li> </ul>

## ■ 안전·돌봄 분야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및 성별 차이 분석

청년정책의 안전·돌봄 분야 관련 성인지적 관점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거·주택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청년여성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여성으로 한정되기 보다는 범죄로부터의 ‘여성 안전’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범죄 안전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김영신, 고보혜, 정재명(2017)의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범죄안전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차이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범죄피해자지원, 안전환경 조성 분야 등 3개 분야의 9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표적으로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성별 인식 차이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로 가정-학교-직장-사회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범죄피해지원 분야에서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카 등에 대한 폭력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안전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범죄에 취약한 공공화장실,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공간)에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안심 인증 마크 부여 등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연화, 노필순, 이화영(2019)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충북여성의 인식 및 정책수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안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확대,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 여성안전과 관련된 통합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여성참여 의사결정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경하, 김정인(2019)의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재 도민들이 데이트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발생 현황과 지원체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정비 및 강화,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도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비, 심리치료프로그램, 긴급생계지원자금, 사건처리 지원 등과 같이 실제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안전분야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광주지역 범죄안전정책에 대한 심층상별영향분석 평가 김영산·고보혜·정재명(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광역시 범죄안전 정책을 범죄예방, 피해지원, 범죄로부터 안전환경조성으로 구분하고 전더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별영향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안전 관련 문헌/사례검토</li> <li>광주지역 범죄안전정책에 대한 심층상별영향분석평가</li> <li>심층상별영향분석평가 및 FGI</li> <li>광주지역 범죄안전을 위한 정책제출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예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학교·장사화사로 이어지는 상인지 교육 필요</li> <li>가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li> </ul> </li> <li>범죄피해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차 피해 방지와 지원체계에 관한 정책 마련 필요</li> <li>오픈형 보호시설로의 전환 논의 필요</li> <li>폭력 처벌과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필요</li> <li>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li> </ul> </li> <li>안전환경 조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사범사업 확장 필요</li> <li>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시설 설치와 안심 인증 마크 부여</li> </ul> </li> </ul>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충북여성의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김영하·노필순·이화영(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과 남성이 체감하는 안전은 다를 수 있으며,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함</li> <li>이에 충북지역 여성들이 원하는 자원서비스와 정책의 수요를 도출하여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 지역사회 안전환경 분석</li> <li>지역사회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 및 면접조사</li> <li>전문가 자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여성안심구간길 조성사업의 확대</li> <li>도민의 거주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li> <li>지역의 안전체계 홍보 및 환경정비 추진</li> </ul> </li> <li>여성 대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대상 정책서비스의 홍보 강화</li> <li>실효성 있는 정책서비스로의 전환</li> </ul> </li> <li>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 및 시군의 조례제정 필요</li> <li>여성참여 의사결정 체계 마련</li> <li>성평등한 시민의식 제고 및 여성안전 통합안전정보시스템 구축</li> </ul> </li> </ul>
충남 데이터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 이경하·김정인(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도민의 연인관계와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현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폭력 현황과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검토</li> <li>피해자 지원 인프라 검토</li> </ul> </li> <li>지역사회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 및 면접조사</li> <li>현장조사차, 경찰 등 관계자 인터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폭력 관련 정책 추진기반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례 보완 및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li> <li>피해자 지원 인프라 정비 및 강화</li> <li>데이터폭력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li> </ul> </li> <li>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 처벌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li> <li>피해자 지원정책 발굴</li> </ul> </li> <li>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지원기관 조사차 대상 역량강화 교육</li> <li>데이터폭력 예방교육 및 도민 홍보</li> </ul> </li> </ul>
대구시 안전정책에 대한 성인지 분석 및 개선방안 이경숙·최정순(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시 안전대책에 있어 성별 격차와 생활에 따른 불이유 발생 빈도가 높고 지역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이슈와 전더, 국내외 안정 및 안전정책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li> </ul> </li> <li>안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 및 면접조사</li> <li>전문가 자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인지 관점과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조례 정비</li> <li>상인지 관점을 고려한 대구시 안전종합 중장기 계획 수립</li> <li>관련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 및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li> <li>성평등 가치를 내재한 세부사업 추진/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li> <li>안전교육의 성인지적 운영</li> <li>생애주기별·성별 등을 고려한 효과적 안전교육 및 홍보방안</li> <li>마련/미흡단위 교육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li> <li>여성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정책 수립</li> </ul>

## ■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김영미(2018)의 연구에서는 한국 2030 청년세대가 청년정책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청년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인식과 태도의 균열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같은 청년세대에 속해 있다고 해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 청년 개인과 그들이 속한 가구(부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청년을 동일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일률적인 정책설계를 하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과 이질적 욕구를 반영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아(2021)의 연구에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여 젠더 관점 누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청년을 분류하여 복지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젠더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청년을 남성 기준의 보편 주체로 설정하여 여성의 문제를 청년과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와 복지에서의 청년 여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격차 축소라는 목표 속에 성차별을 주요 의제로 삼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수요에서 성별 분리 통계 및 변화 양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상가족 규범을 근거로 하는 이행기의 청년 관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경아·김영미·류정아·박미선·박정마·안윤정·이은아·최운선·최지은(2021)의 연구의 경우 청년집단은 가족과 개인적 배경, 교육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경험하고 이러한 성별 격차는 성인이 된 이후 일생 동안 지속적인 성별 불평등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총 11개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성별 차이를 고려한 새로운 ‘청년’ 개념의 구성과 정책 설계, ② 다양한 청년 취약성 요인을 고려한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 ③ 성인지적 실태조사와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구축, ④ 분야별 정책의 성평등 효과 평가지표 개발, ⑤ 후기 청년기(30-34세)의 성별 격차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 ⑥ 디지털 기술 접근성에서 성별 격차의 해소, ⑦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균형적 접근, ⑧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청년 참여의 질적 개

선, ⑨ 모든 영역에서 젠더 폭력에 대한 예방과 안전 정책의 확대, ⑩ 특정성별영향평가 공동협력사업 실시, ⑪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및 성인지적 정책 담당자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표 1-4]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김영미(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2030 청년세대들이 자신들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 청년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인식과 태도의 균열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태도의 개념과 영향요인</li> <li>- 청년세대의 복지태도와 영향요인</li> </ul> </li> <li>2차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의 47지 하위원 중 청년지원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문제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와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li> <li>따라서 향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을 동일한 이해문제를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일률적인 정책설계를 해서는 안되며,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설계가 필요함</li> </ul>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 젠더 관점의 고찰 김수아(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각자 해소의 쟁점에서 주요 격차로 성차별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의 발전과정</li> <li>- 청년정책의 방향성 평가 쟁점</li> </ul> </li> <li>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복지 대상을 분류하는 취약계층의 범주를 구성하면서 수혜 대상으로서 복지영역에서 취약 계층을 분류하고, 일자리와 주거 등의 영역은 보편적 청년 주체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상을 구성하였음. 이러한 정책 대상 설정을 통해 청년 여성 주체의 필요나 요구가 정책에 부차게 되었음</li> <li>청년정책을 연령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서비스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자 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해야 함</li> </ul>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신경아 외(2021)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적 관점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순조로운 성인기 이행 과정을 돕고 이행기 전후(前後) 나타나는 성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쳐 성평등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인터뷰 조사(FGI, 개별면접)</li> <li>정책의 비전과 방향 및 3대 원칙에 대한 젠더 분석, 5대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서 성별 요구도와 성별 형평성을 분석한 후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과 정책 개선 방향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차이를 고려한 새로운 '청년' 개념의 구성과 정책 설계</li> <li>다양한 청년 취주요소를 고려한 실제 파급과 정책 개발</li> <li>성인지적 실태조사와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구축</li> <li>분야별 정책의 성평등 효과 평가표 개발</li> <li>후기 청년기(30-34세)의 성별 격차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li> <li>디지털 기술 접근성에서 성별 격차의 해소</li> <li>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균형적 접근</li> <li>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청년 참여의 질적 개선</li> <li>모든 영역에서 젠더 폭력에 대한 예방과 안전 정책의 확대</li> <li>특정성별영향평가 공동협력사업 실시</li> <li>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및 성인지적 정책 담당자 지정</li> </ul>

## ■ 선행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의 주요 시사점)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청년정책의 여러 분야 중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주거, 안전·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청년세대에게 가장 큰 관심사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책의 성별격차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은 일자리 정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안전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자리의 질에 따라 임금수준 차이를 불러오고, 이러한 임금수준 차이는 좋은 주거환경과 그렇지 못한 주거환경을 나누게 되고, 이는 다시 청년여성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조적으로 청년여성이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남성에 비해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은 젠더관점에서 입각하여 성별, 학력수준, 일자리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성별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용형태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이러한 차이를 메우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거 관련 정책은 청년의 성별, 생애주기별, 부모 동거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제 특성이 매우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 주거의 의미는 단순한 주거를 위한 공간을 넘어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여성 대부분은 주거는 '안전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생애주기와 관련해서는 청년 1인가구, 부모 동거 가구, 부부가구 등에 따라 주거정책의 욕구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청년들의 성별과 생애주기 따른 질적 측면에서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의 안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청년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청년 시기에 나타나는 데이트와 관련한 폭력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데이트폭력

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안전 정책 설계 시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청년정책은 젠더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년 남성을 보편적 주체로 기준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에 있어서 같은 청년세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 청년 개인과 그들이 속한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정책욕구와 인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향후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청년들을 동일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진 일률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이질적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설계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 지금까지의 전라북도의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전체 집단으로 접근하여 해소하고자 했다. 청년집단 내 이질성 또한, 연령, 지역(시군), 성별을 단순 구분에 따른 실태 파악만으로 그쳤고, 생애주기 단계별 단순 연령 구분(취업 전과 후, 결혼 전과 후)에 초점 맞춰 추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애주기단계별 청년층의 문제와 정책적 수요는 성별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책 수혜자의 특정 성별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실태와 상황은 상이하게 치우쳐 있는 경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전라북도 청년정책이 형성 단계에서 확장 단계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면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진단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은 지금의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양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 등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가 최근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청년의 성별 요구도 분석, 정책모니터링, 그리고 심층면접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전북 청년정책의 젠더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시도들은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 청년인구 중 타 시도로의 유출이 보다 큰 청년 여성이 전북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여성들의 정책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청년정



---

책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 전략 도구를 연구방법으로 통합하고,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전라북도 청년정책 평가 및 청년여성들의 목소리 등을 동시에 반영하였다는 점도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한편, 전북지역 거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반영하고자 성별, 연령대별, 부모동거유무, 취업유무와 종사상지위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단과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를 섭외하고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섭외 및 모집의 어려움으로 관련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모니터링단 운영과 심층 면접이 이행되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023년의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총 94건이나 본 연구의 연구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5개 분야 중 3개 분야의 핵심과제 2개씩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 하였고, 무엇보다 사업별 성별 분리 통계가 전혀 생성되어 있지 않아 성별영향평가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양식을 모두 소화시키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북지역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와 청년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성별이란 가장 큰 이질성을 검토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모니터링이란 청년 당사자 참여형 연구 방법을 결합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으로 환류하고자 한 연구 체계와 연구 결과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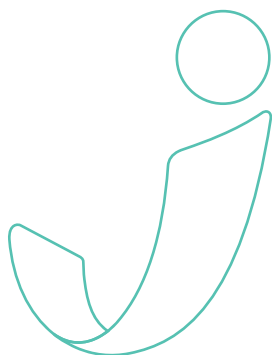




## 제 2 장

# 성인지적 관점과 청년정책의 이론적 논의

1. 성인지적 관점과 성인지 정책의 이해
2. 청년 개념 및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
3.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이슈





---

## 제 2 장 성인지적 관점과 청년정책의 이론적 논의

### 1. 성인지적 관점과 성인지 정책의 이해

---

#### 가. 성인지적 관점의 개념

정책연구에서 사용되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 대한 인식과 움직임은 Scott(1986)이 규정한 젠더(gender, 사회적 성)의 개념화로 논의가 증폭되어 여성 시각에서 역사와 사회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Scott(1986)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화 된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전통적 성 개념에서 성차에 기인한 사회적 규칙과 역사·문화적 범주로서의 집단화된 성, 즉 젠더의 구조를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배은경, 2016). 여기서 젠더란 사회적 범주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코 그것 하나만이 독자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젠더에 의해 규정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계급, 인종, 국적,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절선 속에서 집단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구성(배은경, 2016)해 나간다. 이러한 젠더 개념이 도입된 이후 여성정책의 수립과 정책 수행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며 관련 정책은 젠더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억압, 권력의 쏠림 등을 바로 잡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았다(배은경, 2016).

이에 젠더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이자 성인지적 관점이란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단편적으로 나누고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기계적 평등을 따지는 일차원성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중층적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젠더를 둘러싼 구조적·제도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젠더와 성의 교차성 패러다임의 관점을 의미하고 있다(이재경, 김경희, 2012). 즉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이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개념을 여성과 남성 간의 사회적 차별, 경험, 이해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성별에 기반 한 지위와 권력의 차이에 중점을 두며,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분리 및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관점이다(강인순, 2005; 홍선영, 이옥경, 황인주, 2014).

---

성인지적 관점은 성별 간의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여성과 남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별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시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요소들을 고려하듯이 젠더를 정책의 중요한 준거로 설정하여 정책의 효율성·효과성·형평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살펴본다는 것은 기존의 청년정책인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모두의 경험과 이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이들 간의 성별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기존의 청년정책을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성인지 정책 추진 및 실현을 위한 수단

성인지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을 모든 정책 과정과 정책구조에 반영하여 정책의 성형평성을 높이고 남녀관계에서 성평등의 변화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추진 전략으로 성주류화가 등장했다(장미현, 2013).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주류화 전략은 1995년 UN의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관련 원칙과 지침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장미현, 2013).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성불평등이 유지·재생산되는 방식을 인식·개선하고 젠더를 주류화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이재경, 김경희, 2012).

우리나라도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및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수립 등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고, 정책의 전 과정과 정책구조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 성주류화 전략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인지 통계 등 다양한 도구를 제도화하는 틀 마련하였다. 이후 「양성평등기본법」제3장(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에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성인지 통계·성인지 교육·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정책 기획, 예

산 편성·집행 등 수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고 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꾀하였다.

먼저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성별영향평가이다(여성가족부, 2023).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간의 요구와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정책 과정 내에서 분석 및 평가하여 성평등한 정책으로 개선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서로 다른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성을 기준으로 정책의 가치와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198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하여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여성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성주류화가 채택되었고,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성별영향평가를 시작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정책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성별격차를 체험하는 사업과 성평등이 취약한 정책 등을 개선 및 권고하고자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추진되고 있다(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내용).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성별 영향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효율적이며 성평등한 재원으로 배분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장미현, 2013). 성인지예산은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제16조 5항과 제26조(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제57조(성인지결산서 작성)를 넣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이 도입된 지 약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사업 주무 부처의 관심 정도에 따라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효과 혹은 성과관리의 미흡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 통계<sup>1)</sup>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추진 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 홈페이지(<https://gsis.kwdi.re.kr/kr/introduce/introduce.html>) 참고

---

다. 성인지 통계란 개별 차원의 통계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통계로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구축한 통계자료다(장미현, 2013). 성인지 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현상을 통계적으로 남녀간 차이를 보여주고 이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성별 구분 통계 혹은 성인지 통계가 많은 분야와 영역에서 생성·구축되지 않아 정책 참여와 정책 수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장미현, 2013)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인지 통계는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성평등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진단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4장의 2절에 해당)와 성인지 통계(3장의 2절에 해당)를 중점 활용하고자 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성주류화 정책 도구들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모든 분야에 매뉴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여성가족부의 제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 양식을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 2. 청년 개념 및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

### 가. 청년의 개념

청년의 권리 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대상의 정책을 청년정책이라고 할 때, 청년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란 20대 연령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연령으로 청년의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청년의 연령대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였으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생애주기 전반이 늘어나면서 현 사회에서는 20대에서 30대 정도의 나이대에 속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 인간발달단계 이론 중 Erickson(1963)은 발달단계(8단계) 중 여섯 번째 단계인 청년기(성인전기)를 약 20~40세로 보았고, 청년기의 주요 과업으로 청소년기에 확인된 자아정체감을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일과 직업·배우자·사회적 윤리·정치 등 중



---

요한 선택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 및 이 시기에 친밀한 관계에 이르는 과정을 회피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고립감이 형성되는 단계로 분류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된 청년의 사전적 개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이행기·전환기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유민상, 2023; 김문길, 2016)와 학자(Schizzerotte & Lucchini, 2004) 일부도 청년을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 성인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인 성인 이행기(Emerging Adulthood)로 보고 있다. 유민상(2023)은 청년을 성인 이행기로 보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을 받으며 안정적 독립을 위해 탐색하는 시기로 나타냈고, Schizzerotte & Lucchini(2004)는 청년을 학업을 완료하고, 일자리를 찾고, 부모의 집을 떠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이라 정의하였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김문길(2023)은 청년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성인으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자리 이행(학교에서 일자리로), 주거 이행(부모의 집에서 독립), 가족 이행(원가족에서 나의 가족으로)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청년이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발전하여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 일정한 생애기간이라고 할 때, 원가족과 부모에게 의존만 해왔던 삶의 방식에서 정신적·물질적·경제적으로 독립해 나가는 시기이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 빈곤한 청년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세계적 경제 위기 및 저성장 추세로 청년들에게 닥친 문제적 위기 상황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학교 졸업 후 취업과 결혼 및 출산·양육으로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생애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전환되기에 어려움이 많아져 취업 준비가 장기화 되고,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비혼으로 전환하게 하며 혹은 결혼하더라도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등 전통적인 생애과정의 과업들을 수행하기에 사회경제적 및 구조적 여건이 너무 불안정해졌고 청년의 생애 과업도 흔들리며 자립 기간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Beck & Beck-Germesheim, 2002). 그리고 청년이란 성인 이행기·전환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청년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대 중·후반 취업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쌓으며 결혼을 시작하는 시기라면,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보다 일찍 취업으로 이행하고 30대가 되면 결혼과 출산에 집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청년이란 성인 이행 과정 내에서도 남녀 성별에 따른 경험 차이와 격차가 이후의 생애과정과 단계에 초래할 수 있는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상과 같이 청년을 생물학적 연령의 특정 범주로 규정하더라도 청년 각 개인마다 처한 사회구조적 환경과 교육·취업·주거독립·결혼 등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점 및 상황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청년을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나 성인으로의 이행기·전환기로 보는 관점으로 청년의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정책의 정책대상인 청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학문적 측면 및 사회적 연령 등 다각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 되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별 청년의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규정해야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나. 청년정책의 개념 및 분야

먼저 청년정책이 형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IMF 외환 위기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면서 청년의 실업과 고용 관련 이슈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청년 대상의 관련 법과 정책·사업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청년정책은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을 거쳐 오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다양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년)을 제정하였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청년 실업률이 보다 증가하여 정책 수혜자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년 문제는 취업과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와 문화,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시기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등 고용정책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률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률 70%를 목표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년)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9년)으로 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지원 및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와 중소기업의 취업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시키고자 노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기업·정규직의 경직성 문제와 근로의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청년기본법(2020.2)과 시행령(2020.8)을 제정하여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발전을 의무화시켜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 할 수 있으며, 그간 청년정책이 고용 문제와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 왔다면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자리 이외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담은 보편적·포괄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년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서울시는 청년기본조례를 2015년 1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부채경감, 주거 안정,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과 추진체계(전담부서,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네트워크 등)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심화하여 실질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형 청년보장제를 통해 ‘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에 대한 각각의 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활력 공간 조성과 지원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대구, 광주, 경기, 전남 등도 2015년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기존 중앙정부의 한계를 느낀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 당사자들의 현실을 직접 들여다보고 청년 문제에 대한 상대적인 위기감과 문제의식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다양한 내용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보면,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정책이란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며, 청년 대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제3조)으로 정의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년 발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제3조)을 의미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의 권리보호 확대, 정책 결정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분야의 청년정책 수립은 청년에 대한 수혜적 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의 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청년 일자리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를 받아들여 주거, 복지, 문화 영역 등 다층적인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2020년 12월에 수립하고 추진하기에 이른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은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증가와 청년고용보험 가입, 청년 재직자의 지원, 취약역량지원 등 일자리 발굴과 창출에 그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주거분야는 청년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기조로 도심 내 청년 특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청년 특화 주택의 특성을 강조한 반면, 취약 주거지 지원을 위한 노후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불법건축물 감독과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셋째,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 미진학 청년의 교육비 지원, 지역 청년 인재 지원을 통해 교육의 영역 차별화 완화, 디지털 신산업 외 기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는 금융 영역 복지 정책으로 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및 자산형성지원제도 지원, 부채경감 지원 및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고, 청년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 적응을 위한 정책, 청년 한부모 지원 정책,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참여·권리 분야는 정부의 위원회 중 청년참여위원회 30% 이상 구성 목표로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할당하고 의제발굴을 위해 온라인 패널 구성, 공론화 속의 모델 도입, 청년 거버넌스 부처 지자체 확대,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25)의 수정안이 2023년 3월에 발표되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청년 삶의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자리 분야에서는 재학생·구직단념 청년(NEET)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민간·공공분야 청년인턴 등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조성(공공부문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 설치,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주택을 대폭 확대(27.3만 → 58만)하고,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등이 추가되었다. 셋째, 교육 분야에서는 첨단분야(디지털, 향

공우주,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환경·에너지)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하고, 지역 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 더불어 기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단기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하였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취약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공공 임대 우선공급과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맞춤형 가족 돌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 지원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분야에서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청년 비율을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인프라(중앙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청년지원센터 지정,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연계 및 정보 통합 제공, 청년친화도시 지정, 청년DB 내실화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존재한다. 먼저 취약계층 청년을 분류하여 복지 대상으로만 설정했다는 점,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을 남성 기준의 보편적 주체로만 설정하여 여성의 문제를 청년과 분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주거, 복지 등에서의 청년여성의 정책 수요를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 청년정책 수요에서 성별 분리 통계 및 변화 양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정책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여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기초

분야	기본계획	→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기초
일자리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 정책	→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주거	임대주택 중심	→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 확대, 주거 사다리 복원
교육	인재양성 체계 공급자 중심	→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복지·문화	저소득 중심 지원	→	소외되는 청년 없는 두려운 복지
참여·권리	형식적 참여 보장	→	권한 부여 등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자료 : 중앙행정기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다. 청년정책의 청년 연령 규정에 대한 논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한 청년의 실업·고용 등 일자리 중심 대응 정책에서 청년의 자질향상·사회 진입·삶의 질 제고 등 포괄적 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정책으로 전환한 지 13년째가 되어가고 있으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는 중앙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연령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및 지역간 불평등 사례들이 야기되고 있다.

2020년에 제정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15~34세,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29세(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고용 시 34세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 이하, 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15~34세까지 등 청년 연령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의 청년 연령에 대한 규정과 범위 및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현실에 부합한 청년 연령의 통일된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청년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청년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정책 대상인 청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 대상의 불분명함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정해 놓은 청년이라는 연령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과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해외 국가별 청년정책의 청년 정책대상 법률 상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14세부터 2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 현재 34세 혹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표 2-2] 국내·외 청년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의 연령 범위

법령 명칭		청년 연령의 범위
국무 조정실	청년기본법(2020.1)	(제3조) 청년의 정의 : 9세 이상 34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 :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 겪는 청년
고용 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04.3)	(시행령 제2조) 청년미취업자 청년 나이 : 15세 ~ 29세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미취업자 고용 시 15세~34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5 ~ 34세
	고용부 청년 구직수당	18 ~ 34세
농림부, 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2020. 5)	청년 농어업인 : 40세 미만인 사람
통계청	청년 실업률	15~29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15 ~ 34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전통시장법	청년상인 : 39세 이하의 사람
국외 청년 정책 연령 규정	일본	18 ~ 30세
	중국	14 ~ 28세
	유럽연합(EU)청년보장제	15 ~ 24세
	미국	16 ~ 24세
	캐나다	16 ~ 24세

자료 : 중앙행정기관,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시도별 청년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정책대상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을 보면, 각각 18, 19세와 39, 45세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하면서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하였고, 전라남도의 경우 2015년 7월 조례 제정 당시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였으나 2023년 4월 이후로는 6세 연장한 4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별 법률로 규정한 청년 연령 범위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의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2월 기준, 17개 시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9~39세로 정한 곳은 전체의 64.78%(11개)로 나타났으며, 18~39세로 정한 곳은 29.4%로 전복을 포함한 5개이었고, 나머지 1개 곳인 전남은 18~45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 연령은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14개 시군지역의 청년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 정책대상의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은 각각 18, 19세와 39세, 45세, 49세로 보다 더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전국 17개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연령 현황

청년 범위의 연령		17개 시도(담당부서)
하한	상한	
18	39	부산(청년희망정책과), 인천(청년정책담당관), 대전(복지국 청년정책과), 강원(경제국일자리과), <b>전북(청년정책과)</b>
	45	전남(인구청년정책관)
19	39	서울(미래청년기획단), 대구(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광주(청년정책관), 울산(인구청년담당관), 세종(청년정책담당관), 경기(청년기획과), 충북(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남(청년정책관), 경북(지방시대국 청년정책과), 경남(여성가족국 청년정책과), 제주(청년정책담당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3. 12. 4 기준

전북지역 중에서도 군 단위 지역의 청년 연령 범위는 18세 혹은 19세부터 45세와 4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시 단위 지역의 청년 연령 범위는 18세 혹은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되어 농촌지역의 청년 정책대상 범위 연령이 40대 중·후반까지로 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40대(45세 혹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초단체는 총 9개 지역(45세 규정 지역 6곳, 49세 규정 지역 3곳)으로 나타났다.

[표 2-4] 전북 14개 시군별 청년 관련 조례의 청년 연령 현황

청년 범위의 연령		전북 14개 시군(담당부서)
하한	상한	
18	39	군산(일자리정책과), 김제(경제진흥과), 익산(기업일자리과), 전주(청년정책과)
	45	고창군(신활력경제정책관), 부안군(지역경제과), 완주군(지역활력과), 임실군(경제교통과), 정읍(일자리정책과), 진안군(농촌활력과)
	49	무주군(부군수 기획실), 순창군(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장수군(민생경제과)
19	39	남원(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3. 12. 4 기준



[표 2-5] 40대를 청년으로 조례상 규정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현황

구분	지자체 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명
서울	1곳(25)	도봉구
대구	1곳(9)	군위군
인천	1곳(10)	옹진군
광주	1곳(5)	남구
경기	1곳(31)	포천시
강원	2곳(18)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충북	2곳(11)	괴산군, 담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2곳(15)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9곳(14)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정읍시
전남	22곳(2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3곳(22)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0곳(18)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26개	65곳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약 28.76% 차지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3. 12. 4 기준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청년 관련 조례에서 청년을 40대(45세, 49세 등)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 12개 광역 시도, 65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나타났다. 청년의 연령 범주를 40대(45세 혹은 49세)까지로 확대하여 규정한 지역은 광역 시 보다는 광역 도의 군 단위 인구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본청과 22개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청년의 연령 범위를 40대(45세 혹은 4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 시에서도 서울 도봉구(45세)와 광주광역시 남구(45세)가 청년의 연령을 40대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청년의 연령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청년의 상한 연령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저출산·고

---

령화 현상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의 각 부처별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 정부와 여당이 청년의 법적 연령 상한 기준을 34세에서 최대 3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예를 냈다. 즉 현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연령(19~34세)을 1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대 37세~39세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 도래와 함께 인구구조의 급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의미) 또한 2000년 31.8세, 2010년 37.9세, 2020년 43.7세, 2023년 45.6세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이 매년 증가하고, 남녀 초혼 연령도 2022년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10년 전 대비 남성 1.6세, 여성 1.9세가 증가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한 '사실상의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란 연령기준을 청년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의 각 부처별 법과 사업 및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연령도 하나로 통일하고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년의 연령을 40대 연령대까지 상향 조정하여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자 범위를 넓혀 추진하게 되면서,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청년정책이 확장되면서 각 지역마다의 청년 정책대상자의 연령대가 다양해졌고, 청년 연령 범위 내부에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즉 청년 대상의 연령대 범위가 넓게 퍼져 있어 같은 청년이란 집단 내에서도 가치관, 사회 경험, 여건과 문화, 성별, 사회적 위치 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당초 청년정책을 도입하려고 했던 배경과 목적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지고, 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단순히 청년정책의 지원 연령만을 높이는 것으로 청년들이 성인 이행기·전환기에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년 정책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 보호를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분분한 상황이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청년 연령의 상향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청년 당사자들은 청년 정책대상의 연령 범위를 상향 조정만 하지 말고 청년의 어려움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 3.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이슈

UN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gender)를 공동의제로 채택한 후, 성주류화는 빠르게 확산되어(원숙연, 2009), 정부의 모든 정책 과정과 정책구조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의 성형평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주류화를 통합시켜 계획 및 수립·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년정책은 외환 위기로 인한 실업 사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위기적 상황(3포세대, 니트족, 캥거루족 등)과 청년의 실업·고용 관련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청년을 정책적 대상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청년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청년기본조례」(2020)를 근거로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담은 보편적·포괄적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사업수와 예산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 당사자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대처에 치중되어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 내부에서 발생 되는 성별간 사회적 차별과 경험, 성별에 기반한 지위와 권력·고정관념 등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과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현재 추진되는 청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과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 있다.

전북도 지역 청년들의 타 시도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해 청년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적·예산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 여성의 타 시도로의 유출이 많고, 청년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의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청년정책의 정책적 체감도 제고와 지자체별 청년 목소리를 담고 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책에 성주류화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까지는 주로 일자리 영역에 몰려있다. 그 이유는 청년의 타 시도로의 이동 사유 그 첫 번째가 '직업'이

---

고, 취업 이후 주거·결혼·자녀 등의 생애단계로 이어지고 있어서 청년정책 중 일자리 정책 분야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청년은 지역, 혼인과 고용 형태, 학력과 소득수준 등 교차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차별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성별과 성적 정체성이 누락된 상태로 정책 대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 진입단계부터 청년여성 상당수가 비정규직 혹은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청년정책 사업과 전달체계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인적자원 특성은 동일 해도 성별 차이에 영향을 받아 저임금과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특히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는 저임금과 경력 단절 등의 취약한 상황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청년정책은 성별 특성에 따라 복잡한 이행 궤적을 보인다. 개별 청년이 가진 특성과 처한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성별 분리에 따른 서로 다른 직업 역량 경로들에 대한 개입, 채용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개입, 시험에 의한 공정성이 아닌 평등의 원리 실현을 위한 취업 정책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청년정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운영 지침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필요하고, 세부사업 심사 기준으로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한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 실시, 만족도 도출,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사업 결과에 대한 성별 통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자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청년여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직장 내에서 남성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청년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 관련 분야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 공간의 이용, 주거 입지·환경은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특히 안전 체감도에 있어서 성별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청년 대상의 주거 관련 정책 지원 시 주택·주거 공간과 환경 또한 성 형평성 차원에서 성평등하게 계획되어야 하고, 특정 성에 차별적 경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평한 환경과 입지를 제공하여야 한다(장미현, 2013).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입주 자격조건이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금액이하 소득(전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100%이하) 수준이 되어야 하나, 이 또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이 고려되

---

지 않고 있다(김지현, 임희정, 2020). 또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남성(27.5%) 보다 여성(35.4%)이 더 높으며, 범죄 발생 불안감도 여성 57.0%, 남성 44.5%로 여성이 보다 높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9.7). 그리고, 주거침입 강간과 강간 미수 등 주거 침입을 통한 성범죄도 여성 중심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어 청년 1인 여성가구는 소득이 낮음에도 주거비 지출이 남성보다 높고(박미선, 조윤지, 2020) 주거비 과부담 비율도 여성가구(39.0%)가 남성가구(24.8%)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미선, 조윤지, 2020). 이에 성별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주거 취약 상황이 상이하기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주거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등 성인지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 예비부부, 6세 이하 한부모)를 특정하여 공급하며, 청년이 주거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모(부)와 입양으로 형성된 가구,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등 가족 유형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부), 입양가족, 1~2인가구는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높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주거비용 부담도 높기에 이런 다양한 가족 대상의 주거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즉 청년정책의 주거분야 정책은 수혜자들의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및 사회·정치·경제적 맥락 등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고, 주거정책 지원 전에 청년이 주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수요에 대한 정보와 잠재수요자들의 성별, 집단별 요구 파악이 선제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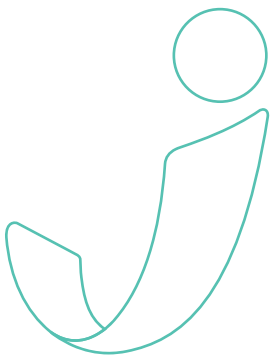




## 제 3장

### 전북 청년정책 현황 및 성별 요구도 분석

1. 전북 청년정책 현황 분석
2. 전북 청년 현황과 성별 요구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 제3장 전북 청년정책 현황 및 성별 요구도 분석

## 1. 전북 청년정책 현황 분석

### 가.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추진 과정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변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표 3-1]과 같다. 전라북도는 2017년 4월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전북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2013년 10월에 제정되어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다차원적인 대응 대책을 수립·수행하였다. 즉 전라북도 청년정책은 민선 5기(2011.10~2014.6) 후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청년 관련 정책대상의 지원정책은 부재하였고,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은 존재해 왔으나 청년정책의 범위가 20대 정규학교 졸업 이후 취업과 고용 지원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전, 2017년 4월에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제1차 전라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전(「살맛나는 전북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발표하였다. 2023년에는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청년」이란 비전을 가지고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추진 과정을 보면, 2017년 1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4개 시군 청년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2017년 9월 전북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위원회(당연직 9인, 위촉직 13인, 2년임기)를 구성하고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청년정책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인 ‘전북청년허브센터’가 개소되었으며 12월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책임관이 지정될 수 있게 되어 일자리경제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1년 7월 청년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전담조직을 대도약청년과 청년정책팀(4인)과 청년활동팀(3인)으로 그 규모와 인력을 확대하였으며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2022년 10월 대도약청년과 청년정책팀과 청년활동팀을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5인), 청

년활동팀(3인)으로 조직 개편하여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은 2018년 80건의 사업, 예산 144,136백만원에서 2023년 94건의 사업, 예산 316,494백만원으로 약 1.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는 정책 대상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 및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다차원적인 여건과 생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의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매년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서별 청년 대상의 관련 사업을 양적 확대하여 취합 및 총괄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지역 내 청년의 다차원적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만족도가 높은 실효성 등을 고려한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조례·기본계획, 행정체계(전담부서), 집행체계 변천 과정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조례 · 기본 계획	• 전북청년 일자리 창 출촉진 조 례 (10월)		• 전북청년기본조 례(4월)  • 제1차전북청년기 본계획수립 (9월)	• 전북청년농업 인 육성 및 지원조례(10 월)			• 전북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10월)  • 제2차전북청년기 본계획수립 (12월)	• 전북 조소득계층과 청 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 원 조례('23.03. 개정)  • 전북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관련 조례 ( '23.06)  • 전북 가족돌봄청소년·청 년 지원 조례
행정 체계		• 팀 단위 조직 구성(7월) • 청년정책 전문 관 직위 지정(6 급 1명)	• 청년정책 TF팀 운영 (5개분야 45팀)		•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신설(12월) ※ 일자리경제정 책관 청년정책팀 (5)	• 청년정책전담조직 확대 개편(7월) ※ 대도약청년과 청 년정책(4), 청년활 동(3)	• 전담조직 개편 (10월) ※ 청년 정책과, 청년정책 (5), 청년활동(3) 인구정책팀 신설 추가	
집행 체계	• 전라북도 청년정 책포럼단 운영 (16년 ~) • 시군청년협의체 구성	• 전라북도 '청년 센터' 설치 운영 (9월)			•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시(5월)  • 지역소통공간 '청 년마루'	• 청년참여위원회 운 영	• 청년공동체 활성 화	

## 나. 법·제도 측면의 변천 과정

###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2017년 4월)

전라북도는 2017년 4월 도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 보장,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역량 강화, 자립 기반 형성 등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제정 후 약 5년간 네 차례에 걸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해 오고 있다.

조례 항목과 내용을 보면, ‘청년’ 정의는 전북 도내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정책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청년시설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년 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의미한다.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 함에 있어 해당 조례 규정과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하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정책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정책포럼단, 청년시설·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 전북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제5조(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와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근거, 5년마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9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18~’22)하여 5년간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였고, 2023년 제2차 기본계획(‘23~’27)을 수립·발표 하였다.

전라북도는 2017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6여 년간 청년정책의 예산과 사업은 크게 확대되었다. 2017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된 2018년 청년정책은 80개의 사업, 총예산 1,441억 원이었으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한 2023년 청년정책은 94개의 사업, 총예산 3,164억 원으로 사업은 14개, 예산 규모는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청년정책 전체 예산 중 도비 예산은 532,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263억 원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국비와 도비 예산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전체 예산의 국비 비율은 29.1%, 도비 비율은 18.7%나,

2023년 청년정책 전체 예산 중 국비 비율은 31.5%로 2018년 대비 2.4%p 증가 한 반면, 도비 비율은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전북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1차('18~'22)와 제2차('23~'27)의 핵심 과제

분야	제1차('18~'22)	제2차('23~'27)
일자리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디지털 스위치온 지원사업 청년친화 일자리매칭 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	대학생 직무 인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전북 미래산업 청년 기술 창업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주거	공공임대 주택 공급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도시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 빈집 플랫폼 구축	공공임대 주택 공급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교육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지원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 ICT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지원,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주력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
복지·문화	전북형 청년수당지원 청년 저축 계좌사업 청년건강검진 지원 가능성 게임산업육성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문화예술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권리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조성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청년공동체활성화 지원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전북청년도약프로젝트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자료 : 전라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 제1차와 제2차 자료

## ■ 분야별 청년정책 현황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사업 건수와 예산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 및 증가하고 있고, 청년정책 5개 분야 중 일자리 분야의 사업과 예산 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복지·

문화,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5대 분야별 사업과 예산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전체에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에는 55.0%였으나 2023년에는 38.3%로 그 비율이 -16.7% 감소하였으나 복지·문화 분야는 2018년 11.2%에서 2023년에는 2018년 대비 14.3%p가 증가한 25.5%로 나타나 청년정책의 복지·문화 사업과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권리분야 또한 2018년 6개 사업과 전체 예산의 차지하는 비율이 7.5%였으나 2023년에는 12개 사업, 전체 예산의 12.5%를 차지하는 등 지속 사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전북 청년정책시행계획('18~'23)의 분야별 사업과 예산 현황

년도	분야별 사업건수	예산	비고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36건, • 주거 6건, • 교육 16건</li> <li>• 복지·문화 24건, • 참여·권리 12건 ※ 합 94건</li> </ul>	예산 316,494 백만원 (국비 99,577, 도비 53,220, 시군비 53,997)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38건, • 주거 5건, • 교육 12건</li> <li>• 복지·문화 21건, • 참여·권리 10건 ※ 합 86건</li> </ul>	예산 252,787백만원 (국비 83,958, 도비 40,321, 시군비 38,069)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42건, • 주거 5건, • 교육 17건</li> <li>• 복지·문화 33건, • 참여·권리 6건 ※ 합 103건</li> </ul>	예산 277,503백만원 (국비 83,291, 도비 44,122, 시군비 35,594)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고용 34건, • 창업 33건 • 문화여가 14건</li> <li>• 복지·삶의질 32건, • 거버넌스 6건 ※ 합 119건</li> </ul>	예산 247,236백만원 (국비 92,811, 도비 55,417, 시군비 38,817)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고용 44건, • 창업 13건 • 문화여가 13건</li> <li>• 복지·삶의질 14건, • 거버넌스 5건 ※ 합 89건</li> </ul>	예산 192,271백만원 (국비 48,582, 도비 30,017, 시군비 16,014)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고용 44건, • 창업 11건 • 문화여가 10건</li> <li>• 복지·삶의질 9건, • 거버넌스 6건 ※ 합 80건</li> </ul>	예산 144,136백만원 (국비 41,967, 도비 26,916, 시군비 1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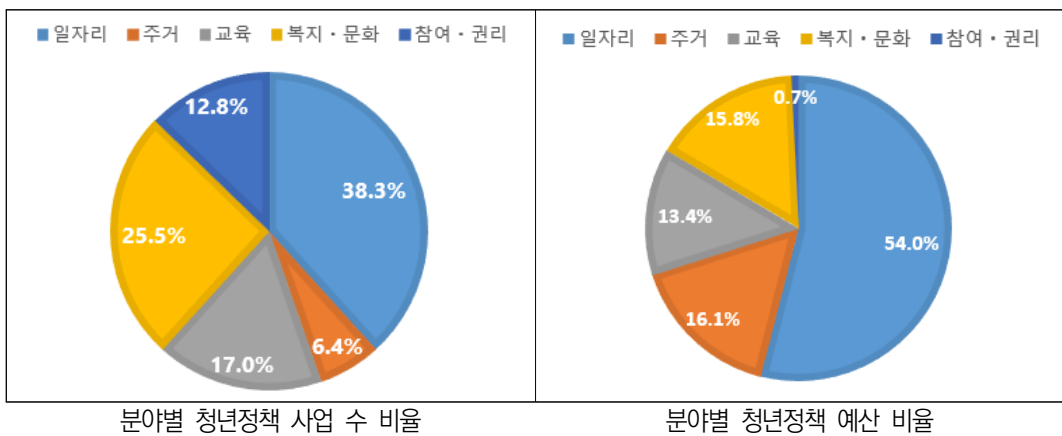
자료 : 전라북도 청년정책시행계획 각 년도(2018-2023)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94개 사업 중 일자리 분야 36개, 복지·문화 분야 16개, 참여·권리 분야 12개였고, 주거 분야가 6개 사업으로 사업 수가 가장 적었다. 분야별 예산 규모를 보면, 참여·권리분야 예산이 2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일자리분야 1,708.71억원, 주거분야 509.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사업 현황과 예산 현황을 살펴

보면, 사업 수는 일자리 분야 사업이 총 36건으로 전체 사업 94건의 38.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청년이 여전히 일자리 및 고용정책의 수요가 높고,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과 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복지 및 문화 분야 사업이 24건으로 전체 사업의 25.5%를 차지하였고, 교육 분야 사업 17.0%(16건), 참여·권리 분야 사업 12.7%(12건)를 차지한 반면, 주거분야 사업이 6.4%(6건)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예산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정책 전체 예산 중 일자리 분야가 54.0%로 가장 많았고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거 분야가 16.1%, 복지·문화가 15.8%, 교육이 13.4%, 참여·권리가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 분야의 경우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가 5대 분야 중 가장 많았고, 주거 분야의 경우는 사업 건수는 가장 적었으나 예산 규모는 일자리 분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는 사업 건수 대비 예산 규모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23년도 예산을 정책 분야별 및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분류하여 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청년정책 전체 예산 중 국비는 31.5%, 도비 16.8%, 시군비 17.2%, 기타 34.7%로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비, 시군비 순이었으며, 도비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비 자체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불과 2.6%(8,157백만원)에 불과했다.

2023년부터 향후 5년간은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질 예정이다. 그 첫 번째 해당 해인 2023년도 전라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11개 실국원, 23개 부서에서 청년정책 5개 분야의 94개 과제(3,165억원)가 추진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 신규사업이 25건 추가(일자리 8, 주거 1, 교육 6, 복지문화 7, 참여·권리 3) 되었고,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라 할 수 있는 청년 생애주기별 세대별 정책 주요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분야별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실화, 청년허브센터 기능 강화,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청년도약프로젝트 및 청년공동체·청년마을·청년소통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 활동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 다. 행정·집행 체계 측면의 변천 과정

### ■ 행정체계 변천 과정

전라북도는 IMF 외환 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 사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청년 고용과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지원을 위한 팀 단위의 정책 담당부서가 2015년 7월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년정책전문관’이란 직위를 행정직 6급으로 1명 지정하여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꾀하려고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전북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더불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TF팀이 5개 분야 4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제1차 청년기본정책수립을 통해 5년간의 종합적인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복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 및 지정하여 일자리경제정책관 내 청년정책팀이 5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크게 확대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청년정책의 확대 발전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대도약청년과 내 2개의 팀(청년정책팀, 청년활동팀)으로 분야특성별로 구성하여 조직 규모와 인력 및 권한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 보다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부합한 청년 정책지원과 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0월에는 민선 8기(2022. 7. 1.~2026. 6. 30) 출범과 함께 청년정책과 전담부

---

서 내에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2개팀(청년정책팀, 청년활동팀)의 조직에 인력 1명 추가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인구정책팀을 추가 신설하여 인구정책, 저출산정책, 청년정책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 행정체계인 전담부서의 행정 조직 규모와 역할 및 기능이 매년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청년정책만의 독립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인구정책·저출산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 ■ 집행체계 변천 과정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 당사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집행체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라북도는 2016년부터 청년정책포럼단 및 시군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 유도과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고, 지역 청년 당사자들의 당면한 현실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17년 9월 전라북도는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라북도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청년센터를 통해 홍보 및 현장에서 직접 정책 추진·전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2020년 5월에는 청년정책을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한 플랫폼인 '전북청년허브센터'를 새롭게 개소하였고, '청년마루' 공간을 신설하여 지역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였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을 전달 및 집행하는 체계가 중요하며, 전달 및 집행체계의 역할과 기능 정도에 따라 전북 청년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의 높낮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의 정책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전북지역 청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해소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영역과 내용 및 깊이가 확대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청년정책을 필요로하는 청년들을 잘 찾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달 및 집행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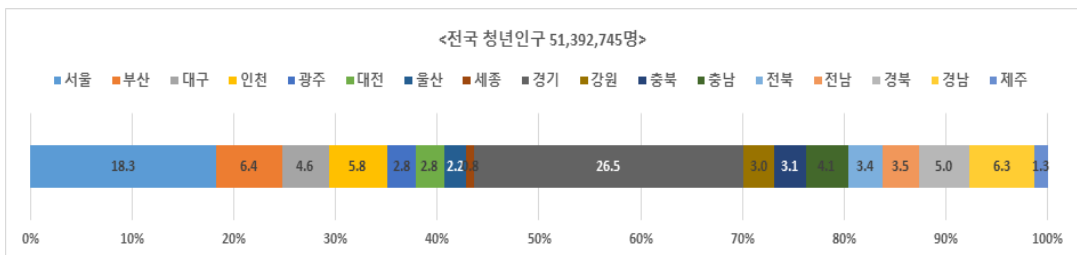
## 2. 전북 청년 현황과 성별 요구도 분석

### 가. 청년인구 관련 현황<sup>2)</sup>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인구 규모 및 연도별 추이

전국 청년인구는 총 13,823,451명으로 총인구의 2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의 52.1%(7,200,537명)는 남성이며, 여성은 47.9%(6,622,914명)를 차지하였다. 전북 청년인구는 총 401,847명으로 총인구의 22.8%를 차지하였으며, 청년인구의 53.1%는 남성, 46.9%는 여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청년인구 51,392,745명의 시도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청년의 26.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18.3%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청년의 절반인 50.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었음. 전북은 전국 청년인구의 3.4%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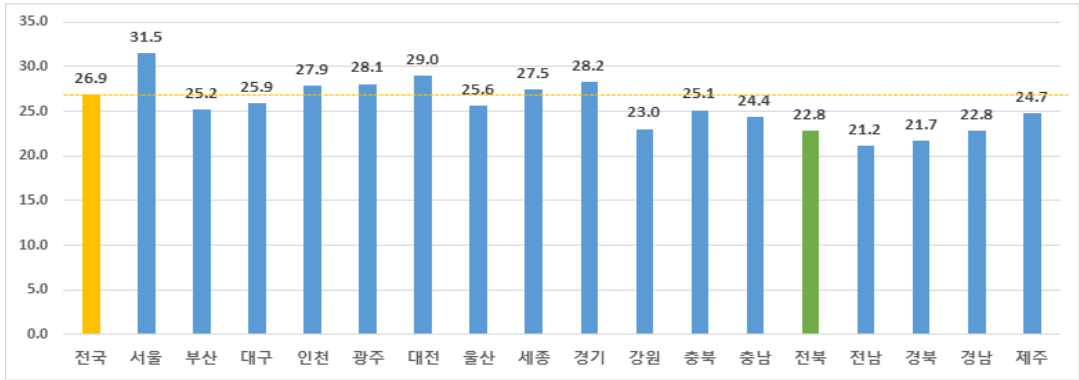


[그림 3-1] 전국 청년인구의 시도별 구성비

한편, 청년인구의 성별 비중을 보면 청년여성 비율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청년여성 비율이 50% 미만 수준을 보였다. 전북 청년여성 비율은 46.9%로 전국평균(47.9%)보다 -1%p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26.9%로 나타났고, 서울 31.5%, 대전 29.0%, 경기 28.2%, 광주 28.1% 순으로 나타남.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특·광역시와 경기도는 평균을 상회하였고, 모든 자치도는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은 청년인구 비율이 22.8%로 자치도 가운데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2) 청년의 연령 범주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조례마다 차이를 보임.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929호, 2021.5.28., 일부 개정].에서 정의한 18세~39세까지로 정의함



[그림 3-2] 전국 시도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구성비

[표 3-4] 전국 시도별 청년인구 현황(2023.6)

구분	총인구	청년인구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비
		계	남성	여성	여성(%)	
전국	51,392,745	13,823,451	7,200,537	6,622,914	47.9	26.9
서울	9,414,093	2,963,908	1,449,672	1,514,236	51.1	31.5
부산	3,306,993	833,840	428,860	404,980	48.6	25.2
대구	2,356,416	610,163	322,944	287,219	47.1	25.9
인천	2,978,749	830,237	431,743	398,494	48.0	27.9
광주	1,424,818	399,921	207,398	192,523	48.1	28.1
대전	1,445,126	418,868	219,844	199,024	47.5	29.0
울산	1,106,015	283,599	156,569	127,030	44.8	25.6
세종	386,126	106,013	52,855	53,158	50.1	27.5
경기	13,618,969	3,846,400	2,011,269	1,835,131	47.7	28.2
강원	1,532,617	352,656	192,330	160,326	45.5	23.0
충북	1,593,931	400,451	219,714	180,737	45.1	25.1
충남	2,126,374	518,158	283,368	234,790	45.3	24.4
<b>전북</b>	<b>1,762,021</b>	<b>401,847</b>	<b>213,327</b>	<b>188,520</b>	<b>46.9</b>	<b>22.8</b>
전남	1,811,554	383,549	207,880	175,669	45.8	21.2
경북	2,588,860	561,211	311,053	250,158	44.6	21.7
경남	3,263,251	745,146	404,714	340,432	45.7	22.8
제주	676,832	167,484	86,997	80,487	48.1	24.7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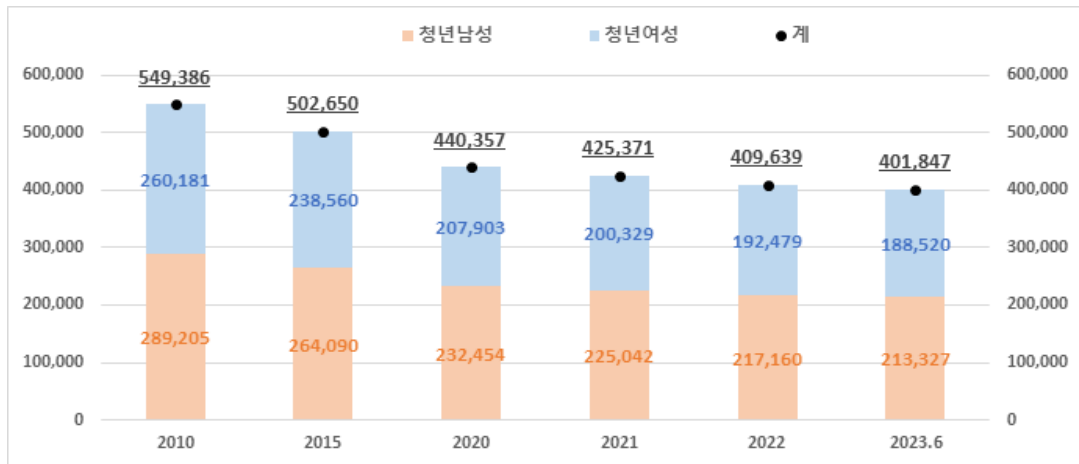
전북의 연도별 청년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청년인구는 549,386명으로 총인구의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구성비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2023년(6월) 22.8%로 2010년 대비 -6.6%p 하락하였다.

[표 3-5] 전라북도 성별 총인구 및 청년인구 추이(2010~2023.6)

구분	총인구			청년 구				청년 인구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여성(%)	
2010	1,868,963	931,481	937,482	549,386	289,205	260,181	47.4	29.4
2015	1,869,711	930,255	939,456	502,650	264,090	238,560	47.5	26.9
2020	1,804,104	896,874	907,230	440,357	232,454	207,903	47.2	24.4
2021	1,786,855	888,994	897,861	425,371	225,042	200,329	47.1	23.8
2022	1,769,607	880,592	889,015	409,639	217,160	192,479	47.0	23.1
2023.6	1,762,021	876,978	885,043	401,847	213,327	188,520	46.9	22.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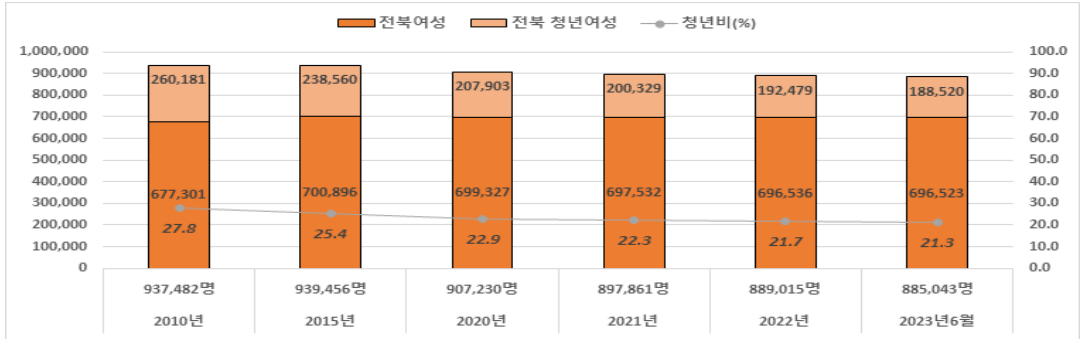
- 전북의 청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남성은 2023년(6월) 기준으로 2010년 대비 75,878명(↓26.2%) 감소하였고, 청년 여성은 71,661명(↓27.5%) 감소함. 청년인구의 감소에 청년 여성의 감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청년인구 중 여성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남



[그림 3-3] 전북 연도별 청년인구 추이

- 2023년(6월) 기준 전북 여성인구 885,043명 중 청년 여성 인구수는 188,520명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함. 이는 전북 여성인구의 27.8%를 차지했던 2010년 청년층 비중 대비 -6.5%p 감소한 것임.

즉, 전북 여성인구의 감소에 청년층의 감소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3-4] 전북 전체 여성인구 대비 청년여성 구성비 추이

[표 3-6] 전라북도 성별 총인구 및 청년인구 추이(2025~2050)

구분	총인구			청년 구			청년 인구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25	1,741,421	869,545	871,876	404,788	220,250	184,538	23.2
2030	1,690,585	844,716	845,869	371,420	202,679	168,741	22.0
2035	1,648,722	824,654	824,068	328,526	179,481	149,045	19.9
2040	1,604,940	802,651	802,289	270,848	148,070	122,778	16.9
2045	1,554,640	776,403	778,237	232,059	126,375	105,684	14.9
2050	1,493,464	745,121	748,343	211,084	114,796	96,288	14.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5~2050)

### ■ 성별에 따른 전북 14개 시군별 청년인구 현황

전북 청년인구의 14개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6월) 기준으로 전주시에 44.4%(178,236명)가 집중되어 있었고, 익산 16%(64,265명), 군산 14.6%(58,641명) 등의 순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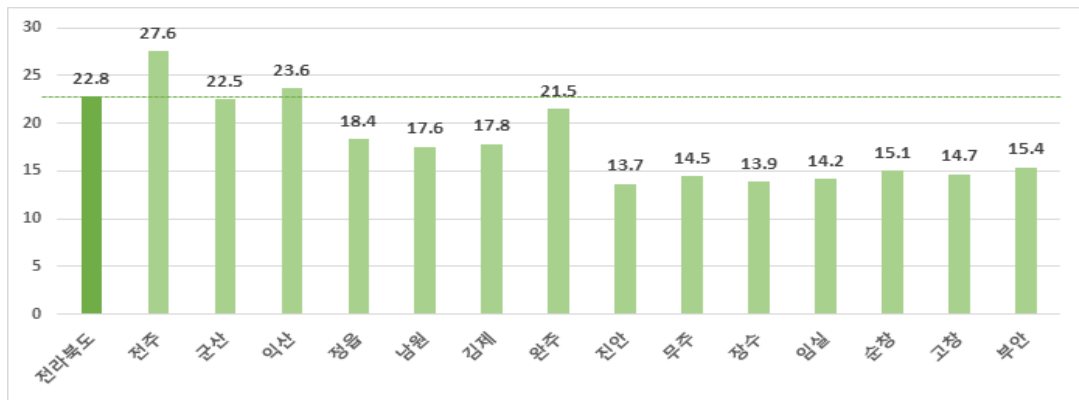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전북 전체 청년인구의 56.6%(227,586명)가 20대 연령층이었고, 43.4%가 30대 연령층이었다. 20대와 30대 모두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집중되는 비슷한 거주지 분포를 보이나, 20대 청년층은 전주>익산>정읍 순이었고, 30대는 전주>군산>익산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전국 시도별 청년 인구 현황(2023.6)

구분	청년		_20대		_30대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전라북도	401,847	100.0	227,586	100.0	174,261	100.0
<b>전주</b>	<b>178,236</b>	<b>44.4</b>	<b>100,639</b>	<b>44.2</b>	<b>77,597</b>	<b>44.5</b>
군산	58,641	14.6	31,982	14.1	26,659	15.3
익산	64,265	16.0	38,190	16.8	26,075	15.0
정읍	19,181	4.8	11,289	5.0	7,892	4.5
남원	13,578	3.4	7,902	3.5	5,676	3.3
김제	14,612	3.6	8,304	3.6	6,308	3.6
완주	20,562	5.1	10,616	4.7	9,946	5.7
진안	3,369	0.8	1,977	0.9	1,392	0.8
무주	3,380	0.8	1,892	0.8	1,488	0.9
장수	2,937	0.7	1,690	0.7	1,247	0.7
임실	3,736	0.9	2,032	0.9	1,704	1.0
순창	4,052	1.0	2,402	1.1	1,650	0.9
고창	7,627	1.9	4,312	1.9	3,315	1.9
부안	7,671	1.9	4,359	1.9	3,312	1.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전북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은 22.8%로 나타난 가운데,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가 27.6%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이 13.9%고 가장 낮았다. 전주시, 익산시 2개 지역만 전북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전북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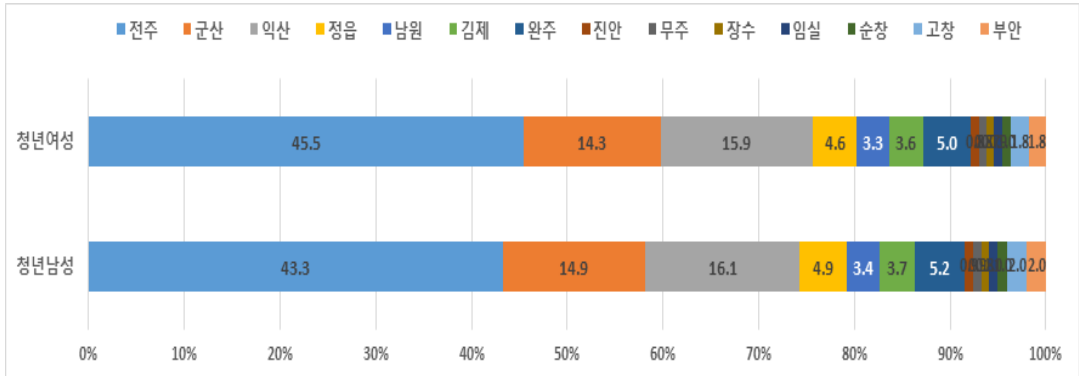
[그림 3-5] 전북 시군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구성비

[표 3-8] 전라북도 시군별\*성별 총인구 및 청년인구(2023.6)

구분	총인구			청년 인구				청년 인구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여성(%)	
전라북도	1,762,021	876,978	885,043	401,847	213,327	188,520	46.9	22.8
전주	646,150	317,457	328,693	178,236	92,447	85,789	48.1	27.6
군산	260,941	132,174	128,767	58,641	31,698	26,943	45.9	22.5
익산	271,820	135,382	136,438	64,265	34,375	29,890	46.5	23.6
정읍	104,236	51,884	52,352	19,181	10,472	8,709	45.4	18.4
남원	77,308	37,896	39,412	13,578	7,282	6,296	46.4	17.6
김제	81,907	40,774	41,133	14,612	7,919	6,693	45.8	17.8
완주	95,629	49,200	46,429	20,562	11,102	9,460	46.0	21.5
진안	24,616	12,563	12,053	3,369	1,824	1,545	45.9	13.7
무주	23,385	11,694	11,691	3,380	1,839	1,541	45.6	14.5
장수	21,110	10,604	10,506	2,937	1,611	1,326	45.1	13.9
임실	26,259	13,495	12,764	3,736	2,090	1,646	44.1	14.2
순창	26,849	13,193	13,656	4,052	2,170	1,882	46.4	15.1
고창	51,994	25,873	26,121	7,627	4,242	3,385	44.4	14.7
부안	49,817	24,789	25,028	7,671	4,256	3,415	44.5	15.4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전북 시군별 청년의 성별 인구 현황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주/군산/익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밀집도는 청년여성은 75.7%, 남성청년은 74.3%로 여성이 더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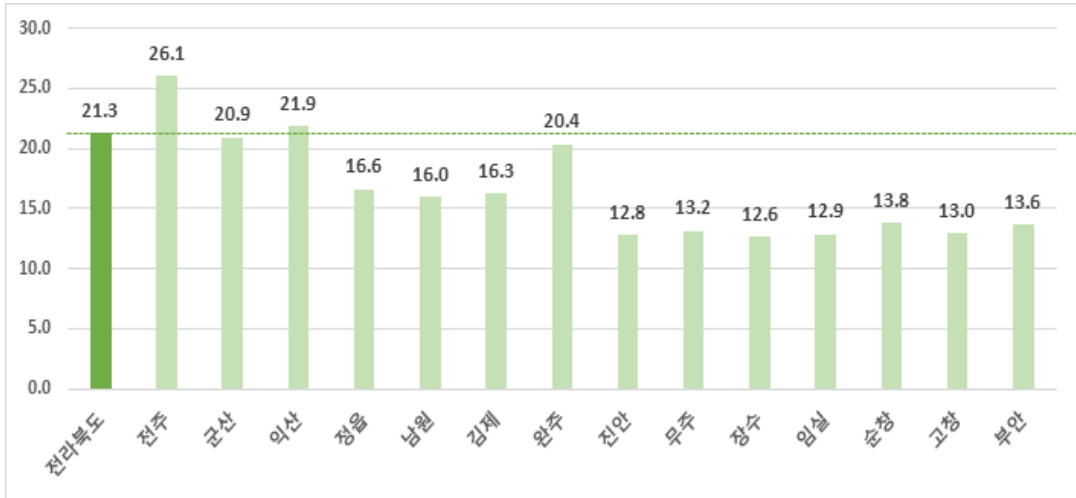
[그림 3-6] 전북 성별 청년인구의 시군별 구성비(2023.6)

- 전북 청년인구의 여성 비중은 46.9%로 나타난 가운데,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가 48.1%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4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시군별 청년인구 중 여성 비중은 전주시 1개 지역만 전북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전북 평균을 하회하였음



[그림 3-7] 전북 시군별 청년인구 중 여성 비중

- 전북 전체 여성인구 중 청년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1.3%로 나타난 가운데, 전주시가 26.1%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12.6%로 가장 낮게 나타남. 시군별 여성인구 중 청년여성 비중은 전주시, 익산시 2개 지역만 전북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평균을 하회하였음



[그림 3-8] 전북 시군별 여성인구 중 청년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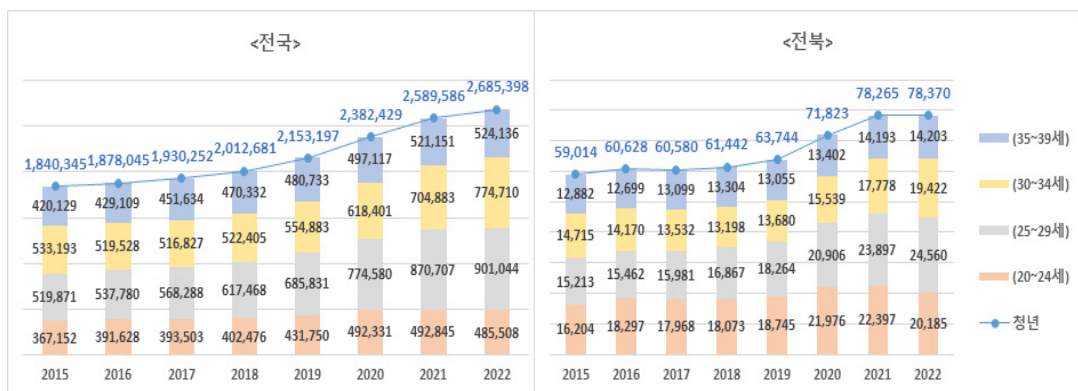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 1인 가구 현황

2022년 기준 전국 청년 1인 가구 수는 7,502,350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35.8%이며 전북의 경우 78,370가구로 전체의 27.5%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청년 1인가구의 추이를 보면 전국 및 전북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수 추이(2015~2022)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1인가구	5,203,440	5,397,615	5,618,677	5,848,594	6,147,516	6,643,354	7,165,788	7,502,350
	청년	1,840,345	1,878,045	1,930,252	2,012,681	2,153,197	2,382,429	2,589,586	2,685,398
	20~24세	367,152	391,628	393,503	402,476	431,750	492,331	492,845	485,508
	25~29세	519,871	537,780	568,288	617,468	685,831	774,580	870,707	901,044
	30~34세	533,193	519,528	516,827	522,405	554,883	618,401	704,883	774,710
	35~39세	420,129	429,109	451,634	470,332	480,733	497,117	521,151	524,136
전북	1인가구	213,750	222,201	227,600	232,587	238,746	255,269	276,153	284,613
	청년	59,014	60,628	60,580	61,442	63,744	71,823	78,265	78,370
	20~24세	16,204	18,297	17,968	18,073	18,745	21,976	22,397	20,185
	25~29세	15,213	15,462	15,981	16,867	18,264	20,906	23,897	24,560
	30~34세	14,715	14,170	13,532	13,198	13,680	15,539	17,778	19,422
	35~39세	12,882	12,699	13,099	13,304	13,055	13,402	14,193	14,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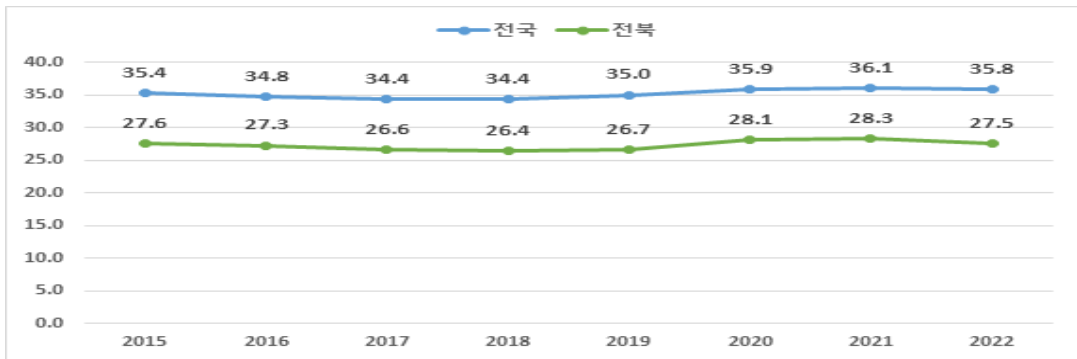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9]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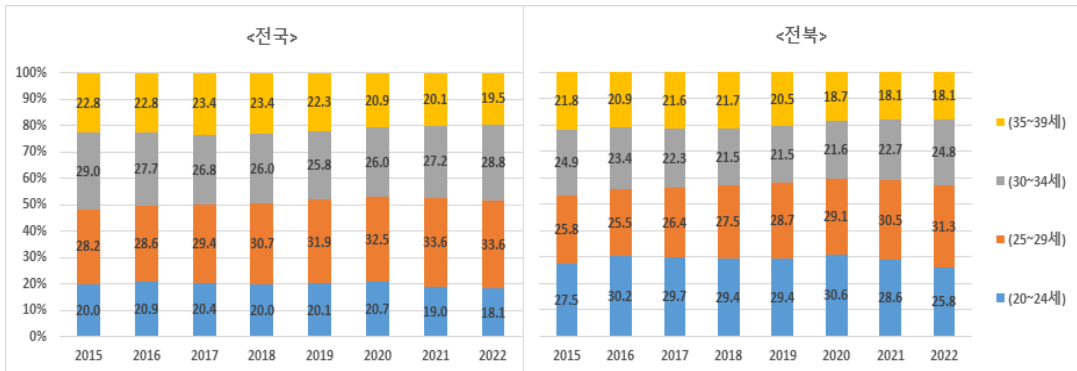
매년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대비 2022년 청년 1인가구의 연령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5~29세 1인가구 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시기에 1인가구를 선택하여 졸업/취업 시기에 1인가구를 선택하는 청년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및 전북 모두 청년 1인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청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전체 1인가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경우 35%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북의 경우 27%대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0] 전국 및 전북 1인가구 중 청년층 구성비

한편, 2022년을 기준으로 청년 1인가구의 세부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국 및 전북 모두 25~29세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기에 들어서서는 30대 후반부터는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3-11]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전국 및 전북의 청년 1인가구를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청년 1인가구 중 남성 1,531,382가구(57.0%), 여성 1,154,016가구(43.0%)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한편, 2015년 대비 2022년 청년 1인가구 증가율을 성별로 보면 '15년 대비 남성 청년 1인가구는 39.9%의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 청년 1인가구는 54.8%의 증가율을 보여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25~29세 연령의 1인가구 증가율이 92.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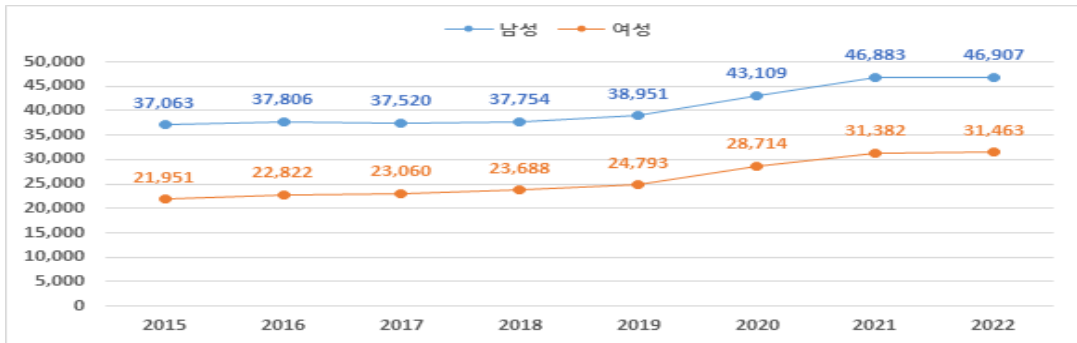
전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청년 1인가구(78,370가구) 중 남성 46,907가구(59.9%), 여성 31,463가구(40.1%)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2015년 대비 2022년 청년 1인가구 증가율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15년 대비 남성 청년 1인가구는 26.6%의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 청년 1인가구는 43.3%의 증가율을 보여 전북 역시 여성 청년 1인가구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연령의 1인가구 증가율이 8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전국 및 전북 성별 청년 1인가구 현황(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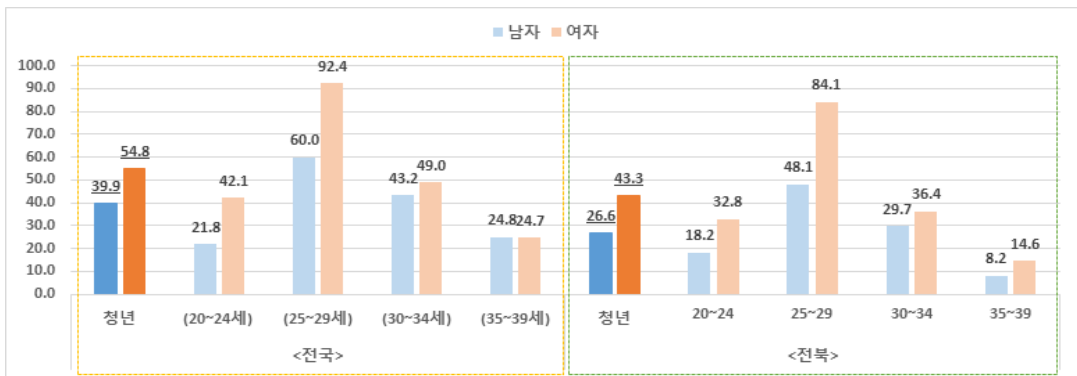
구분	2015			2022			'15년대비 증감률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청년	1,840,345	1,094,992	745,353	2,685,398	1,531,382	1,154,016	39.9	54.8
	20~24세	367,152	178,691	188,461	485,508	217,651	267,857	21.8	42.1
	25~29세	519,871	306,068	213,803	901,044	489,733	411,311	60.0	92.4
	30~34세	533,193	339,405	193,788	774,710	485,985	288,725	43.2	49.0
	35~39세	420,129	270,828	149,301	524,136	338,013	186,123	24.8	24.7
전북	청년	59,014	37,063	21,951	78,370	46,907	31,463	26.6	43.3
	20~24세	16,204	9,140	7,064	20,185	10,806	9,379	18.2	32.8
	25~29세	15,213	9,578	5,635	24,560	14,184	10,376	48.1	84.1
	30~34세	14,715	9,641	5,074	19,422	12,503	6,919	29.7	36.4
	35~39세	12,882	8,704	4,178	14,203	9,414	4,789	8.2	14.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전국적으로 청년 1인가구는 남성의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 청년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대 후반 청년여성의 1인가구 증가가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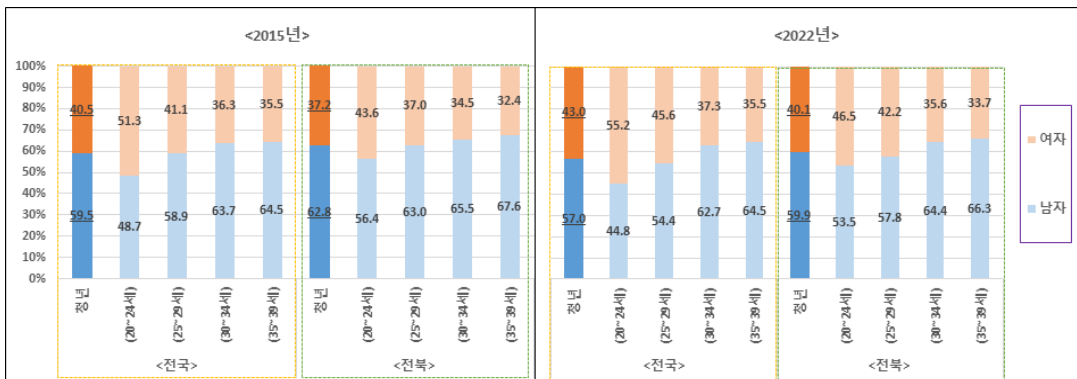


[그림 3-12] 전북 성별 청년 1인 가구 수 추이



[그림 3-13]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 가구 성별 증감률('15년대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비중을 세부연령으로 구분해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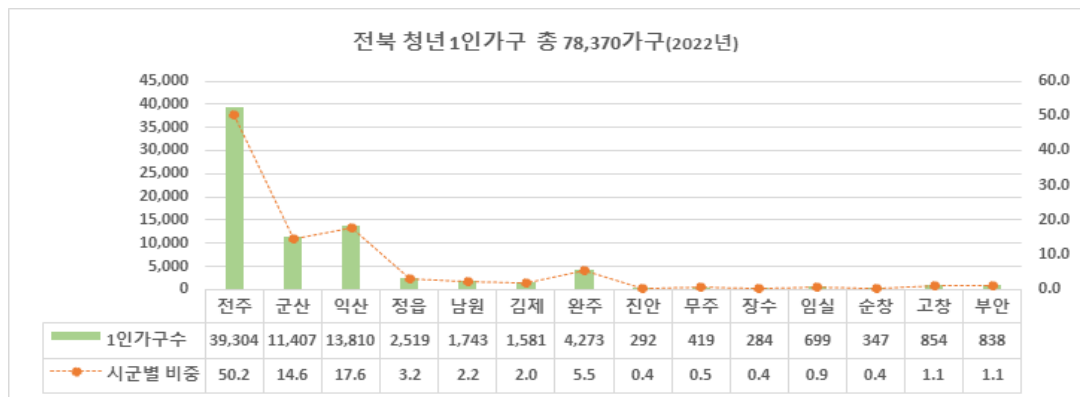
[그림 3-14] 전국 및 전북 청년 1인가구의 성별 구성비

2022년을 기준으로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청년 1인가구의 50.2%(39,304가구)가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익산(17.6%), 군산(14.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북 청년 1인가구의 82.4%가 전주/군산/익산 등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1] 전북 시군별\*성별 청년 1인가구 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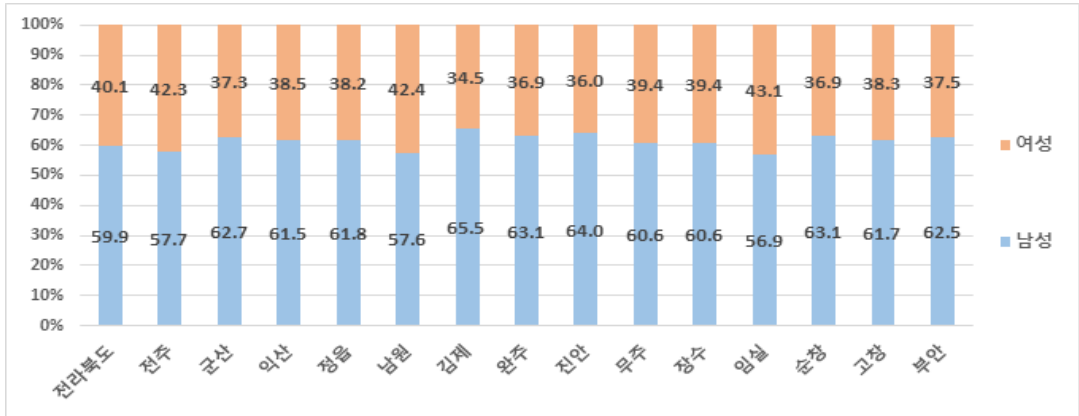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라북도	46,907	10,806	14,184	12,503	9,414	31,463	9,379	10,376	6,919	4,789
전주	22,697	4,736	7,195	6,349	4,417	16,607	4,578	5,740	3,783	2,506
군산	7,150	1,529	2,120	1,886	1,615	4,257	1,286	1,338	940	693
익산	8,488	2,926	2,431	1,829	1,302	5,322	2,228	1,545	889	660
정읍	1,557	151	468	518	420	962	159	386	235	182
남원	1,004	96	298	350	260	739	102	278	219	140
김제	1,035	128	338	298	271	546	102	181	155	108
완주	2,695	889	708	602	496	1,578	590	437	316	235
진안	187	19	62	53	53	105	14	42	26	23
무주	254	19	66	76	93	165	21	59	65	20
장수	172	18	55	41	58	112	11	44	34	23
임실	398	161	100	78	59	301	181	65	35	20
순창	219	20	65	63	71	128	13	49	32	34
고창	527	54	147	177	149	327	47	111	105	64
부안	524	60	131	183	150	314	47	101	85	8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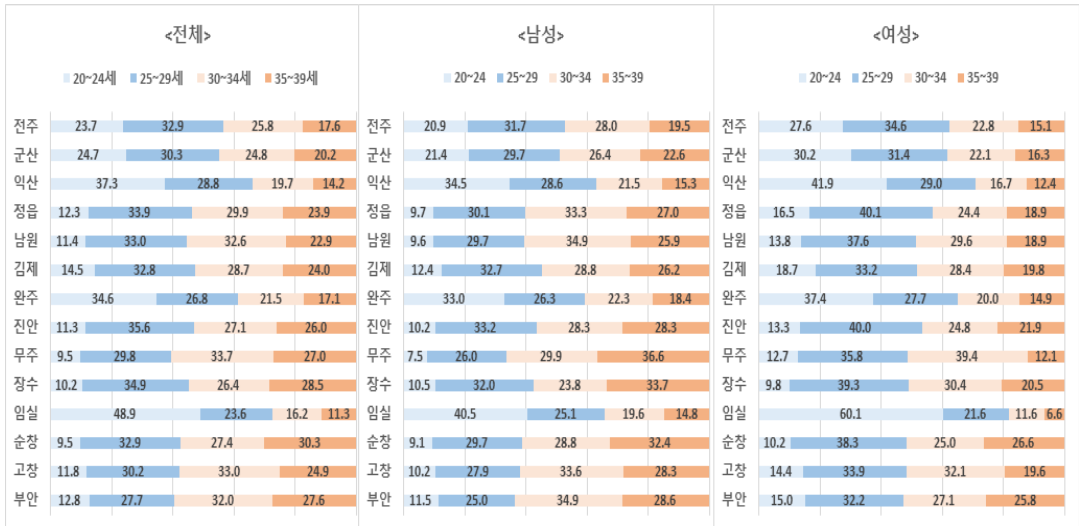
[그림 3-15]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 현황

시군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 남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 청년 여성 비중이 40.1%로 나타난 가운데, 전주, 남원, 임실 지역만 평균 이상을 보였다. 청년 1인가구 중 여성 비중은 김제시가 34.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3-16]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비중

시군별 청년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임실군은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여성), 무주군은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주/군산/익산/완주 지역은 대학교의 영향으로 20대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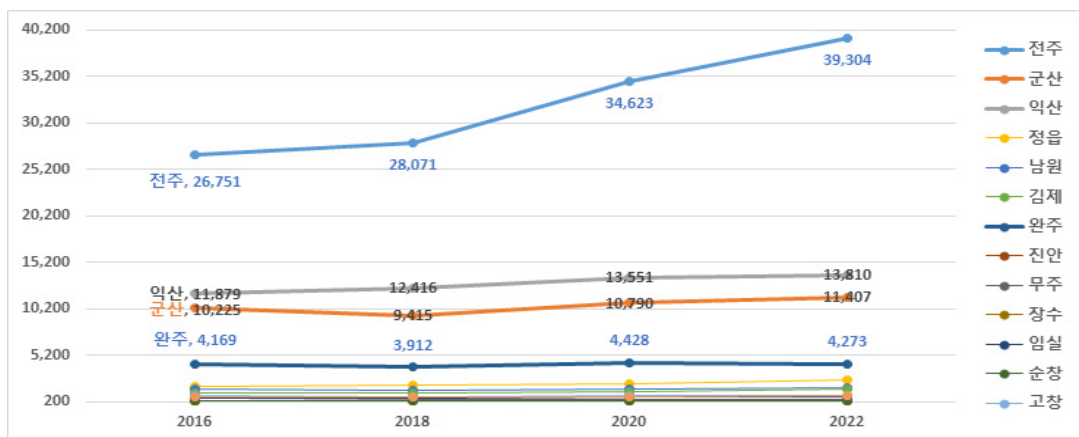
[그림 3-17]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비중

시군별 청년 1인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시군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16년 대비 '22년 12,553가구가 증가하여 4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추이를 보면, 청년 남성보다는 여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12]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수 추이(2015~2022)

구분	2016			2018			2020			2022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주	26,751	15,597	11,154	28,071	16,271	11,800	34,623	19,902	14,721	39,304	22,697	16,607
군산	10,225	6,870	3,355	9,415	6,186	3,229	10,790	6,823	3,967	11,407	7,150	4,257
익산	11,879	7,653	4,226	12,416	7,904	4,512	13,551	8,399	5,152	13,810	8,488	5,322
정읍	1,803	1,154	649	1,923	1,236	687	2,175	1,378	797	2,519	1,557	962
남원	1,566	998	568	1,338	826	512	1,540	910	630	1,743	1,004	739
김제	1,129	759	370	1,143	736	407	1,223	777	446	1,581	1,035	546
완주	4,169	2,781	1,388	3,912	2,555	1,357	4,428	2,783	1,645	4,273	2,695	1,578
진안	266	173	93	269	170	99	271	167	104	292	187	105
무주	296	204	92	357	220	137	387	226	161	419	254	165
장수	230	149	81	269	183	86	288	191	97	284	172	112
임실	585	363	222	607	340	267	707	403	304	699	398	301
순창	287	182	105	288	196	92	283	169	114	347	219	128
고창	782	496	286	743	482	261	792	487	305	854	527	327
부안	660	427	233	691	449	242	765	494	271	838	524	31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18] 전북 시군별 청년 1인가구수 추이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 인구이동 현황

전라북도 청년인구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 전국 시도별 청년층 인구의 순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지역은 순유입 되었고, 그 외 나머지 시도에서는 순유출되었다.

전북의 경우 청년층 전입자는 78,683명, 전출자는 86,810명으로 -8,127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 청년의 유출이 가장 심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35~39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북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전국 시도별 청년층 순이동자 수(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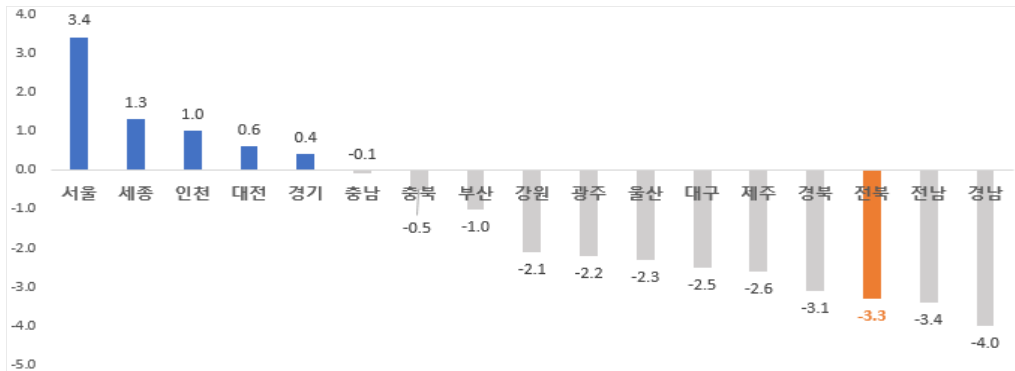
구분	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서울	26,359	35,379	18,310	-12,683	-14,647
부산	-6,638	1,270	-5,547	-1,697	-664
대구	-7,172	-1,709	-4,824	-836	197
인천	11,408	953	1,940	4,187	4,328
광주	-4,215	-1,817	-2,133	-307	42
대전	366	956	-147	-318	-125
울산	-4,971	-2,909	-1,145	-482	-435
세종	4,471	223	1,387	1,588	1,273
경기	26,601	1,833	5,091	11,792	7,885
강원	-1,347	-2,125	-547	561	764
충북	-314	-1,177	405	221	237
충남	847	-2,210	868	1,037	1,152
<b>전북</b>	<b>-8,127</b>	<b>-4,521</b>	<b>-2,997</b>	<b>-711</b>	<b>102</b>
전남	-6,640	-4,991	-1,768	-300	419
경북	-11,783	-6,624	-3,279	-1,160	-720
경남	-18,827	-11,322	-5,313	-1,347	-845
제주	-18	-1,209	-301	455	1,037

주 : 순이동=전입-전출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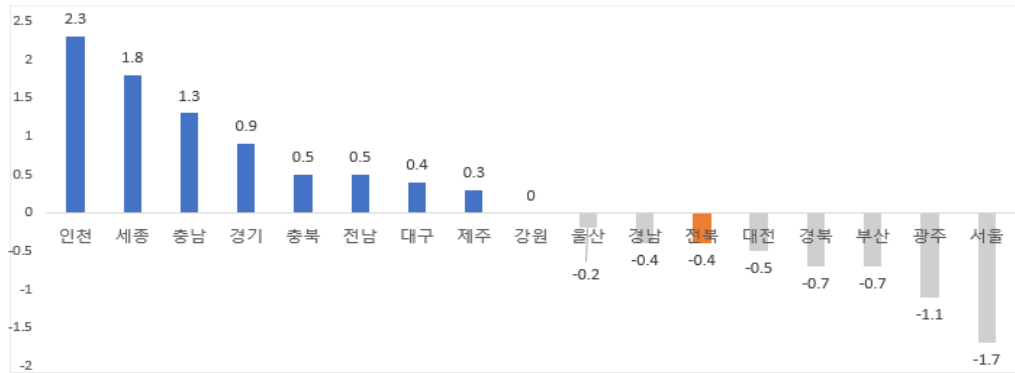


2023년 기준 전국 시도별 청년층 인구의 순이동을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세종, 인천, 대전,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로 순유입되었고, 경남, 전남, 전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순유출되었다. 30대의 경우 인천, 세종, 충남, 경기, 충북, 전남, 대구, 제주 등 8개 시도로 순유입되었고, 서울, 광주, 부산, 경북, 대전, 전북 등 9개 시도에서 순유출 되었다. 전북의 경우 20대 청년의 순유출률이 30대 순유출률 보다 다소 높았다.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3).

[그림 3-19] 전국 시도별 20대 순이동률 비교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3).

[그림 3-20] 전국 시도별 30대 순이동률 비교

한편, 전북 청년인구의 이동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순이동자 수는 청년 남성의 경우 -4,147명, 청년 여성의 경우 -3,98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청년층이 전라북도를 넘어 타 시도로 이동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북도로 전입한 타 시도 청년인구

는 24,666명이었고, 전북도를 떠나 타 시도로 전출한 전북 청년은 32,793명으로 전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대에 활발하게 이동이 일어나며, 30대로 갈수록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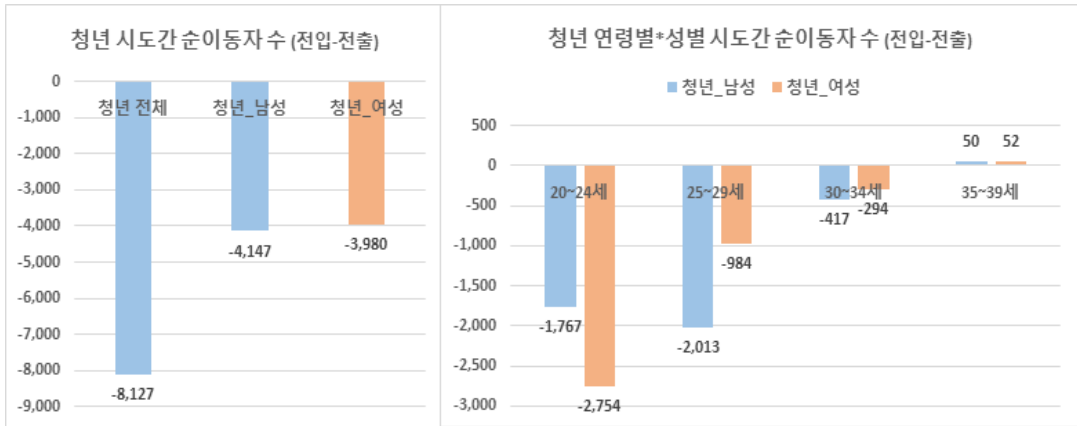
성별로 구분해보면 청년 남성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북도로 전입한 인구는 13,779명이었고,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17,926명이었다(-4,147명). 여성의 경우 전입 10,887명, 전출 14,867명으로 나타났다(-3,980명). 이러한 현상은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 여성은 20대 초반에 활발하게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타 시도로의 이동이 남성보다 더 빠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4] 전북 성별 청년층 이동자 수(2022)

성별	연령대별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시도내 이동 -시군구 내	시도내 이동 -시군구 간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전체	계	199,432	204,547	-5,115	99,552	44,369	55,511	60,626
	청년	78,683	86,810	<b>-8,127</b>	35,823	18,194	24,666	32,793
	20~24세	19,459	23,980	<b>-4,521</b>	7,448	4,647	7,364	11,885
	25~29세	25,473	28,470	-2,997	11,057	6,034	8,382	11,379
	30~34세	18,782	19,493	-711	9,439	4,317	5,026	5,737
	35~39세	14,969	14,867	102	7,879	3,196	3,894	3,792
남성	계	103,432	105,444	-2,012	50,239	23,094	30,099	32,111
	청년	41,498	45,645	<b>-4,147</b>	18,299	9,420	13,779	17,926
	20~24세	9,701	11,468	-1,767	3,616	2,219	3,866	5,633
	25~29세	13,635	15,648	-2,013	5,580	3,205	4,850	6,863
	30~34세	10,252	10,669	-417	5,029	2,325	2,898	3,315
	35~39세	7,910	7,860	50	4,074	1,671	2,165	2,115
여성	계	96,000	99,103	-3,103	49,313	21,275	25,412	28,515
	청년	37,185	41,165	<b>-3,980</b>	17,524	8,774	10,887	14,867
	20~24세	9,758	12,512	<b>-2,754</b>	3,832	2,428	3,498	6,252
	25~29세	11,838	12,822	-984	5,477	2,829	3,532	4,516
	30~34세	8,530	8,824	-294	4,410	1,992	2,128	2,422
	35~39세	7,059	7,007	52	3,805	1,525	1,729	1,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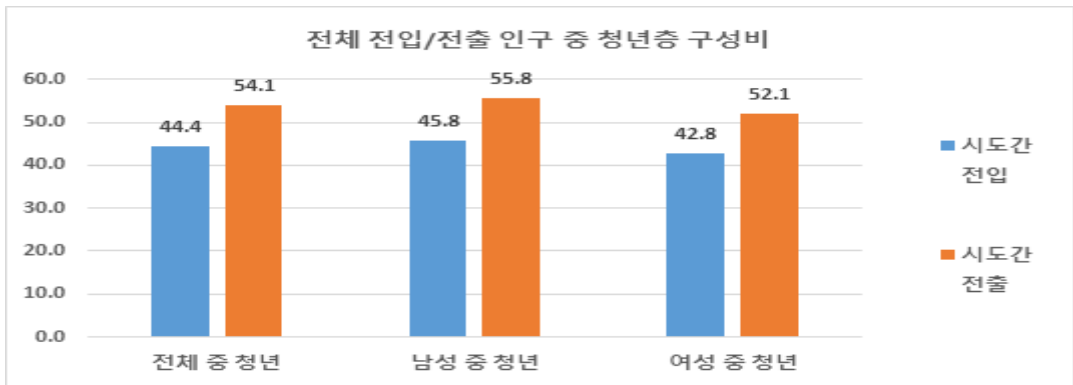
주 : 순이동=전입-전출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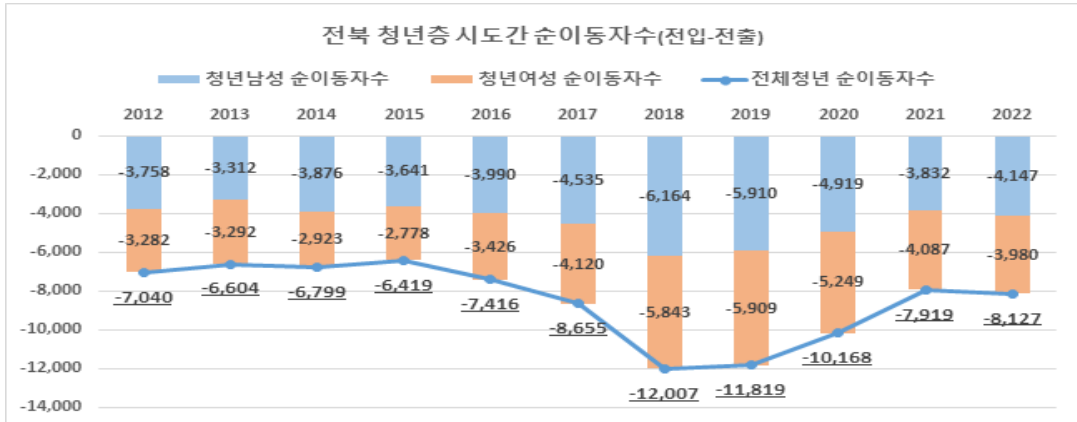
[그림 3-21] 전북 청년의 성별\*연령별 시도 간 순이동자수

전북 전체 시도 간 전입/전출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시도 간 전입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44.4%였으나, 반대로 전출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4.4%로 더 높게 나타나 전북도로 유입되는 청년보다 전출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북도로 전입한 남성의 45.8%는 청년이었고, 반대로 전출된 남성의 55.8%가 청년층으로 타 시도 전출 남성의 절반 이상이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입자 중 42.8%가 청년층이었고, 전출된 여성의 52.1%는 청년층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전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전북 전체 시도간 전입/전출 인구의 청년층 구성비

전북의 청년층 시도 간 순이동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전북도로 전입하는 청년 수보다 전출되는 수가 더 많았다. '12년부터 '18년까지 유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성별 추이는 매년 청년 남성의 유출 수가 더 많았으나, '19년~'21년 간에는 청년 여성의 유출 수가 더 많았다.



[그림 3-23] 전북 청년층 시도 간 순이동자수 추이

전북의 청년인구가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어느 지역에서 전북으로의 유입이 일어났는지 전북 청년의 유출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전북으로 유입된 청년인구보다 유출된 인구의 차이가 8,127명으로 전북 밖으로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전북 청년 수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서울 청년의 수를 뺀 순이동자수가 3,425명에 달하였고,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순유출된 청년의 수는 1,72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에 '22년 한 해 동안 5,148명이 순유출되었고 이는 총 순유출의 약 63%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유일하게 순유입된 지역은 대구/경남이며, 경남지역으로 유출된 전북 청년 수보다 경남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청년수가 41명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북 청년층 순이동자 8,127명 중 남성 4,147명(51.0%), 여성 3,980명(49%)으로 전북으로 유입된 청년 수보다 전국 각지로 유출된 청년의 수가 남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서울 지역으로의 전입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이동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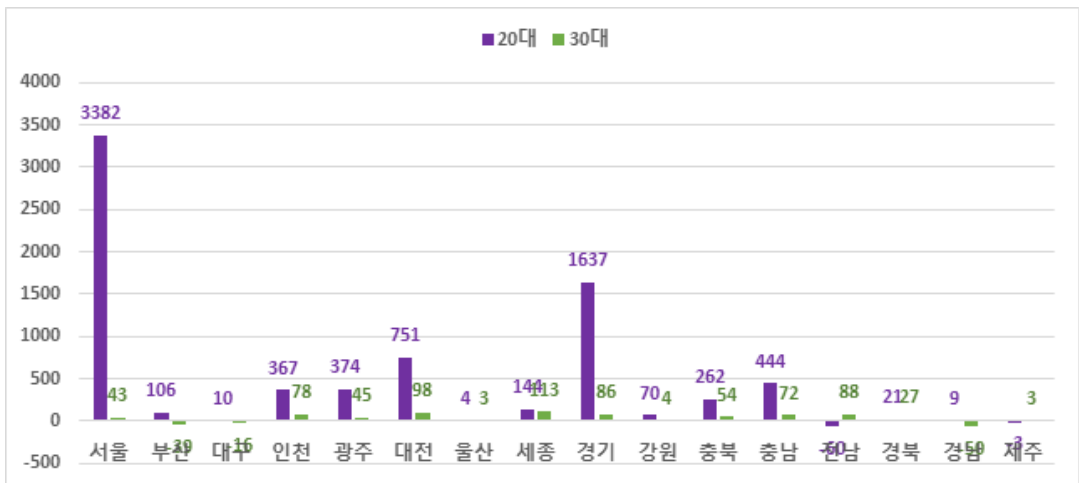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20대(7,518명)가 전북 청년층 이동자 수 전체의 92.5%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초반 청년여성의 순이동자 수의 비중(33.9)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전출한 전북청년의 전입지별 순이동자 수(2022)

구분	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8,127 100.0	4,147 51.0	3,980 49.0	1,767 21.7	2,754 33.9	2,013 24.8	984 12.1	417 5.1	294 3.6	-50 -0.6	-52 -0.6
서울	3,425	1,669	1,756	872	1,388	729	393	82	53	-14	-78
부산	67	36	31	52	46	3	5	-22	-15	3	-5
대구	-6	-5	-1	16	10	-13	-3	1	-2	-9	-6
인천	445	207	238	69	150	89	59	57	16	-8	13
광주	419	137	282	68	234	51	21	23	16	-5	11
대전	849	371	478	134	295	184	138	57	46	-4	-1
울산	7	-15	22	-12	7	2	7	4	5	-9	3
세종	257	113	144	22	36	44	42	28	35	19	31
경기	1,723	1,042	681	393	462	570	212	110	37	-31	-30
강원	74	32	42	21	23	22	4	-7	28	-4	-13
충북	316	198	118	63	42	103	54	44	19	-12	3
충남	516	311	205	76	114	185	69	34	21	16	1
전남	28	24	4	-46	-44	33	-3	10	32	27	19
경북	48	34	14	27	4	2	-12	-2	15	7	7
경남	-41	-20	-21	10	-3	2	0	-8	-7	-24	-11
제주	0	13	-13	2	-10	7	-2	6	-5	-2	4

주 : 각 지역을 전입지인 입장에서 계산된 것임. 즉, 수치가 양수일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수보다 전북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출된 수가 높은 경우로 해석.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24] 전출한 전북청년의 연령대별 및 전입지별 순이동자수

전북 청년층 순이동자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김제, 완주 지역을 제외하고 12개 시군은 전입 청년보다 전출된 청년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순유출을 기록한 지역은 전주시로 -2,865명이 순유출되었고, 다음으로 익산(-2,067명), 군산(-1,325명) 등의 순이었다. 순유출을 주도한 연령대는 20대였으며, 순유입을 기록한 김제 및 완주 경우 30대가 순유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전북 시군별 청년층 순이동자 수(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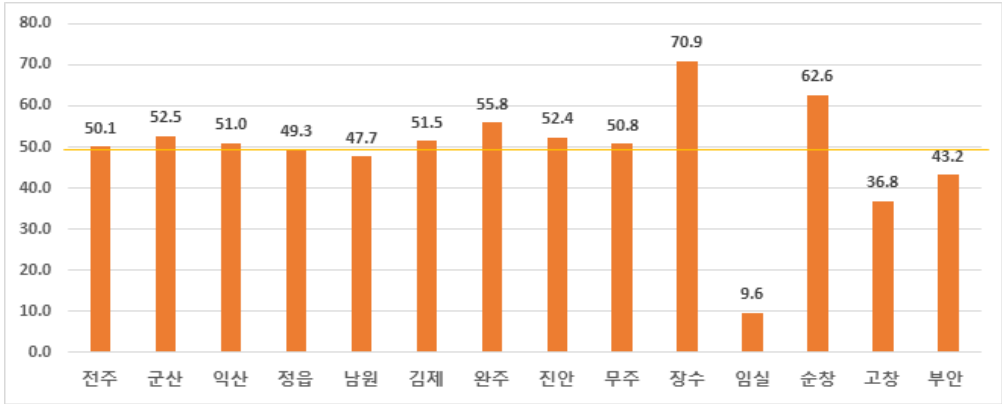
구분	계			남성			여성		
	청년층	20대	30대	청년층	20대	30대	청년층	20대	30대
전라북도	-8,127	-7,518	-609	-4,147	-3,780	-367	-3,980	-3,738	-242
전주	-2,865	<b>-2,246</b>	-619	-1,430	<b>-1,175</b>	-255	-1,435	<b>-1,071</b>	<b>-364</b>
군산	-1,325	<b>-1,194</b>	-131	-629	-546	-83	-696	-648	-48
익산	-2,067	<b>-1,655</b>	-412	-1,013	<b>-750</b>	-263	-1,054	<b>-905</b>	-149
정읍	-614	-607	-7	-311	-315	4	-303	-292	-11
남원	-734	-659	-75	-384	-368	-16	-350	-291	-59
김제	<b>309</b>	41	<b>268</b>	150	48	102	159	-7	166
완주	<b>727</b>	59	<b>668</b>	321	-24	345	406	83	323
진안	-210	-156	-54	-100	-69	-31	-110	-87	-23
무주	-191	-127	-64	-94	-59	-35	-97	-68	-29
장수	-158	-146	-12	-46	-40	-6	-112	-106	-6
임실	-104	-72	-32	-94	-53	-41	-10	-19	9
순창	-99	-74	-25	-37	-36	-1	-62	-38	-24
고창	-435	-378	-57	-275	-221	-54	-160	-157	-3
부안	-361	-304	-57	-205	-172	-33	-156	-132	-24

주 : 순이동 = 전입-전출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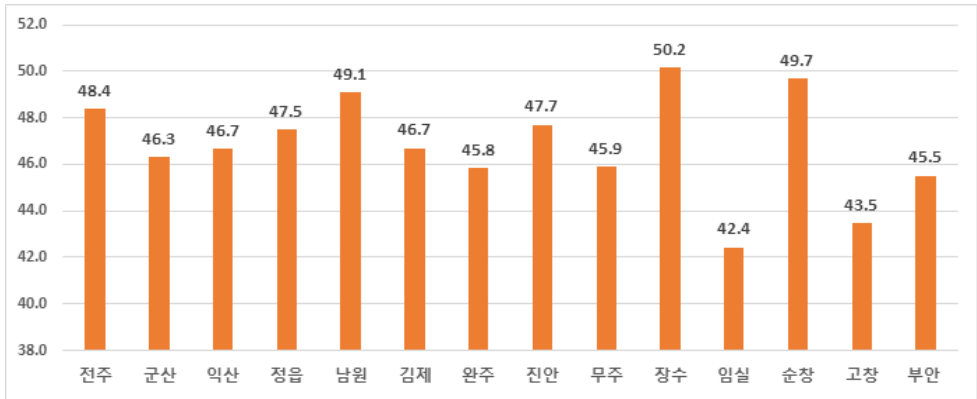
청년층 순이동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지역별 청년 순이동자 중 여성 비중은 49.0%를 차지했다. 순유출을 나타낸 12개 시군 중 7개 지역은 순유출의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장수와 순창 지역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순유입을 기록한 김제와 완주 지역은 청년인구의 순유입을 청년 여성이 견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25] 전북 시군별 청년층 순이동자수 중 여성 비중

한편, 시군별 청년 전출자 중 여성 비중을 살펴보면, 장수군의 경우 청년 전출인구의 50.2%가 여성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순창(49.7%), 남원(4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실군은 42.4%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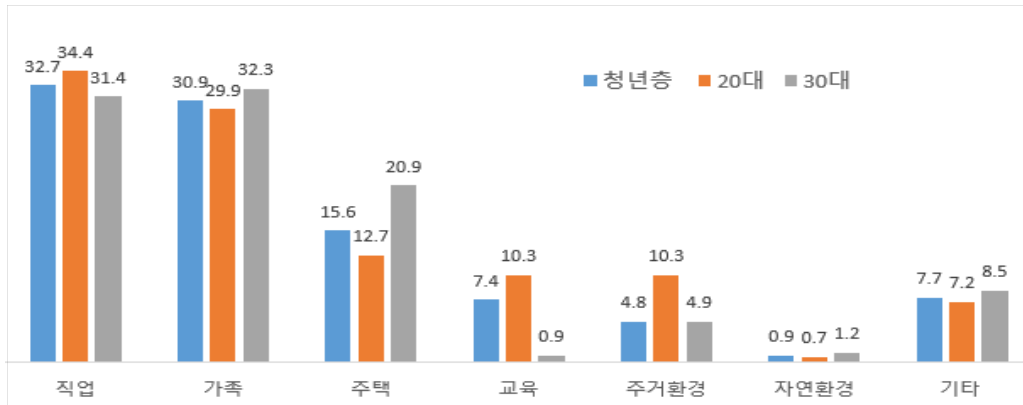


[그림 3-26] 시군별 청년 전출자 중 여성 비중

전북 인구가 타 지역으로 순유출되는 주된 사유는 직업(-7.2천명), 교육(-1.5천명), 주거환경(-0.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으로 청년층(19~39세)이 전입하는 주된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32.7%),

가족(30.9%), 주택(15.6%)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연령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직업(34.4%), 가족(29.9%), 주택(12.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의 경우 가족(32.3%) 때문에 전복으로 전입한 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31.4%), 주택(2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보다는 30대가 주택의 사유로 전복지역으로 전입한 비율이 약 8.2%p 정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3).

[그림 3-27] 타지역에서 청년층이 전복으로 전입하는 사유



## 나. 청년 일자리 관련 현황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경제활동 현황

2022년 청년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취업자는 9,261천명, 실업자 384천명, 경제활동참가율 68.9%, 고용률 66.2%로 나타났고 전북의 경우 취업자는 253천명, 실업자 8천명, 경제활동참가율 63.7%, 고용률 61.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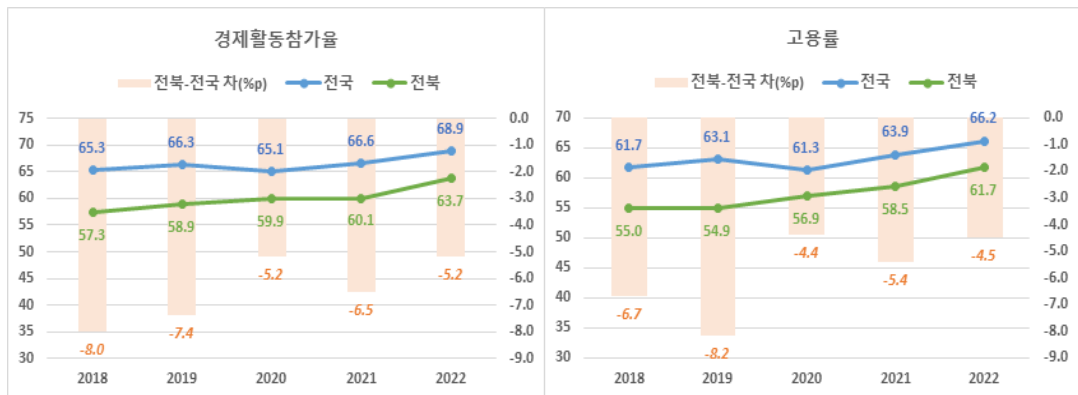
[표 3-17] 전국 및 전북 청년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전국					전북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취업자	9,473	9,513	9,024	9,179	9,261	260	251	251	249	253
실업자	546	479	561	395	384	11	18	13	7	8
경활인구	10,019	9,992	9,585	9,574	9,645	271	269	264	256	261
경활율	65.3	66.3	65.1	66.6	68.9	57.3	58.9	59.9	60.1	63.7
고용률	61.7	63.1	61.3	63.9	66.2	55.0	54.9	56.9	58.5	61.7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재구성.

- 2018년~2022년 전국과 전북의 청년 경제 활동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북이 전국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점차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 고용률은 '19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나, '20년도에 전국 평균이 주춤한 사이 차이가 감소 추세를 보임



[그림 3-28] 전국 및 전북의 청년 경제활동 추이

한편, 2018년~2022년 전국과 전북의 청년 경제활동 추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국 및 전북 모두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태(경활율과 고용률)가 청년 남성 대비 청년 여성의 약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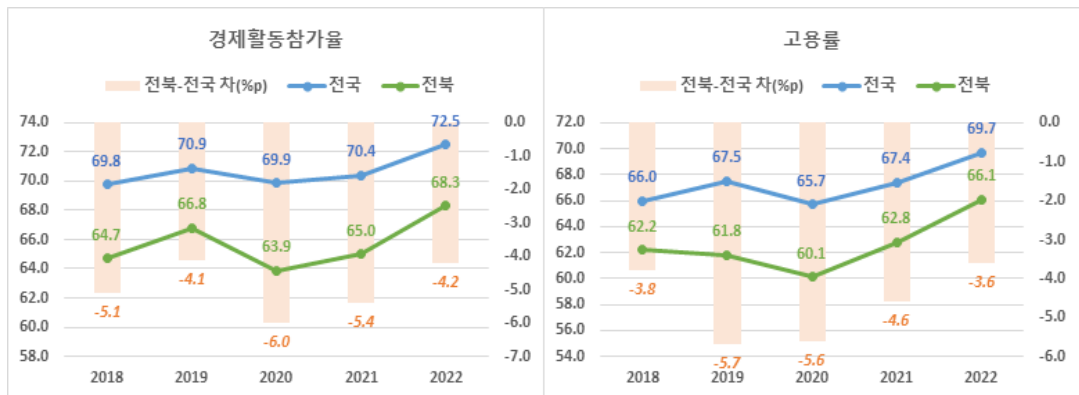
[표 3-18]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전국					전북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남성	취업자	5,259	5,289	5,035	5,042	5,084	155	149	140	142	144
	실업자	305	270	319	220	199	6	12	9	5	5
	경활인구	5,564	5,559	5,354	5,262	5,283	161	161	149	147	149
	경활율	69.8	70.9	69.9	70.4	72.5	64.7	66.8	63.9	65.0	68.3
	고용률	66.0	67.5	65.7	67.4	69.7	62.2	61.8	60.1	62.8	66.1
여성	취업자	4,215	4,223	3,989	4,137	4,177	106	102	110	107	109
	실업자	240	211	242	176	185	3	6	6	2	4
	경활인구	4,455	4,434	4,231	4,313	4,362	109	108	116	109	113
	경활율	60.4	61.2	59.9	62.6	65.0	48.4	49.8	55.8	54.2	58.5
	고용률	57.1	58.3	56.4	60.1	62.3	47.1	47.0	52.9	53.2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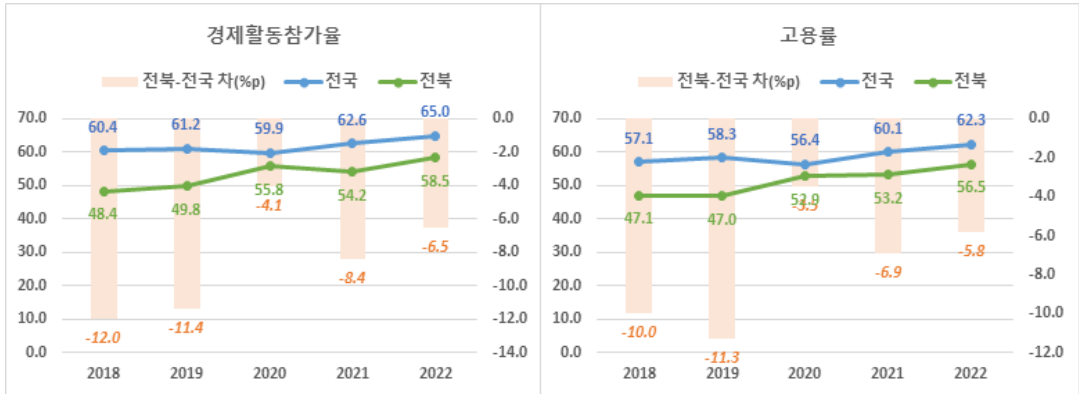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재구성.

- 전국 및 전북의 청년남성의 경제활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긴 하지만 차이를 점차 줄여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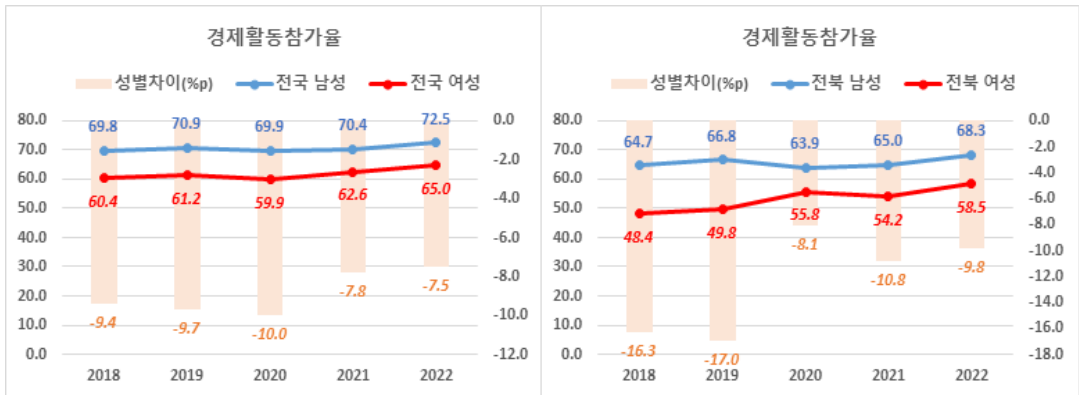
[그림 3-29] 전국 및 전북 청년남성 경제활동 추이

- 전국 및 전북의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가운데 '18년~'19년에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음. 하지만 2020년에 전북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점차 차이를 줄여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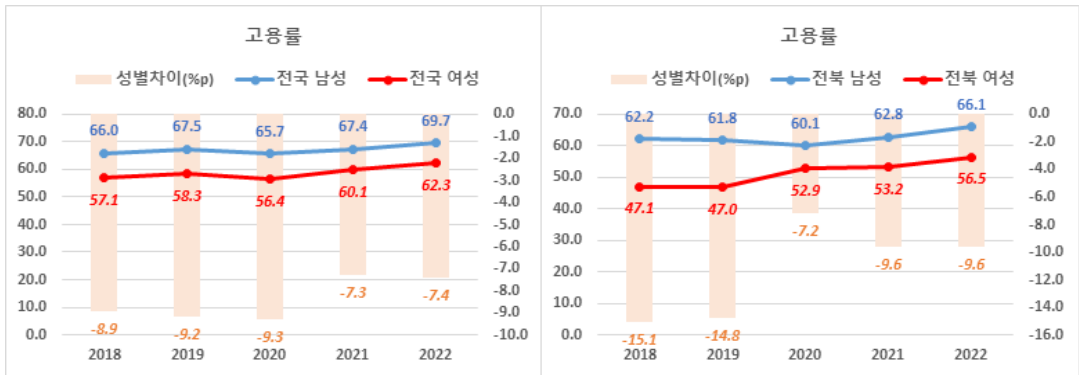
[그림 3-30] 전국 및 전북 청년여성 경제활동 추이

- 전국 및 전북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국과 전북 모두 청년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차이는 '18년~'22년 간 최저 7.5%p~10.0%p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전북의 경우 최저 8.1%p~17.0%p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음. 전국 평균에 비해 전북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 전국 및 전북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차이 비교

- 전국 및 전북의 청년 고용률 성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전국과 전북 모두 청년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全國의 청년 고용률 성별 차이는 '18년~'22년 간 최저 7.3%p~9.3%p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전북의 경우 최저 7.2%p~15.1%p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음. 전국 평균에 비해 전북의 청년 고용률 성별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2] 전국 및 전북 청년 고용률 성별 차이 비교

2022년 전국 및 전북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24세 구간은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전국의 경우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20대 전체 구간에서 남성보다 높은 반면, 전북의 경우 20~24세 구간만 제외하고 남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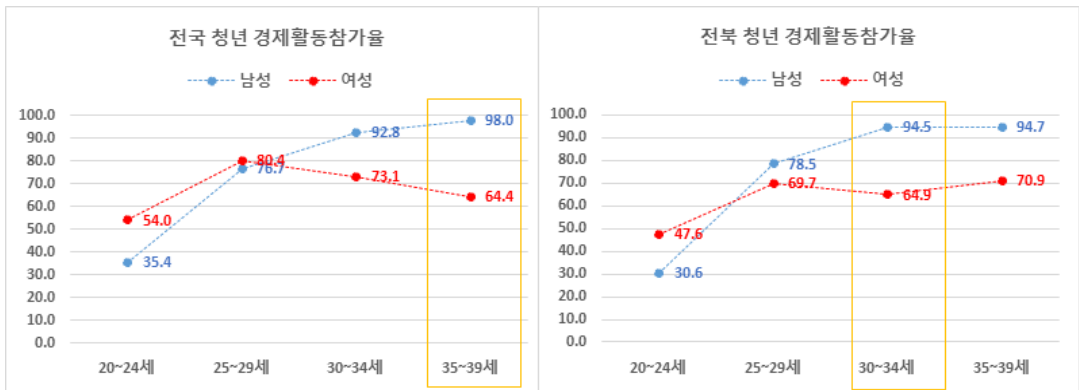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	20~24세	35.4	33.4	2.0	54.0	50.9	3.1
	25~29세	76.7	72.1	4.5	80.4	75.9	4.5
	30~34세	92.8	90.1	2.8	73.1	70.5	2.6
	35~39세	98.0	95.9	2.1	64.4	62.9	1.5
전북	20~24세	30.6	29.3	1.3	47.6	44.9	2.7
	25~29세	78.5	72.2	6.3	69.7	64.6	5.1
	30~34세	94.5	94.4	0.0	64.9	64.9	0.0
	35~39세	94.7	92.9	1.8	70.9	69.3	1.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재구성.

한편,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 30~34세 구간에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연령대인 반면, 전국의 경우 35~39세 구간에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북 청년여성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빠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이 가장 큰 연령구간임이 증명되었다.

- 다시 말해 전국 청년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까지는 남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30~34세 구간부터 결혼을 시작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역전되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35~39세 구간에 들어서면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더해져서 가장 큰 성별격차를 보임. 전북 청년여성의 경우 이보다 조금 빠른 25~29세 구간부터 결혼을 시작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역전되며, 30~34세 구간에 들어서면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더해져서 가장 큰 성별격차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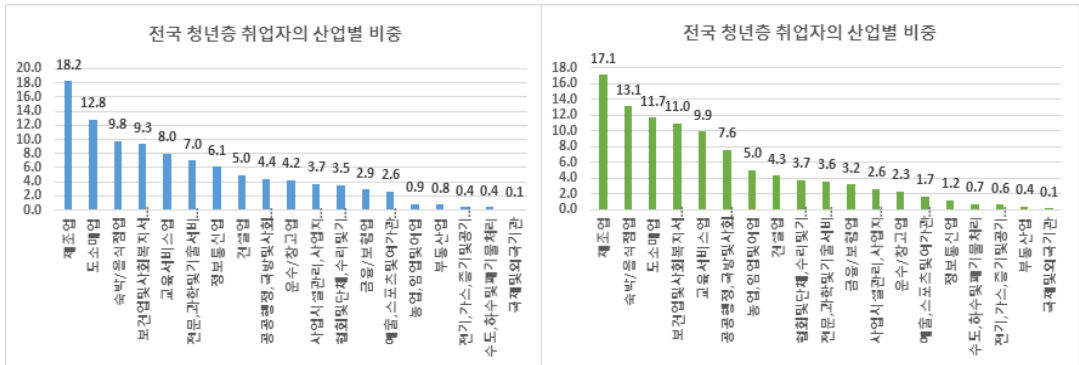
[그림 3-33] 전국 및 전북 청년층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산업별·직업별 경제활동 현황

2022년 기준 전국 및 전북의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산업에 따른 비중이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 전국의 경우 제조업(18.2%), 도·소매업(12.8%), 숙박/음식점업(9.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3%), 교육서비스업(8.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전북의 경우 제조업(17.1%), 숙박/음식점업(13.1%), 도·소매업(1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0%), 교육서비스업(9.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한편, 전북은 농·임·어업(+4.1%p), 숙박/음식점업(+3.3%p),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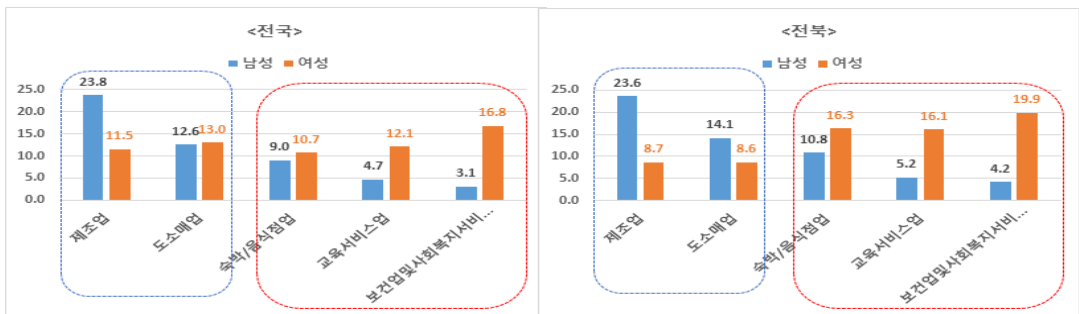
교육서비스업(1.9%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p) 등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정보통신업(-4.9%p),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p), 운수/창고업(-1.9%p) 등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그림 3-34] 전국 및 전북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전국과 전북의 주요 산업별 청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분야 순으로 취업 비중의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 주요 산업에 대한 성별 격차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전북 산업현장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청년**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분야는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해당 분야의 취업 비중 성별 격차는 전북이 더 컸음
- 청년**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해당 분야의 취업 비중 성별 격차는 전북이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청년여성 19.9%인 반면, 청년남성 4.2%에 불과하여 성별격차는 15.8%p 차이를 보였음



[그림 3-35] 전국 및 전북의 주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성별 비교

[표 3-20] 전국 및 전북 청년 산업별\*성별 취업 현황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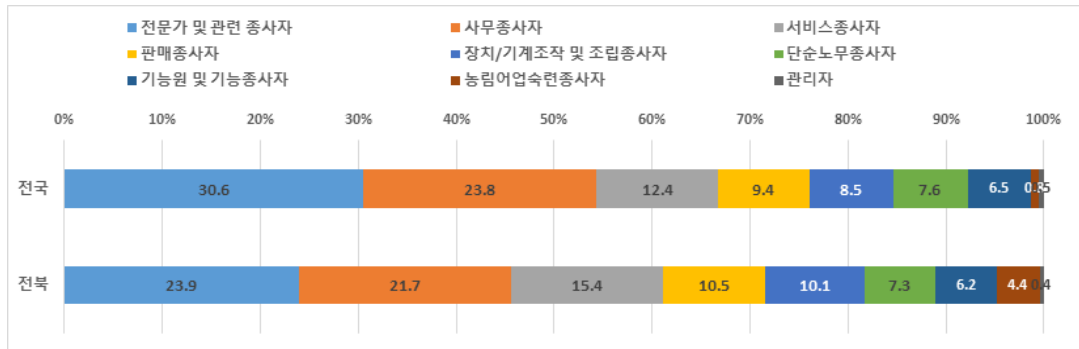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차이
농업,임업및어업	0.9	1.2	0.6	-0.6	5.0	6.2	3.5	-2.8
제조업	18.2	23.8	11.5	-12.3	17.1	23.6	8.7	-14.9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0.4	0.5	0.2	-0.3	0.6	0.8	0.3	-0.5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	0.4	0.6	0.1	-0.5	0.7	1.2	0.1	-1.1
건설업	5.0	7.6	1.8	-5.8	4.3	5.8	2.2	-3.6
도소매업	12.8	12.6	13.0	0.4	11.7	14.1	8.6	-5.5
운수/창고업	4.2	6.1	2.0	-4.1	2.3	3.8	0.5	-3.3
숙박/음식점업	9.8	9.0	10.7	1.7	13.1	10.8	16.3	5.5
정보통신업	6.1	6.5	5.7	-0.8	1.2	0.7	1.9	1.1
금융/보험업	2.9	2.4	3.5	1.1	3.2	2.7	3.8	1.1
부동산업	0.8	0.9	0.8	-0.1	0.4	0.4	0.3	-0.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	6.6	7.4	0.8	3.6	3.6	3.7	0.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3.7	4.2	3.1	-1.1	2.6	2.9	2.2	-0.8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4	4.7	4.0	-0.7	7.6	8.6	6.3	-2.2
교육서비스업	8.0	4.7	12.1	7.4	9.9	5.2	16.1	10.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3	3.1	16.8	13.7	11.0	4.2	19.9	15.8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6	2.5	2.6	0.1	1.7	2.0	1.4	-0.6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5	3.1	4.1	1.0	3.7	3.2	4.2	1.0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0	0.0	0.1	0.2	0.0	-0.2
전체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전국과 전북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전국은 상위 3개 직업의 비중이 66.8%였으며, 전북은 61.0%였다. 대신 전북의 경우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중이 4.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전국과 전북의 주요 직업별 청년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직업별 격차가 차이를 보였다.

- 전북 청년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분야에서 여성이 집중되어 남성의 직업별 분포와 큰 차이를 보였음. 반면, 청년남성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분야에 남성이 집중되어 여성의 직업별 분포와 큰 차이를 보였음



[그림 3-36]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직업별 취업 현황

한편, 청년남성의 경우 직업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청년여성의 경우 상위 3개 직업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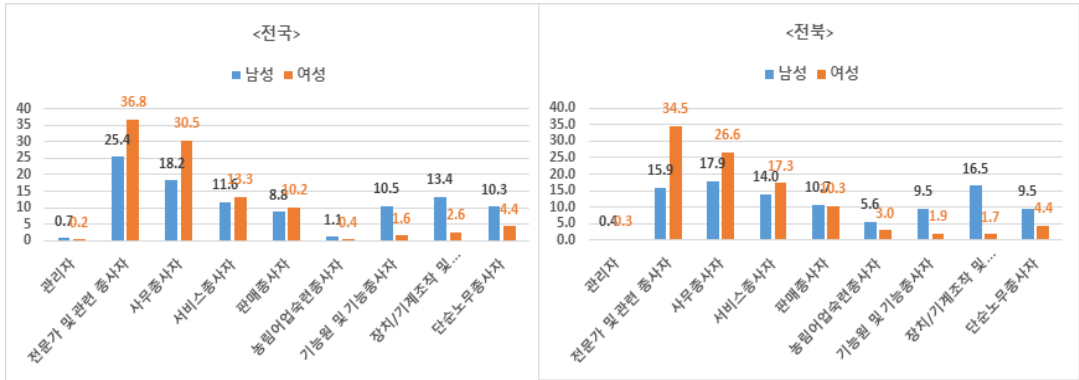
[표 3-21]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직업별\*성별 취업 현황

(단위: %, %p)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차이
관리자	0.5	0.7	0.2	-0.5	0.4	0.4	0.3	-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6	25.4	36.8	11.4	23.9	15.9	34.5	18.6
사무종사자	23.8	18.2	30.5	12.3	21.7	17.9	26.6	8.7
서비스종사자	12.4	11.6	13.3	1.7	15.4	14.0	17.3	3.3
판매종사자	9.4	8.8	10.2	1.4	10.5	10.7	10.3	-0.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8	1.1	0.4	-0.7	4.4	5.6	3.0	-2.6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6.5	10.5	1.6	-8.9	6.2	9.5	1.9	-7.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5	13.4	2.6	-10.9	10.1	16.5	1.7	-14.8
단순노무종사자	7.6	10.3	4.4	-5.9	7.3	9.5	4.4	-5.2
전체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3-37] 전국 및 전북의 주요 직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성별 비교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 형태

전국 및 전북 청년 취업자의 현 직장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전북 청년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4.7%로 전국 평균(70.3%)보다 -5.6%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 청년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남성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동일 성별 전국 평균값과의 차이도 유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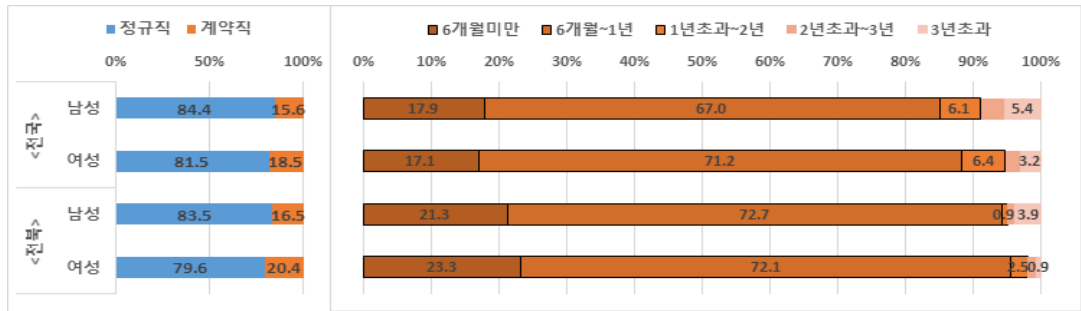
[표 3-22]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종사상지위별\*성별 취업 현황

(단위: %, %p)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상용근로자	70.3	70.6	70.1	-0.5	64.7	65.1	64.3	-0.8
임시/일용근로자	18.2	17.0	19.7	2.7	19.5	17.5	22.2	4.7
비임금근로자	11.4	12.4	10.2	-2.2	15.7	17.4	13.5	-3.9
전체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고용계약 현황을 보면, 전북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 전국 청년 평균 정규직 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비율에 대한 성별 격차는 전국은 청년여성이 -2.9%p 낮은 반면, 전북 청년여성은 -3.9%p 더 낮아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고용계약상태 현황

한편, 계약직 고용일 경우 계약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 청년남성 > 전국 청년여성 > 전북 청년남성 > 전북 청년여성 순으로 계약기간이 짧았으며, 전북 청년여성의 고용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고용계약상태 현황

(단위: %, %p)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정규직	83.1	84.4	81.5	-2.9	81.8	83.5	79.6	-3.9	
계약직	16.9	15.6	18.5		18.2	16.5	20.4		
계약기간	6개월미만	17.5	17.9	17.1	-0.8	22.3	21.3	23.3	2.0
	6개월~1년	69.1	67.0	71.2	4.2	72.4	72.7	72.1	-0.6
	1년초과~2년	6.3	6.1	6.4	0.2	1.7	0.9	2.5	1.6
	2년초과~3년	2.8	3.5	2.1	-1.4	1.1	1.1	1.1	0.0
	3년초과	4.3	5.4	3.2	-2.2	2.4	3.9	0.9	-3.0
전체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 청년 여성의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고, 청년남성과의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북 청년여성의 고용계약상태가 계약직 비율이 많고, 계약기간이 짧은 업무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단순비교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수준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국 보다 전북 청년들의 임금수준 성별격차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상용근로자일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청년여성이 약 97만원 적었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약 58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청년들의 임금수준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청년남성은 월 160시간 근무에 351만원으로 시간당 2.2만원, 청년여성은 월 149시간 근무에 254만원으로 시간당 1.7만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임시/일용직의 경우 청년남성은 1.3만원, 여성은 1.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임금격차<sup>3)</sup>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전국 상용근로자 청년 성별 임금격차는 69.9%로 나타났고, 임시·일용직의 청년 성별임금격차는 65.4%로 그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전북 청년의 상용근로자 성별임금격차는 72.3%로 전국 대비 다소 높았으나 임시·일용직의 청년 성별임금격차는 64.4%로 전북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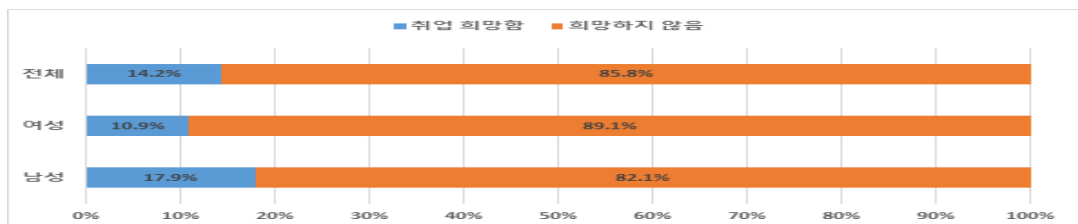
[표 3-24] 전국 및 전북 청년 성별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현황

(단위: 시간, 만원)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주당 근로시간	37.80	39.53	35.65	-3.87	37.50	39.48	34.82	-4.66	
총 근로 시간	상용근로자	39.12	40.12	37.50	-2.62	39.17	39.94	37.19	-2.75
	임시/일용	30.64	33.43	25.97	-7.46	29.51	30.21	22.47	-7.74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308.64	393.27	275.03	-118.24	278.71	351.43	254.19	-97.24
	임시/일용	167.67	198.88	130.15	-68.73	145.44	161.43	103.98	-57.4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현재 미취업 중인 전북 청년인구 중 14.2%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청년남성은 17.9%인 반면, 여성은 10.9%에 불과하였다.



[그림 3-39] 전북 성별 미취업 청년인구의 최근 한 달간 취업 희망 경험 여부

3) 성별임금격차란 남성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월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한편,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는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전공/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에 없을 것 같아서’ 3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청년남성은 ‘전공/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40.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청년여성은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에 없을 것 같아서(36.8%)’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여성의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응답문항의 성별차이를 보면, ‘전공/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등의 응답은 청년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대로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이전에 찾았었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등의 응답은 청년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음

[표 3-25] 전북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희망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전공/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수준/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이전에 찾았었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육아	통학	삼신 장애	기타
전체	38.3	35.7	3.7	14.0	4.3	1.1	1.5	0.9	0.5
남성	40.3	34.9	5.9	12.4	2.7	0.0	1.4	1.6	0.8
여성	35.2	36.8	0.4	16.4	6.7	2.7	1.7	0.0	0.0
차이	-5.1	1.9	-5.4	4.1	4.0	2.7	0.3	-1.6	-0.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전북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청년들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40%는 ‘정규교육기관 재학중’이라고 응답하여 미취업 청년의 상당수가 학생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육아/가사(22.8%)’, ‘쉬었음(19.6%)’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현재 활동 상태는 청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청년여성의 경우 ‘육아/가사’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성보다 38.6%p 더 높은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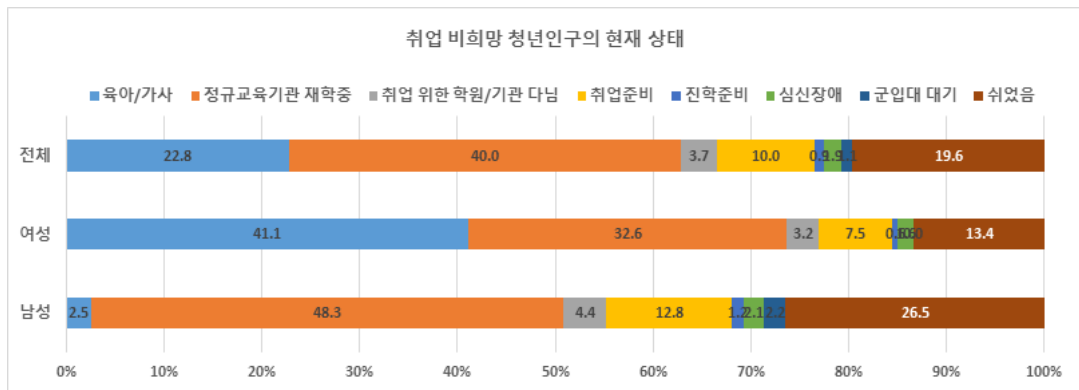
- 청년남성의 경우 '정규교육기관 재학중'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쉬었음'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음. 이러한 응답은 여성보다 각 15.7%p, 13.1%p 더 높은 비율이었음

[표 3-26] 전북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 비희망자의 현재 활동 상태

(단위: %)

구분	육아/가사	정규교육기관 재학중	취업 위한 학원/기관 다님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쉬었음
전체	22.8	40.0	3.7	10.0	0.9	1.9	1.1	19.6
남성	2.5	48.3	4.4	12.8	1.2	2.1	2.2	26.5
여성	41.1	32.6	3.2	7.5	0.6	1.6	0.0	13.4
차이	38.6	-15.7	-1.2	-5.3	-0.6	-0.5	-2.2	-13.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3-40] 전북 미취업 청년인구 중 취업 비희망자의 현재 활동 상태

## 다. 청년 주거 관련 현황<sup>4)</sup>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가구 유형

전국 청년의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동거가구'가 5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거주하는 1인가구 22.6%, 부부가구 13.3%, 기타동거가구 6.8%로 나타났다. 전국 청년 100명 중 약 57명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청년의 경우 부모동거가구 55.9%, 1인가구 23.7%, 부부가구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7] 전국 시도별 청년가구 유형(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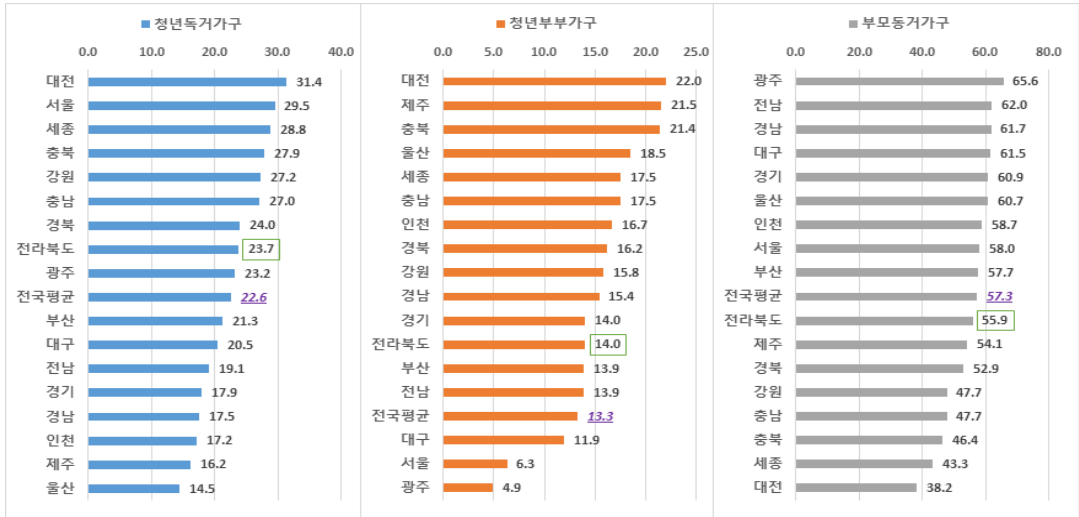
구분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
전국평균	22.6	13.3	57.3	6.8
서울	29.5	6.3	58.0	6.2
부산	21.3	13.9	57.7	7.1
대구	20.5	11.9	61.5	6.1
인천	17.2	16.7	58.7	7.3
광주	23.2	4.9	65.6	6.3
대전	31.4	22.0	38.2	8.5
울산	14.5	18.5	60.7	6.3
세종	28.8	17.5	43.3	10.5
경기	17.9	14.0	60.9	7.2
강원	27.2	15.8	47.7	9.3
충북	27.9	21.4	46.4	4.4
충남	27.0	17.5	47.7	7.7
전북	23.7	14.0	55.9	6.4
전남	19.1	13.9	62.0	5.0
경북	24.0	16.2	52.9	6.9
경남	17.5	15.4	61.7	5.4
제주	16.2	21.5	54.1	8.2

주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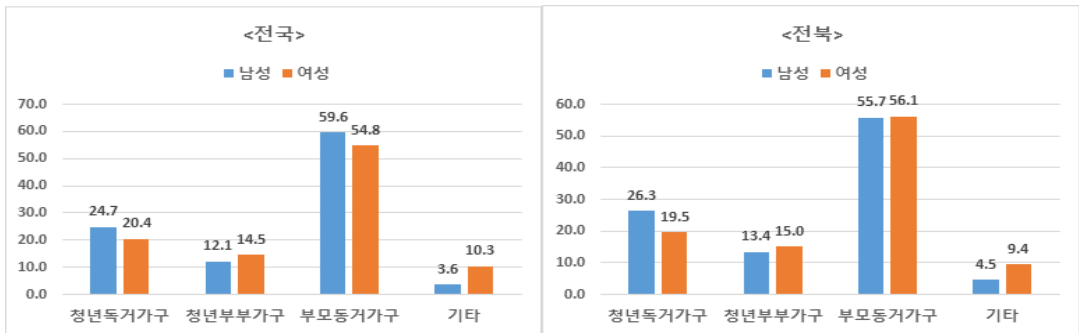
4) 전북 청년의 주거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삶 실태조사(2022)」를 재분석함. 본 조사의 전체 표본수는 19~34세 청년 14,966명이며, 이 중 전북 청년은 72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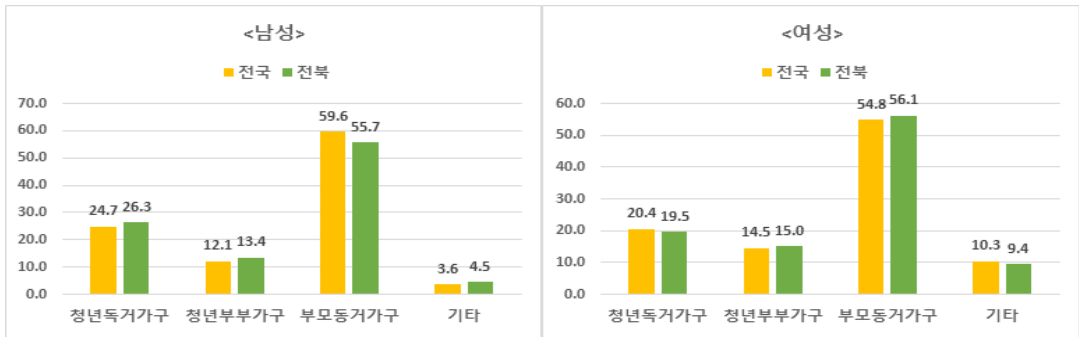
17개 시도 청년 가구유형의 상대적 비율을 비교해보면, 부모동거가구 비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1인가구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17개 시도 중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부가구 비율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지만 17개 시도 중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3-41] 전국 시도별 청년가구 유형별 구성비(2022)

한편, 전북 청년 가구유형을 성별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청년남성은 1인가구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청년여성은 부부가구, 기타가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전국과 전북을 비교해보면, 전북 청년남성의 1인가구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반면, 부모동거가구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 청년여성의 경우 부모 동거가구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그 외에 유형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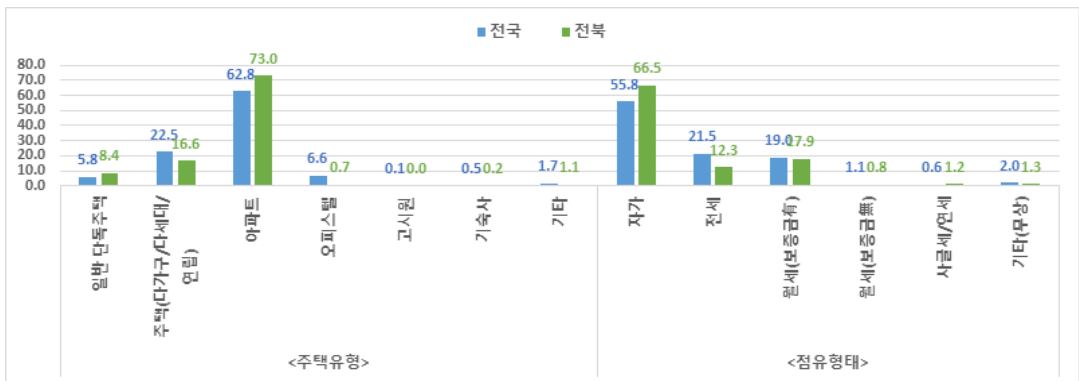


[그림 3-42]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 가구유형 비교(2022)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주거 현황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 및 전북 모두 아파트와 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 및 전북 청년 모두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의 경우 전북에 비해 주택 유형 비중이 더 높았고, 반대로 전북은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전국 및 전북 청년 가구주의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국 및 전북 모두 '자가' 비중이 전국 55.8%, 전북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볼 수 있는 전세 비중까지 합쳐보면, 전국 77.3%, 전북 78.8%로 전북 청년의 안정적 주거비율이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한편, 전북 청년의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를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비율은 남성 71.4%, 여성 75.3%로 여성이 3.9%p 더 높았고, 주택 비율은 남성 17.4%, 여성 15.4%로 남성이 2.0%p 더 높았다.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비율은 남성 65.9%, 여성 67.5%로 여성이 1.6%p 더 높았고, 전세 비율은 남성 11.9%, 여성 12.9%로 여성이 1.0%p 가량 더 높은 수준이었다.

[표 3-28]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2022)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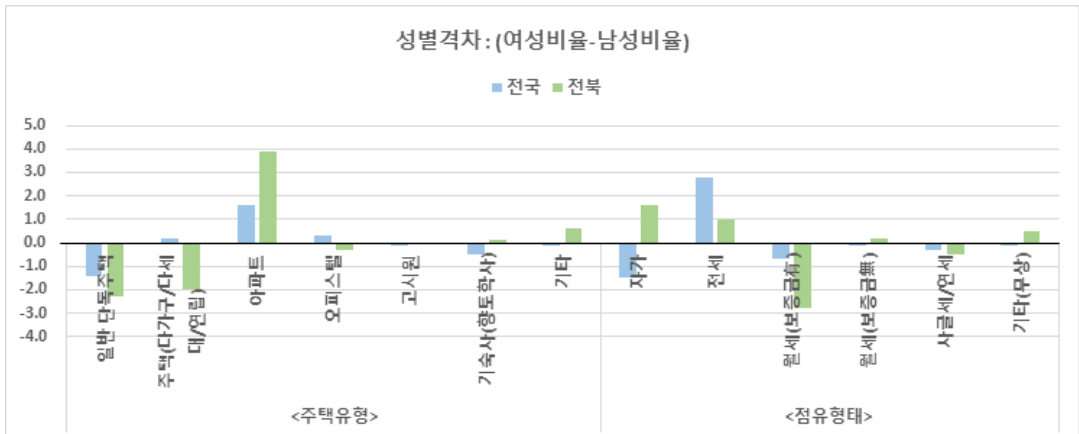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5.8	6.4	5.0	-1.4	8.4	9.3	7.0	-2.3
	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	22.5	22.4	22.6	0.2	16.6	17.4	15.4	-2.0
	아파트	62.8	62.0	63.6	1.6	73.0	71.4	75.3	3.9
	오피스텔	6.6	6.5	6.8	0.3	0.7	0.8	0.5	-0.3
	고시원	0.1	0.2	0.1	-0.1	0.0	0.0	0.0	0.0
	기숙사(항토학사)	0.5	0.7	0.2	-0.5	0.2	0.1	0.2	0.1
	기타	1.7	1.8	1.7	-0.1	1.1	1.0	1.6	0.6
점유 형태	자가	55.8	56.5	55.0	-1.5	66.5	65.9	67.5	1.6
	전세	21.5	20.1	22.9	2.8	12.3	11.9	12.9	1.0
	월세(보증금有)	19.0	19.3	18.6	-0.7	17.9	19.0	16.2	-2.8
	월세(보증금無)	1.1	1.1	1.0	-0.1	0.8	0.7	0.9	0.2
	사글세/연세	0.6	0.8	0.5	-0.3	1.2	1.4	0.9	-0.5
	기타(무상)	2.0	2.1	2.0	-0.1	1.3	1.1	1.6	0.5
전체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주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전북 청년의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에 대한 성별격차를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전국 및 전북 모두 아파트 비율 격차는 여성이 더 높았으나 전북 청년여성이 더 높아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자가 비율 격차는 전국의 경우 남성이 1.5%p 더 높았으나, 반대로 전북은 여성이 1.6%p 더 높아 전국 분포와 차이를 보였다. 전세 비중의 경우 전국 및 전북 모두 여성이 더 높았고, 성별격차는 전국평균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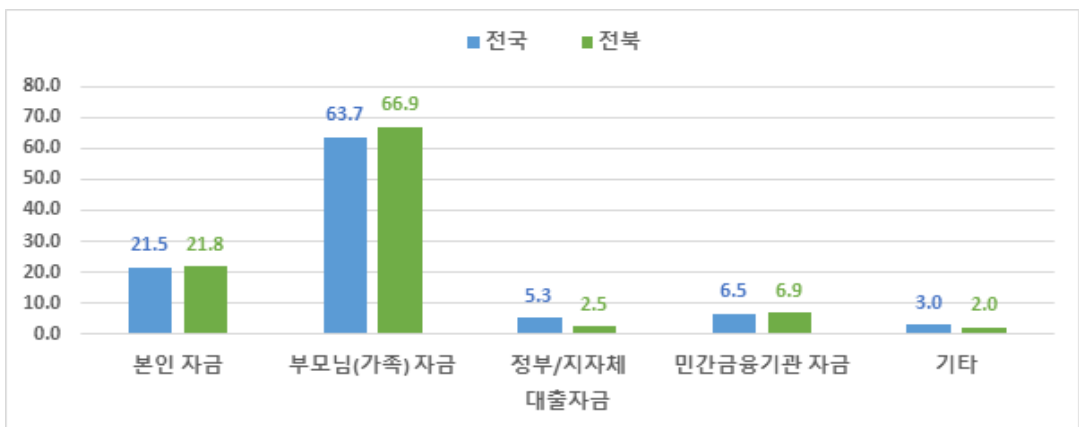
전북 청년의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를 정리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주택유형, 점유 형태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자가+전세 비율 성별격차 2.6%p).



[그림 3-44] 전국 및 전북 청년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의 성별격차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층의 주거 불안(부담) 현황

한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입 자금 또는 임차 자금(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국 및 전북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조달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금 조달방법 비율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만 전국의 경우 전북에 비해 '정부/지자체 대출자금' 비율이 전북보다 약 3%p 더 높았고, 전북은 '부모님' 자금이라는 응답이 약 3%p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3-45]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주택자금 마련 방법

한편, 전북 청년의 주거비 마련 방법을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남성은 본인자금, 부모님 지원 응답이 여성보다 소폭 높았고, 여성은 정부/지자체 통한 조달 비율이 남성보다 소폭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공적자금인 정부/지자체 자금 활용 비율이 전국 성별 평균에 2배씩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본인/부모님 등의 개인 사적 자금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 전국 청년남성의 정부/지자체 대출자금 이용 비율 4.7%, 전북 2.1%
- 전국 청년여성의 정부/지자체 대출자금 이용 비율 6.0%, 전북 3.1%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님(72.0%)' 지원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자금(41.3%)' 조달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상태에 따라 '정부/지자체 대출자금' 비율이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7.1%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전국평균(15.0%) 보다 약 8%p 낮은 수준이었다.

[표 3-29]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주택자금 마련 방법(1순위)

(단위: %)

구분		본인 자금	부모님 또는 가족 자금	정부/지자체 대출자금	민간금융기관 자금	기타	
전국	전체	21.5	63.7	5.3	6.5	3.0	
	성별	남성	21.6	65.4	4.7	5.6	2.7
		여성	21.5	61.8	6.0	7.4	3.3
	혼인상태	배우자(有)	48.2	18.7	15.0	13.5	4.6
		배우자(無)	15.8	73.3	3.3	5.0	2.6
	부모동거	동거	4.9	87.2	1.9	5.0	1.0
		비동거	44.0	31.9	10.0	8.5	5.6
전북	전체	21.8	66.9	2.5	6.9	2.0	
	성별	남성	22.1	67.9	2.1	6.5	1.5
		여성	21.3	65.3	3.1	7.6	2.7
	혼인상태	배우자(有)	41.3	45.1	7.1	5.3	1.3
		배우자(無)	17.2	72.0	1.4	7.3	2.1
	부모동거	동거	4.6	84.3	0.5	9.2	1.5
		비동거	44.2	44.1	5.1	4.0	2.6

주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주거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국 및 전북 모두 '이사/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부족' 경험률이 가장 많았다. 전북 청년의 경우 여성은 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공과금/관리비 연체 경험이 남성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보증금 부족 경험률이 더 높았고, 부모동거 여부별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불안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에 따른 주거불안 경험률(2022)

(단위: %)

구분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	이사/계약갱신 때 임대보증금 부족	3개월 이상 공과금/관리비 연체	임대인과의 갈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전국	전체	1.6	4.9	1.2	2.3	1.3	
	성별	남성	1.9	4.3	1.4	2.0	1.4
		여성	1.2	5.6	1.1	2.6	1.1
	혼인 상태	배우자(有)	0.9	9.0	1.1	2.8	2.5
		배우자(無)	1.7	4.1	1.3	2.2	1.0
	부모 동거	동거	0.7	2.3	0.9	1.4	0.8
		비동거	2.7	8.5	1.7	3.5	2.0
전북	전체	1.8	4.9	2.2	1.4	1.3	
	성별	남성	1.6	4.7	2.1	1.6	1.3
		여성	2.1	5.3	2.3	1.2	1.3
	혼인 상태	배우자(有)	1.3	12.2	1.3	3.1	0.0
		배우자(無)	1.9	3.2	2.4	1.0	1.6
	부모 동거	동거	0.9	2.0	1.0	0.5	1.4
		비동거	2.9	8.7	3.8	2.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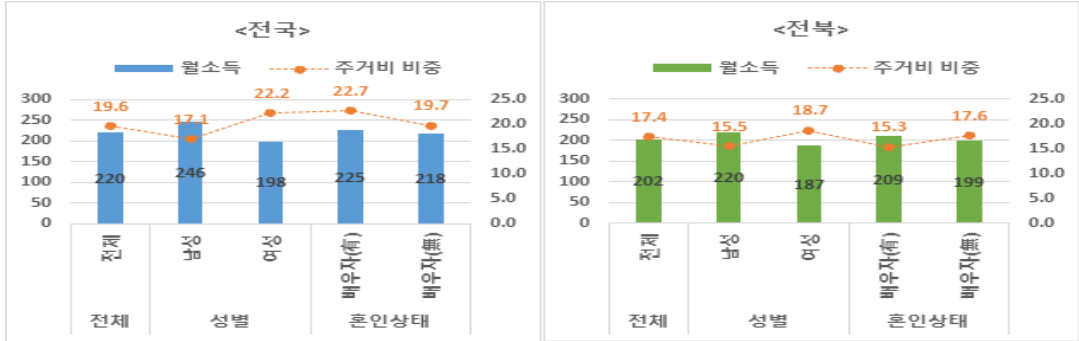
주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전국 및 전북 독립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sup>5)</sup>을 살펴보면, 전국 청년들은 주거비로 월소득의 19.6%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일 경우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가장 높아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주거비 부담 비중이

5)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들로 한정할 이유는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비와 관련된 사항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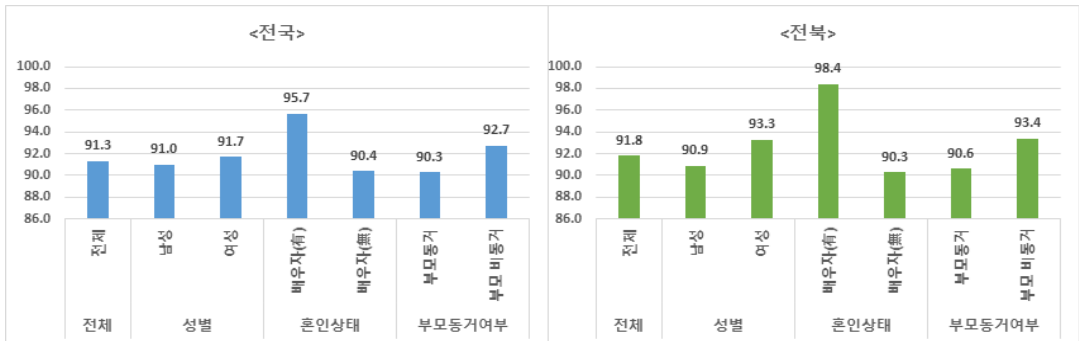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17.4%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일 경우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북 청년여성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6] 전국 및 전북 독립 청년가구의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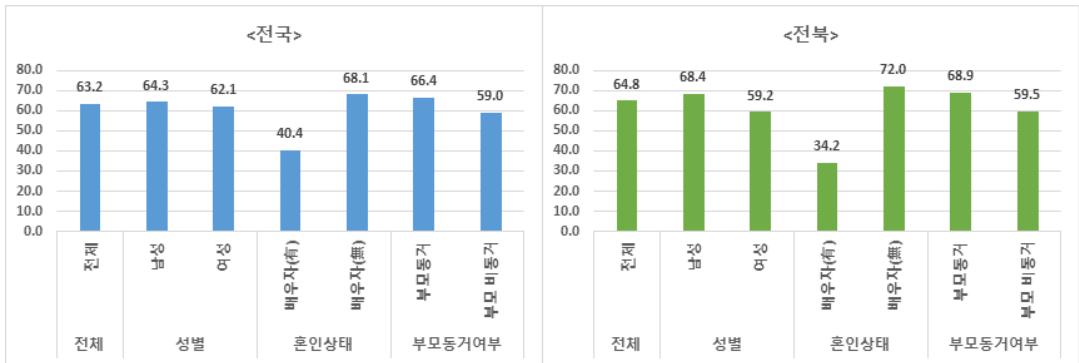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층의 주거 소유 필요성 인식

청년들의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국 청년의 91.3%가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일 경우,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동거 여부별로는 독립한 경우에 필요성이 더 높았다. 전북 청년의 경우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91.8%가 자가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일 경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독립한 경우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응답자 특성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3-47]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

한편, 기회가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자가 소유 필요성에 비하면 욕구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의향도는 63.2%였으며, 전북의 경우 소폭 높은 64.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혼인상태에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0%에 그쳤고, 특히 전북 청년의 경우 34.2%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부모동거 여부별로는 현재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의 욕구가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전북 청년의 경우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3-48]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응답이 4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23.9%, 주거비(월세) 1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인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응답자 특성 중 배우자가 있는 청년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북 청년의 경우 역시 ‘주택구입자금 대출’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두 번째로는 주거비(월세)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나 전국평균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북 청년들의 욕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 그룹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지원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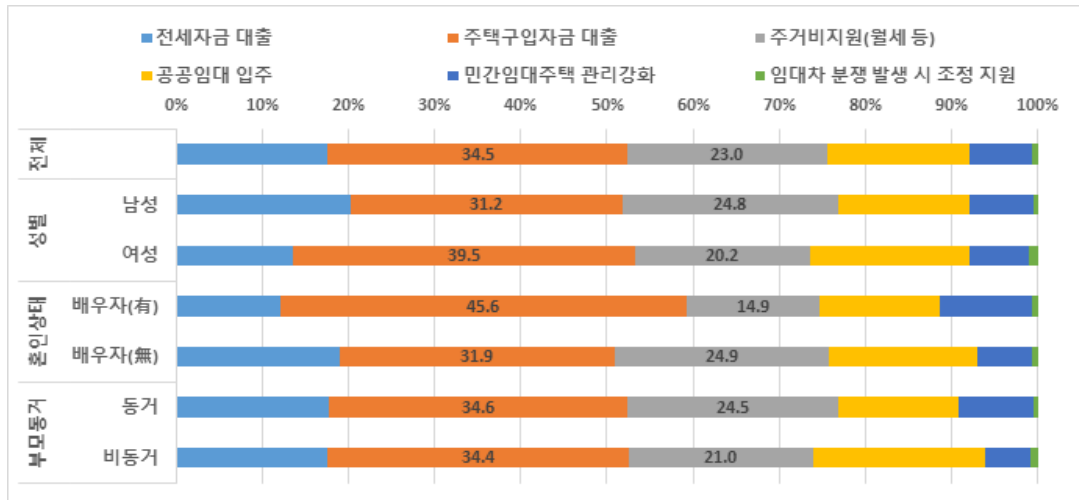
[표 3-31] 전국 및 전북 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2022)

(단위: %)

구분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지원(월세 등)	공공임대 입주	민간임대주택 관리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조정 지원	
전국	전체	23.9	41.0	17.3	11.8	4.2	1.0	
	성별	남성	23.8	41.4	16.7	12.0	4.1	1.1
		여성	23.9	40.5	18.0	11.6	4.4	0.8
	혼인 상태	배우자(有)	18.8	63.0	6.2	5.0	4.4	0.8
		배우자(無)	25.0	36.3	19.7	13.2	4.2	1.0
	부모 동거	동거	23.9	38.4	17.8	13.5	4.7	0.9
		비동거	23.8	44.4	16.7	9.4	3.6	1.0
전북	전체	17.5	34.5	23.0	16.4	7.2	0.7	
	성별	남성	20.0	31.2	24.8	15.1	7.3	0.5
		여성	13.5	39.5	20.2	18.4	7.0	1.0
	혼인 상태	배우자(有)	11.7	45.6	14.9	13.5	10.5	0.6
		배우자(無)	18.9	31.9	24.9	17.1	6.4	0.7
	부모 동거	동거	17.7	34.6	24.5	14.0	8.7	0.5
		비동거	17.3	34.4	21.0	19.6	5.2	0.9

주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49] 전북 청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

## 라. 청년의 삶 관련 현황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학력 수준 및 졸업 후 진로 현황

전국과 전북의 청년인구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전북은 전국에 비해 고졸이하, 대학교 졸업 학력자가 더 많고,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졸 이상 비율은 전국 81.2%, 전북 78.5%로 나타났다.

- 전북 청년여성은 청년남성 대비 대학, 대학원 졸업 비중이 높았음. 청년여성의 대졸이상 비율은 79.2%로 청년남성(77.9%)에 비해 대졸 이상 비율이 1.3%p 더 높았음. 대학원 졸업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1.6%p 더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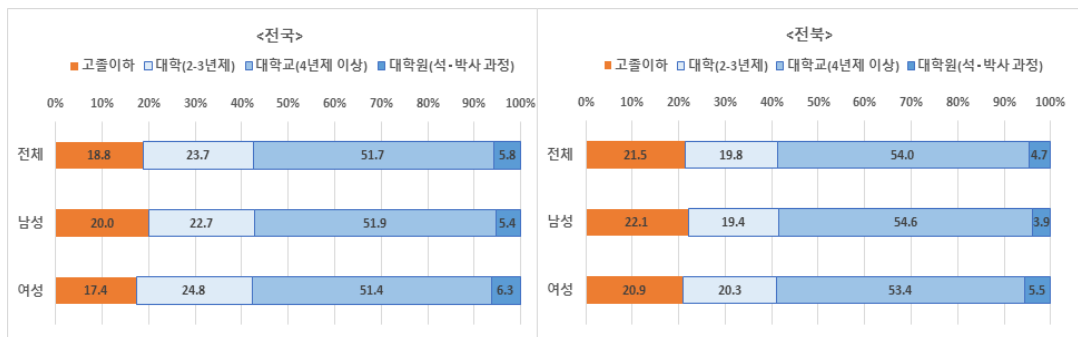
[표 3-32]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의 학력 현황

(단위: %)

구분	전국				전북			
	전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남성	여성	차이
고졸이하	18.8	20.0	17.4	-2.6	21.5	22.1	20.9	-1.2
대학(2-3년제)	23.7	22.7	24.8	2.1	19.8	19.4	20.3	0.9
대학교(4년제 이상)	51.7	51.9	51.4	-0.5	54.0	54.6	53.4	-1.2
대학원(석박사 과정)	5.8	5.4	6.3	0.9	4.7	3.9	5.5	1.6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주 : 20~39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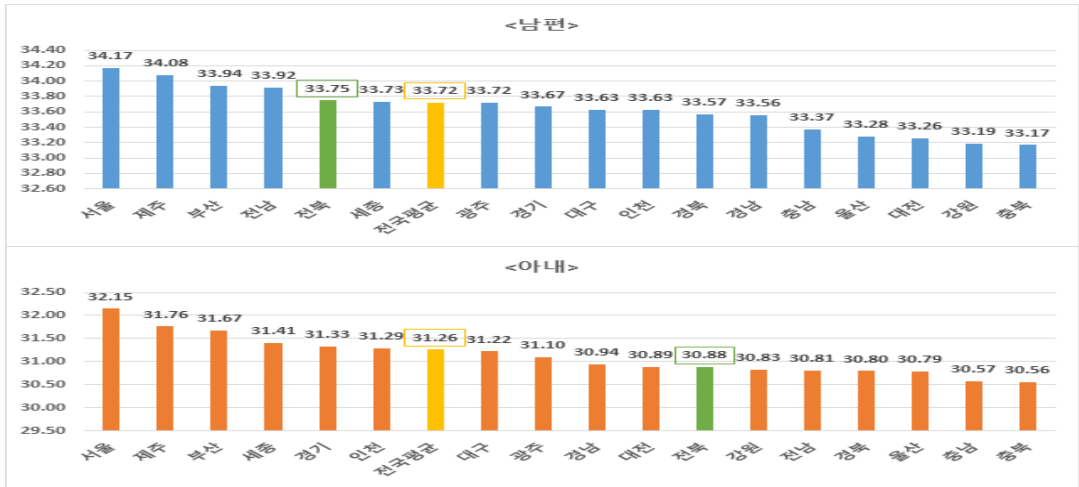


[그림 3-50] 전국 및 전북 청년인구의 학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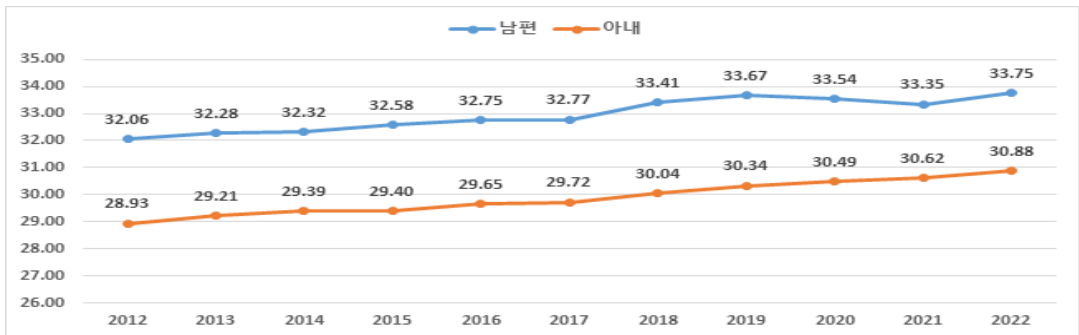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 관련 현황

‘22년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국 평균 33.72세였으며, 전북의 경우 33.75세로 평균을 상회하였고,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국 평균 31.26세였으며, 전북의 경우 30.88세로 평균을 하회하였고, 17개 시도 중에서 7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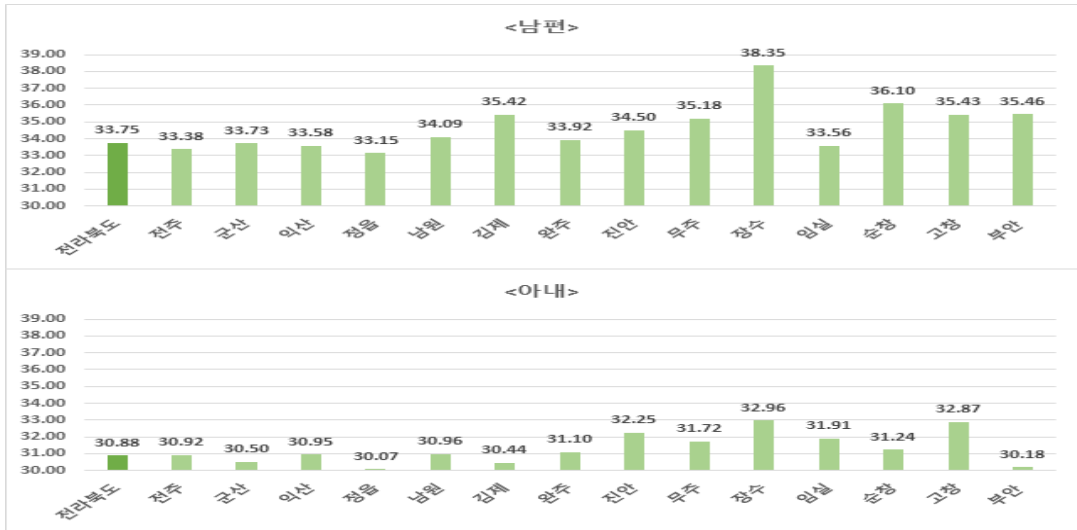
[그림 3-51] 전국 시도별\*성별 초혼연령

전북의 초혼연령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초혼연령의 증가는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남성은 ‘12년 대비 1.69세 증가, 여성은 ‘12년 대비 1.95세 증가).



[그림 3-52] 전북 성별 초혼연령 추이

한편, 전북 시군별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반적으로 군 지역의 초혼연령이 시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장수군의 초혼연령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3] 전북 시군별\*성별 초혼연령

전국 및 전북 청년층의 성별\*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천명당 건)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청년층이 혼인을 미루면서 혼인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후반 결혼건수가 '12년도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혼인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유일하게 3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결혼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청년층 전체로 놓고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건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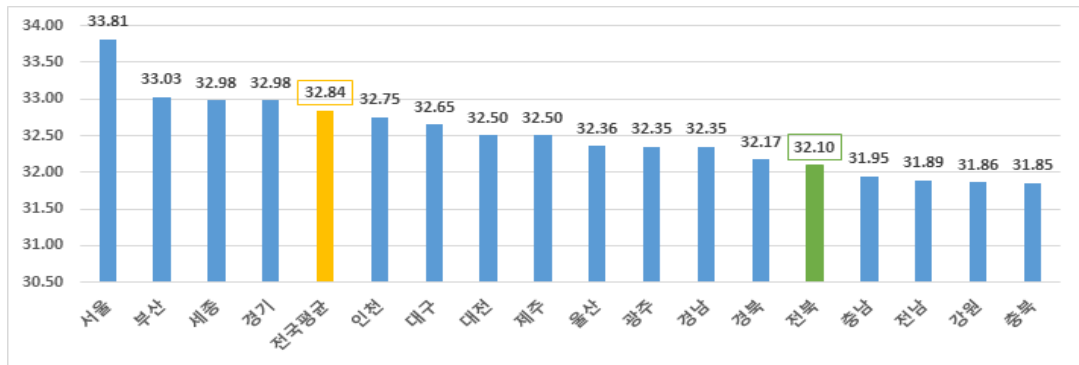
[표 3-33] 전국 및 전북 청년의 성별\*연령별 혼인을 추이(2012~2022)

(단위: 해당연령 천명당 건)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12vs'22	
전국	남성	20~24세	5.3	5.3	4.5	3.7	2.9	2.6	-2.7
		25~29세	48.2	42.7	36.8	31.3	25.2	20.4	-27.8
		30~34세	63.4	61.0	59.3	55.9	47.6	40.3	-23.1
		35~39세	23.4	24.1	24.3	23.8	20.5	20.9	-2.5
	여성	20~24세	18.5	16.0	13.8	11.5	8.0	7.0	-11.5
		25~29세	80.3	73.6	66.5	57.0	44.9	35.7	-44.6
		30~34세	50.0	50.3	50.1	49.2	44.0	41.3	-8.7
	35~39세	13.4	14.9	15.6	16.0	14.3	15.0	1.6	
전북	남성	20~24세	6.6	5.8	5.0	4.0	3.4	3.0	-3.6
		25~29세	45.9	41.2	35.5	28.2	24.0	20.5	-25.4
		30~34세	54.7	53.1	51.1	46.8	42.9	36.7	-18.0
		35~39세	22.3	23.3	22.1	21.4	19.4	19.2	-3.1
	여성	20~24세	18.5	15.7	13.2	10.3	8.1	6.4	-12.1
		25~29세	78.4	71.7	63.2	52.1	44.7	35.5	-42.9
		30~34세	42.6	45.2	44.1	43.0	39.8	37.9	-4.7
	35~39세	11.4	13.4	13.3	14.0	12.7	13.3	1.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2).

전국 시도별 모(母)의 평균 첫 자녀 출산연령을 보면, 전국 평균 32.84세였으며, 전북은 이 보다 낮은 32.10세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의 증가로 첫 자녀 출생도 늦어지는 가운데 전북은 평균 30.88세에 결혼하여 32.10세에 첫 자녀 출산으로 이어져 결혼 후 약 1년 정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 전국 시도별 첫 자녀 출산연령

전국 및 전북의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전국에 비해 출산연령이 낮았다. 전북은 전국보다 30대 초반 이하 출산율이 높았고, 30대 후반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전북의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 단위보다 군 단위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군 단위 30대 초반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4] 전국 및 전북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2022)

(단위: 해당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명)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0.4	4.1	24.0	73.5	44.1	8.0	0.2
전북	0.6	5.8	30.6	77.4	40.2	6.8	0.2
전주	0.6	3.8	25.6	71.1	36.9	6.0	0.2
군산	0.5	8.9	34.1	83.5	38.7	7.4	0.2
익산	0.1	6.1	31.4	75.4	34.6	5.1	0.1
정읍	1.3	12.2	30.6	82.7	41.5	9.9	0.0
남원	0.6	4.2	35.6	83.9	55.5	8.8	0.0
김제	1.3	7.8	45.3	104.6	70.0	8.4	0.4
완주	0.5	6.9	41.4	75.8	40.3	6.0	0.3
진안	2.5	0.0	32.1	114.8	76.1	6.8	1.7
무주	0.0	5.2	43.9	79.3	35.2	5.7	0.0
장수	0.0	11.7	38.1	93.8	41.0	17.4	0.0
임실	0.0	8.1	76.7	147.1	60.4	19.5	0.0
순창	1.8	4.5	16.4	80.3	55.6	3.1	0.0
고창	2.2	6.6	37.9	78.6	50.9	11.7	0.0
부안	0.0	11.8	31.7	68.9	48.8	9.7	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2).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향후 결혼 및 출산의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의향에 대해서는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인식은 75%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성별과 부모동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여성이,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별 차이는 전북 청년층에서 좀 더 큰 격차를 보였고, 전북 청년 여성의 경우 전국 청년 여성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전북 청년의 결혼의향은 남성 80.3%, 여성 67.2%로 성별격차는 약 13%p 차이를 보였고, 부모 동거 73.5%, 부모 비동거 79.7%로 격차는 약 6%p

향후 출산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 청년 평균은 63.3%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북 청년은 60.8%로 전북 청년의 출산의향이 소폭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여성, 부모동거 여부별로는 독립청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북 청년의 출산의향은 남성 65.7%, 여성 53.1%로 성별격차는 약 13%p 차이를 보였고, 부모 동거 64.1%, 부모 비동거 56.4%로 격차는 약 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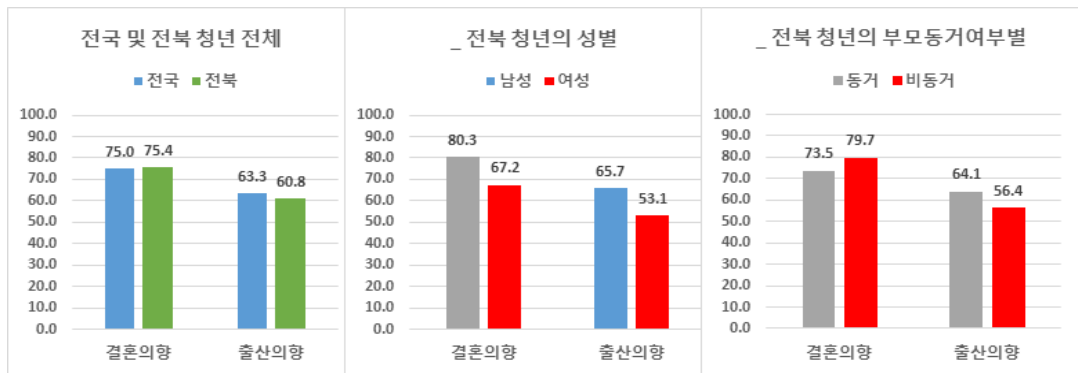
[표 3-35]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의향(2022)

(단위: %)

구분	결혼의향		출산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국	전체	75.0	25.0	63.3	36.7	
	성별	남성	79.7	20.3	70.5	29.5
		여성	69.3	30.7	55.3	44.7
	부모 동거	동거	74.0	26.0	64.2	35.8
비동거		77.4	22.6	62.0	38.0	
전북	전체	75.4	24.6	60.8	39.2	
	성별	남성	80.3	19.7	65.7	34.3
		여성	67.2	32.8	53.1	46.9
	부모 동거	동거	73.5	26.5	64.1	35.9
비동거		79.7	20.3	56.4	43.6	

주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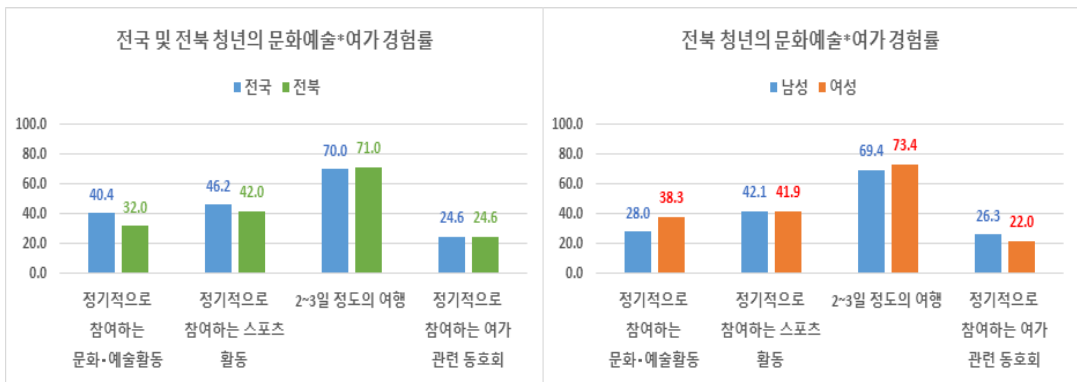
[그림 3-55]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의향

## ■ 성별에 따른 전북 청년의 문화예술여가 관련 현황

전국 및 전북 청년층의 문화예술여가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청년들은 '2~3일 정도의 여행'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평균과 전북을 경험률을 비교해보면 전북 청년의 문화예술여가 경험률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경험률은 32.0%로 전국 평균(40.4%)보다 약 8%p 낮았고, 스포츠활동 참여는 약 4%p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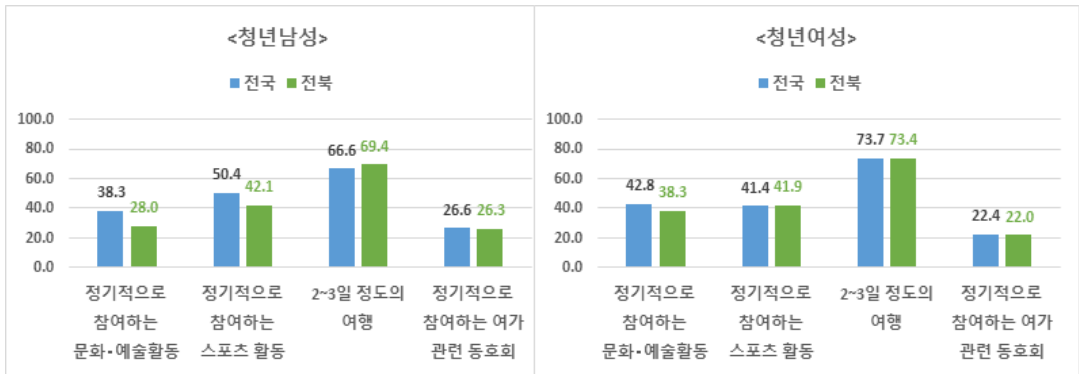
전북 청년층의 문화예술여가 경험률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가 관련 동호회 활동 경험률을 제외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약 10%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6] 전국 및 전북 청년의 문화예술여가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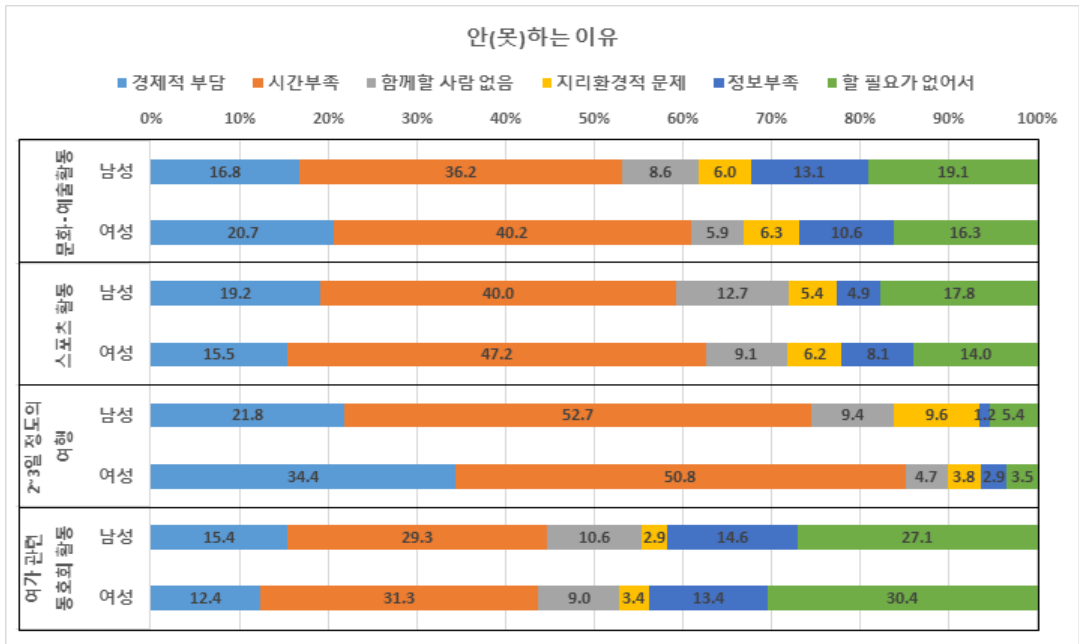
청년층의 문화예술여가 경험률을 성별로 구분하여 전국과 전북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청년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북 청년남성의 경험률이 전국 남성 평균 경험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북 청년남성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 경험률이 전국 남성 평균에 비해 10%p 가량 낮은 수준이었고, 스포츠 활동은 약 8%p 낮은 수준이었다.

청년여성의 경우도 전국 여성 평균 경험률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활동 경험률이 전국 여성 평균에 비해 약 4%p 더 낮게 나타난다. 그 외 항목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57] 전국 및 전북 청년의 문화예술여가 경험을 성별 비교

한편, 전북 청년들이 문화예술여가를 안(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별로 비교해 살펴보면, 상대적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부족’ 이유가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했던 ‘2~3일 정도의 여행’ 활동의 경우 이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4.4%로 남성에 비해 약 12%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8] 전북 청년들이 문화예술여가활동을 안(못)하는 이유

[표 3-36] 전국 및 전북 청년들의 문화예술여가 경험 현황(2022)

(단위: %)

구분	경험률	안(못) 한 이유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함께할 사람 없음	지리환경적 문제	정보부족	할 필요가 없어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등	전국	40.4	17.8	45.1	5.6	2.9	10.8	17.9
	남성	38.3	16.9	42.9	6.0	2.9	10.6	20.7
	여성	42.8	18.8	47.8	5.0	2.9	11.0	14.5
	전북	32.0	18.2	37.6	7.7	6.1	12.2	18.1
	남성	28.0	16.8	36.2	8.6	6.0	13.1	19.1
	여성	38.3	20.7	40.2	5.9	6.3	10.6	16.3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전국	46.2	16.9	48.4	8.8	3.1	6.2	16.5
	남성	50.4	16.9	49.1	9.6	3.0	5.0	16.3
	여성	41.4	17.0	47.7	8.0	3.2	7.4	16.7
	전북	42.0	17.8	42.8	11.3	5.7	6.1	16.3
	남성	42.1	19.2	40.0	12.7	5.4	4.9	17.8
	여성	41.9	15.5	47.2	9.1	6.2	8.1	14.0
2~3일 정도의 여행	전국	70.0	29.6	49.4	7.2	2.8	2.1	8.9
	남성	66.6	27.7	48.2	8.1	3.2	2.0	10.9
	여성	73.7	32.3	51.1	5.9	2.2	2.2	6.2
	전북	71.0	26.3	52.0	7.7	7.5	1.8	4.7
	남성	69.4	21.8	52.7	9.4	9.6	1.2	5.4
	여성	73.4	34.4	50.8	4.7	3.8	2.9	3.5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동호회	전국	24.6	10.1	33.1	8.9	1.9	11.3	34.7
	남성	26.6	10.9	32.9	8.7	2.1	11.2	34.2
	여성	22.4	9.2	33.3	9.1	1.8	11.4	35.2
	전북	24.6	14.2	30.2	10.0	3.1	14.1	28.4
	남성	26.3	15.4	29.3	10.6	2.9	14.6	27.1
	여성	22.0	12.4	31.3	9.0	3.4	13.4	30.4

주 : 결과값은 모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임.

자료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3. 요약 및 시사점

#### 1) 전북 청년정책 현황 분석

전라북도 청년정책은 2017년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매년 확대 및 발전되었다. 2023년 기준 14개 시군의 지역 청년 대상의 청년종합실태조사가 2017년과 2021년 두 번 실시되었으며,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라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 1·2차가 수립되어 기본계획을 통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시행되고 있다.

2015년 청년 고용과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위한 팀단위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래 2017년 청년정책 TF팀 운영, 2020년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신설, 2021년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신설 및 확대되었다. 이는 전라북도 내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전라북도 조직도상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조직 규모와 인력이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 80건의 사업, 예산 144,136백만원에서, 2023년 94건의 사업, 예산 316,494백만원으로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들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응하는 포괄적 정책으로 확장되었지만, 전북도는 부서별 시행해 왔던 사업들을 단순 취합하는 방식으로 구성 및 조정하는 차원에 머물게 된다면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이 담긴 청년들의 주요 이슈와 현상을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와 이념 및 방향성에 부합한 것인지 혹은 청년정책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인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전북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포괄하면서 보편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고, 성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굴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다영역의 청년 정책들이 청년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 및 지원의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중요성 강화와 청년 수요자 입장과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

## 2) 전북 청년 현황과 성별 요구도 분석

### ■ 전북 청년인구 통계 현황

전국 청년인구 비중은 26.9%인 반면, 전북 청년인구 비중은 22.8%로 전국 평균 대비 -4.1%p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의 청년인구는 물리적 숫자도 수도권 및 광역 자치도에 집중되어 그 수 자체가 적을뿐더러 지역 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아 전북 청년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인구의 성별 비중은 청년 여성의 비중이 전국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전북 청년인구 중 여성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청년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청년여성 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 청년정책의 진단 과정에서 성별을 초점으로 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청년인구가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14개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청년인구 중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전체 여성인구 중 청년층 비중도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 군 단위 청년층의 주요 도시 쏠림 현상 완화 방안과 청년여성 유출방지 및 유입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은 생애주기 상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청년 1인가구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전북 청년층 1인가구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전국 현상과 마찬가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1인가구의 시작은 20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20대 초반인 대학생 시기에 1인가구를 선택하여 20대 중반인 졸업생 시기에 1인가구를 선택하는 청년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1인가구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 1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전북 청년층 1인가구는 성별로 볼 때 남성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여성 1인가구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북의 청년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구이동통계를 살펴본 결과, 매년 청년인구는 타 시도로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북도로 유입되는 청년인구보다 유출되는 청년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대에 활발하게 이동이 일어나며, 30대로 갈수록 둔화된다. 이는 대학교를 전북도 외로 선택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청년 여성에게서 집중된다. 남성보다 여성의 이동이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일어난다. 청년여성의 경우 20대가 되자마자 일찌감치 전북도를 벗어나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20대 초반(대학생)의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인구 이동(순유출)이 집중되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여성의 이동이 '순유입'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 전북 청년의 일자리 관련 통계 현황

전북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으나 그 차이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전북 청년 경제활동의 추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청년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 전국과의 격차 감소를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격차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를 연령구간별로 구분해보면, 청년여성의 경우 25~29세 구간에 결혼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이 나타나고, 30~34세 구간에 들어서면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성인지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북 청년층의 일자리 관련 정책의 경우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성인지적 요소를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북의 주요 산업별 청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산업에 대한 성별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해당 분야의 취업 비중 성별 격차는 전북이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청년여성 19.9%인 반면, 청년남성 4.2%에 불과하여 성별격차는 15.8%p 차이를 보였다. 이에 전북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특정 산업군에 특정 성별이 집중되지 않고, 전북 청년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산업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현황을 보면, 전북 청년층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 형태는 계약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전북 청년 일자리의 계약직 비율은 청년남성 보다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계약기간 역시 짧아 청년여성들의 고용불안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임금수준을 보면,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청년남성은 시간당 2.2만원을 받는데 반해, 청년여성은 1.7만으로 동일시간 기준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는 청년 일자리 사업 정책 추진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청년여성으로 하여금 미취업 상태로 빠지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미취업 청년여성의 89.1%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다(남성의 경우 82.1%). 한편, 이들의 현재 상태는 '육아/가사' 상태가 41.1%였고, 일자리의 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급여수준까지 낮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육아/가사' 활동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전북 청년의 주거 관련 통계 현황

전북 청년층의 가구유형을 보면, 청년 100명 중 약 56명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5.7%, 여성 56.1%였으며 전국 성별 평균과 비교하면 전북 청년여성의 부모 동거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아파트 유형이 73%로 가장 높았고, 점유형태는 자가 비율이 66.5%, 월세(보증금) 17.9%, 전세 12.3% 등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다.

전북 청년층의 주택자금 마련 방법을 보면, 부모님 자금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부/지자체 대출자금은 2.5%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5.3%) 비해서도 적은 수치였

다. 한편,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동거 여부별로는 비동거 할 경우 본인 자금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청년의 혼인상태 부모동거 여부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 불안 경험률 역시 여성,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 비동거 그룹일수록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된다. 정리하면,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과정에 있어서 주거는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성별, 혼인상태, 부모동거 여부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켄거루족보다 한 단계 진화한 이른바 ‘리터루족(리틴+켄거루족)’이 증가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청년이 자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거비 해결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청년에게 있어서 ‘자가 주택’이란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 청년 100명 중 92명은 자가 주택 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동거여부별로는 부모 비동거일 경우 이에 대한 욕구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즉,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그만큼 주택 소유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가주택 소유 욕구에 비해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64.8%에 그쳤다. 자가 주택 소유 욕구(91.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4.2%에 불과해 청년의 결혼이행에 있어서 공공임대와 같은 주택정책은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북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응답이 가장 높았고, 주거비(월세 등) 지원 순으로 높았고, 공공임대 입주정책은 16.4%에 불과하였다. 특히, 성별로는 여성,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청년 그룹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지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주거정책에 있어 ‘청년’으로 그 대상을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성별, 혼인상태 및 부모와의 독립여부까지 고려한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시에 공공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양질의 임대주택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 전북 청년의 삶 관련 통계 현황

(학력 현황) 전북 청년인구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상 비율은 78.5%로 전국(81.2%)에 비해 2.7%p 더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청년여성의 대졸이상 비율은 79.2%로 청년남성(77.9%)에 비해 높다. 전북 청년여성의 학력수준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의 경제활동 상태는 남성에 비해 좋지 못한 점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북 청년여성의 학력수준과 경제활동 상태의 불균형은 청년여성으로 하여금 전북지역을 벗어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앞서 청년인구 현황에서 살펴본 데로 청년여성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출산 현황) 전북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 평균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며 특히 여성의 연령증가가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결혼건수를 살펴보면, 청년층 중에서도 20대 후반의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 전체로 놓고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건수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 여성의 만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첫 자녀 출산연령은 32.10세로 전국 평균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혼연령의 증가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전북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의향을 살펴보면, 먼저 결혼의향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약 75%가 동의를 하였으나 다만 성별과 부모동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난다.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60.8%가 동의를 하여 결혼의향과 출산의향의 차이는 15%p 차이를 보여 결혼이 곧 출산과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의향과 마찬가지로 여성, 부모 동거 그룹 청년여성에게서 특히 낮았다.

여성, 그리고 부모 동거 그룹 청년들에게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나, 결혼과 출산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부담(출산, 경력단절)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 동거 그룹의 경우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과정을 보면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 출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제로 하였을 때,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이미 독립한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결혼의향이 있는 청년 여성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할 수

---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 현황) 문화예술여가 활동 중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2~3일 정도의 여행'이 꼽힌다. 한편,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룹의 이유를 살펴보면, '시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청년들의 팍팍한 삶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부족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사유가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 부담 사유가 높게 나타난다. 청년여성은 남성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일자리 격차) 경향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야하기에 주거비 비중이 높게 책정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연쇄적으로 문화여가 격차로 이어질 가망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성별격차는 다른 영역의 성별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제4장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분석

1.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결과
2.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분석
3. 전북 청년 대상 심층 면접 결과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 제4장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분석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분석하고,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검토 및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젠더전문가(전북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와 함께 전라북도 청년 관련 주요 조례와 2023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중 일자리·주거 및 문화·복지 분야의 핵심과제 2개씩 총 6건의 정책을 선정한 후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양식을 토대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분석·진단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년 주도의 성인지 관점이 통합된 청년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북 거주 청년들과 청년 사업의 청년활동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실시로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의 분야별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결과

#### 가.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개요

청년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자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앙의 각 부처는 청년이 당면한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 영역별 정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도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3년 지역 양성평등센터라는 성평등 실행 체계를 통해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정책의 개선·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기존 청년정책 모니터링 사업과는 다르게 청년 주도의 성인지적 관점을 융합한 청년정책의 평가·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에서 2023년에 시작한 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

운영 사업을 연계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 시각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1) 2023년 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에서 운영한 ‘2023 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사업’은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청년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성주류화 전략을 반영한 정책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청년의 성별간 정책 수혜 현황과 수요 파악, 정책 홍보·집행 방법 등을 청년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정리·제안하여 성평등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은 지역 청년들로 구성되어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와 청년정책 이해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검토·평가를 통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 되었다. 이에 또 다른 특징으로 본 모니터링에서는 청년 모니터링단원들이 젠더 전문가, 청년정책 전문가, 그리고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청년활동가와 직접 만나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를 위한 멘토, 청년정책 이해 및 정책 개선안 도출을 위한 정책 멘도 등을 구성·배치하여 팀별로 필요한 멘토들을 활용하고 모니터링 활동에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모집은 공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성인지적 감수성에 대한 이해 의지와 청년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역 청년들을 연령별·성별·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2) 2023 청년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운영 개요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2023년 지역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단’ 사업의 운영 개요를 살펴보면, 사업 대상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최종적으로 총 14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모니터링 사업계획 시 모니터링 단원으로 청년 참여자의 지역, 연령, 직업 등 다양성을 고려하고 성별 균형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약 한 달(6.2~6.26) 동안 참여자 모집 및 홍보기간 동안 양성평등센터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신청자 수는 제한적이었고, 성별도 여성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모니터링 참여자를 다양하게 모집하고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

해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홍보 기간을 추가하여 2차 모집 (7.4~7.14)기간 약 15일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의 한계가 컸으나 향후 사업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대상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로 최종결정하여 진행하였다.

모니터링단 참여자 모집기간은 1차 모집은 6월 2일부터 6월 26일이었으며, 2차 모집은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였고, 모니터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신청자는 16명이었으나 실제 모니터링단원으로 위촉받은 청년은 14명이었다.

지역 청년 정책 모니터링의 최종 참여자 현황은 [표4-1]과 같다. 총 14명이 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청년 남성은 단 2명만이 참여 하였다. 모니터링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완주와 군산 이외 모두가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은 최소연령 22세부터 최고 연령 36세까지로 20대 초반 4명, 20대 중반 1명, 30대 초반 6명, 30대 후반 2명으로 나타났다.

[표 4-1]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에서 운영한 지역 청년 정책 모니터링 참여자 현황

No	지역	성별	나이	현 상태	혼인상태	현 상태
1	(노00) 전주	여	30세	정규직	미혼	A 팀
2	(김00) 전주	남	32세	정규직	미혼	
3	(송00) 전주	여	29세	무직, 취준생	미혼	
4	(전00) 전주	여	36세	자영업	기혼	B 팀
5	(김00) 전주	여	32세	정규직	미혼	
6	(김00) 전주	여	32세	무직, 취준생	미혼	C 팀
7	(조00) 완주	여	30세	직장인	미혼	
8	(강00) 전주	여	22세	대학휴학 및 계약직	미혼	D 팀
9	(김00) 전주	여	24세	계약직	미혼	
10	(김00) 전주	여	29세	무직	미혼	
11	(두00) 군산	여	35세	계약직	미혼	E 팀
12	(이00) 전주	여	34세	무직, 취준생	미혼	
13	(최00) 전주	여	24세	대학생	미혼	
14	(김00) 전주	남	25세	대학생	미혼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중 청년들의 관심과 성별 경험과 특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분야, 주거분야, 복지·문화분야 등 3개 분야의 정책 일부분을 청년 시각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와 청년문제 현안 도출 및 정책으로 연계·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활동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이다. 6월과 7월에 지역 청년 대상의 모니터링단 구성하기 위해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기관(대학교, 청년활동단체, 센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최종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구성 및 운영하였다.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의 주체는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내부 직원 2명이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최종 선발된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제고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표 4-2]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참여자의 역량강화 교육 현황

구분	일시	역량 강화 교육 내용	비고
1차	2023. 7. 8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위촉	
		성인지 관점에서 청년정책 바라보기 교육	
		전북 청년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참여형)	
2차	2023. 8. 7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활동이란, 모니터링 과정의 이해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작성 안내 등	
		조별 주제 구체화 논의 및 모니터링 활동 방향 수립	

또한, 최종 선발된 모니터링단원 청년 14명은 전북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복지·문화 분야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3개 분야의 정책내용 중 한 분야의 정책내용을 선택 및 2~3명을 묶어 5개 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별로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 시각과 눈높이에서 전북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검토·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니터링 참여 청년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전담인력과 젠더 전문가 간의 팀별 미팅과 자

문을 지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작성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성인지 분석과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활동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성평등 (정책)모니터링의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해 6.2~ 6.26일까지 지역 내 대학, 청년기관과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6월 19일과 7월 4일 모니터링 사업 운영 추진 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운영 방향과 세부 사항 등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젠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6월 26일까지 모집된 모니터링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청년의 연령대별·성별·지역별·직업유무별 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성별과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서 정책 모니터링단의 참여자 모집을 위한 2차 추가 공고하기로 본 사업 담당자와 센터 직원간의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표 4-3]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활동 추진 과정

일시	주요 활동	비고
2023. 6. 19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젠더전문가 자문회의 1차	사전 준비
2023. 6. 2 ~ 6. 26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단 1차 모집 공모와 홍보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
2023. 7. 4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젠더전문가 자문회의 2	
2023. 7 4 ~ 7.17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단 2 모집 공모와 홍보	↓
2023. 7. 08	모니터링단 1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3. 7. 24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젠더전문가 자문회의 2차	
2023. 8. 07	모니터링단 2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
2023. 8. 07	1차 모집된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 중간 점검 진행 상황 공유 및 팀별 자문과 피드백 이후 향후 방향 논의	청년정책 분야별 팀별 모니터링 실시
2023. 8. 22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추진 위한 젠더전문가 자문회의 및 팀별 자문	
2023. 8 ~ 10	팀별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선정 모니터링 활동 실시 및 활동보고서 제출	
2023. 10. 30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단 결과 공유회 및 우수사례 발표 등	모니터링 결과 환류 위한 공유 및 제안
2023. 11. 29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 활동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젠더전문가 자문회의	
2023. 12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단 활동 성과보고서 발간	

7월 8일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1차 발대식과 청년정책에 대한 이

해,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기능 및 활동보고서 작성 요령과 향후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라북도 청년정책 3개 분야(일자리, 주거, 복지·문화)를 선정하고 팀을 구성하여 청년 시각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모니터링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젠더 전문가와 사업 담당자가 팀별 자문과 컨설팅을 수요가 있을 시마다 실시하였다. 분야 정책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도출 방법, 해당 분야별 지역 청년문제 현안 도출 및 정책으로 연계·건의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지속하면서 활동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약 3개월간의 정책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갖고 젠더 전문가와 센터 담당직원의 지원으로 정책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결과 공유회를 10월 30일에 가졌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이후 젠더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 활동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문 받았다.

2023 전북 청년 성평등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전라북도 청년정책 3개 분야별 정책 검토의 기준과 분석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에서의 여성 수혜 비율은 어떠한가?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되는가?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 강화 등이 녹여져 있는 사업인가? 청년여성이 해당 정책사업 신청 시 어려운 점(정보의 접근성과 시간과 여건상의 문제 등)과 제한점은 있는가? 관련 사업 참여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 의향 및 이용과 미이용의 원인은 무엇일까? 해당 청년정책이 청년여성을 위해 혹은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개선 되어져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당 청년정책이 성별화된 젠더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 및 문제 등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등의 질문과 함께 평가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 1) 일자리 분야 모니터링 활동 내용

#### ■ (개선)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고용부와 연계사업으로 기업과 청년의 공제 참여 권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



으로 중소기업 취업생 대상으로 2022년에는 127개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219명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은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지원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다.

한편, 전북지역 산업 분리 직종 통계 현황상 청년 여성의 많은비율이 교육과 서비스업, 보건과 복지업종에 집중 및 편중되어 있고 제조업·건설업에는 청년 남성에 집중·편중되어 있다.

개선 필요 사항
◇ 청년 여성 할당 지원 목표 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성과 목표 225명 중 20%는 청년 여성으로 성과 목표 계획 및 수립 필요</li> <li>• 2024년 선정 대상 인원의 20% → 2025년 선정 대상 인원의 30%</li> </ul>
◇ 본 사업 계획 및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 친화도가 높은 홍보 매체 이용 홍보</li> <li>•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근무 청년여성 대상 홍보 강화</li> </ul>

### ■ (개선) 대학생 직무 인턴 운영

본 사업은 대학생의 전공 연계한 기관과 기업의 현장에서의 실무 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북은 타시도로 유출되는 청년인구 중 청년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으면서도 청년여성은 전북지역 내 양질의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전북 도내에 정착·정주하겠다는 의견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년 여성(대학생)이 타 시도로의 유출 방지와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청년 여성(대학생) 전공 현황 파악과 더불어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생 직무 인턴 기관·기업 연계가 필요하다

개선 필요 사항
◇ 청년 여성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고 수요 높은 기업 발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여성(대학생)의 직무인턴 경험 기관·기업 수요조사</li> <li>• 청년 여성 수요 기반의 기업 발굴 및 청년 직무 인턴 사업 협업 체결 확대</li> </ul>
◇ 청년 여성(대학생) 직무 인턴으로 채용 시 인센티브 제도 등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여성(대학생) 수요가 높은 기관·기업 대상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li> </ul>

### ■ (신설) 전북 청년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로의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청년이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및

해의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 신설 요구 사항

- ◇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중심의 기업 연계 일 경험 프로그램 추진
  - 기업 : IT, 인공지능, 디지털, 이차전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분야 관련 업종 기업
  - 청년 여성 수요 기반의 기업 중심 협업 체결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
- ◇ 청년 여성(대학생) 일 프로그램 협업 및 채용 시 인센티브 제도 등 마련 필요

### ■ (개선) 전북 청년취업 희망 디딤돌

전북 청년층에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과 함께 취업 능력 고취를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 규모는 70명이고 지원 내용은 취업역량 강화교육, 구직활동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성공정착 지원(1인당 50만원)이다. 즉 본 사업에 선정되면 1단계에서는 취업역량 강화교육(면접 스킬, 이미지메이킹, 역량강화), 2단계 취업알선(입사지원서·면접 컨설팅, 취업 알선, 채용 박람회 연계), 3단계 구직활동 지원(구직활동비 1인 최대 40만원 지급), 4단계 재직지원(성공 정착 지원금 1인 50만원, 만족도 조사)과 함께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반면, 전라북도의 산업은 중소·제조업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이 중에서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기업과 일자리에 한계가 크다. 이에 청년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 및 전북 도내 중소·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청년여성 대상 교육지원 필요하다

#### 개선 필요 사항

- ◇ 청년 여성의 수요 반영한 일자리 발굴 및 중소·제조업 리스트 구축 필요
  - 청년여성이 도내 중소·제조업 일자리에 관심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 제공 필요
- ◇ 청년 여성 대상의 중소·제조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별도 운영

## 2) 복지·문화 분야 모니터링 활동 내용

### ■ (신설) 남성 육아휴직 인식개선·직장 분위기 조성

일·생활균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쪼끄러움과 육아휴직 이후 기존 직장에서 지속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청년여성 뿐만 아니라 청년 남성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지역사회 내 분위기 조성과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요구 사항
◇ 육아휴직 제도 홍보 확대
◇ 기업 내 육아휴직 문화 개선 캠페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남성 육아휴직 권장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li> <li>• 청년 여성 육아휴직 복귀 후 지속 고용에 대한 확고한 분위기 조성</li> </ul>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급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 연수구, 천안시, 아산시, 해남군, 부산 수영구, 여주시, 평택시, 그리고 전북의 임실군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제정함</li> </ul>

### ■ (신설) 전북 청년 경험 포인트

국토대장정, 농어촌 봉사, 해외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는 청년의 역량강화 및 진로·직업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적게는 5만원 이하에서부터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참가비가 발생하고 저소득층 및 용돈이 부족한 청년은 참가비 부담으로 참여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진로·직업의 역량과 스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북 청년들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직업 탐색과 스펙 쌓기에 등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청년 경험 포인트제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요구 사항
◇ 전북 도내 청년(대학생 등) 대상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시 포인트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도, 기초단체, 청년기관·단체 등에서 청년대상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율 독려 기능</li> </ul>
◇ 전북도 및 중앙부처 추진 국내외 여행프로그램, 국토대장정 등의 참가비를 적립된 포인트로 대처 가능

### ■ (신설) 전북 청년 문화예술비 지원 사업

지속 상승하는 물가에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청년들이 자주 즐기던 전시관,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향유하려면 1회에 적어도 최소 2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소비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과 수요가 감소하고, 지방 청년층은 도시권 청년층 대비 문화적 격차 문제

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북지역 청년들이 최소 1년에 2-3회의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신설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도내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연 20만원의 문화예술이용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대상</li> <li>• 문화예술이용권(카드) 발급 후 연극, 영화, 뮤지컬, 클래식, 전시관 등 관람</li> </ul> </li> <li>◇ 전북도 청년이 수도권 청년과 문화적 격차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li> </ul>

### ■ (신설) 전북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고령, 장애, 신체 또는 정신질환,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거 '가족돌봄청년'은 전국에 약 10만여명으로 추정되며, 13~34세가 5.6%~7.3%에 해당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와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과 함께 본인의 미래 계획과 미래 삶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 등을 수행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에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신설 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부양자를 통합돌봄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여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돌봄사업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하나 가족돌봄청년의 부양자까지 확대하여 돌봄 지원 필요</li> </ul> </li> <li>◇ 서울의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조부모가 친인척 및 손주 양육시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지급)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필요</li> </ul>

## 2.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가 저출생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대도시지역으로 쏠리는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청년 삶의 질 제고와 함께 청년인구를 유입·정착시키기 위한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법적·제도적으로 청년정책을 강조·확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지역 현실을 담은 청년정책을 추진 해 왔고,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청년 삶 전반을 다루는 다차원적 분야로 확대하고 관련 담당부서의 인력, 예산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지원 기회와 혜택 및 자원 배분 등에 있어서 불균형 등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와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의 기반으로 계획된 2023년도 청년정책을 성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환류 가능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진단하기 위해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 청년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5개를 최종 선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 및 진단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장기적으로 추진될 제2차 전라북도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한 2023년도 전라북도 청년정책 중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분야별 핵심 사업 중 성별 격차가 보다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들과 논의하여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한 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진단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가.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분석

전라북도의 조례들 중 조례명에 ‘청년’을 명시한 조례는 총 7건이었으며, 이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례 조항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높은 조례 5건을 최종 선정하여 살펴 보았다.

[표 4-4]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No	조례명	담당부서	제·개정일
1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과	'22.10.21
2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22.10.21
3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19.10.11
4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23.11.10
5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23.03.03

## 1)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

### ■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는 ‘전라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4월 14일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2021년 5월 28일, 2022년 10월 21일 총 4차례 일부개정을 했다. 2019.12.31., 2021.05.28., 2022.10.21. 세 차례는 행정체계 변화에 따른 개정이었다. 2020.12.31.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청년 연령 인정, 도지사의 책무 확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관련한 구체적 명시,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으로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변화를 나타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제3장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의 조항별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제3장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0조(청년정책포럼단)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제14조(청년의 창업 기반조성)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 제17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등)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21조(청년의 날)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제23조(청년센터 설치·운영) 제24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5조(수당 등) 제26조(포상)

### ■ 조례 내용의 성별 특성 분석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등 고려하여 조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조례 내용 중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포럼단)에서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제8조 5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지역, 성별 균형 참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의 비율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고, 특정 시·군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성별 균형 참여는 개정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에서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개선되었지만, 자격 조건에서 청년정책포럼단 임원, 청년단체 활동 청년으로 제한을 둔 부분은 개선이 요구된다.

제2조(정의)에서 “청년단체”를 ‘청년발전의 공익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발전”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제3조를 따르는데,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에 대응하는 백래시, 특히 청년세대의 폭력적인 백래시에 여성 청

년들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함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성인지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성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위해 성인지 관점을 지닌 관련 단체들을 선호한다. 즉 여성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년들은 청년단체가 아닌 여성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가 어렵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구성에 성별 균형 참여가 보장되어도 성인지적 관점 견지를 확신할 수 없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촉직 마지막 자격 조건으로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어 우회로를 그려보아도, 조례 전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만한 다른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청년의 참여 보장 자격 조건으로는 미흡하다. 성별 균형 참여 기준에 추가하여 젠더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제1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1항에서 각종 위원회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는 위촉직에 한 정하여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제10조 4항에서 청년정책포럼단 임원에 대해 ‘대표 1명, 부대표 2명(남, 여)’으로 명시하고 있다. 포럼단 참여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부대표 1인의 자리만 여성에게 할당된 자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성별 균형 참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공동대표 체제로 여성 2인, 남성 2인으로 임원 구성이 적합하다.

조례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1항에서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실시를 명시하고 있는데, 성별 통계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특히 청년들의 성별을 구분한 자료를 찾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청년들의 성별 차이와 상황 및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태조사 진행 시 성별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성별 구분된 결과 자료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제42조(성인지 통계)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적극적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 제1항에서 청년복지 지원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생활 불안정 요소 해소,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건강, 안전, 결혼, 보육 등’이라 명시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에서 여성은 28.0% 남성은 43.8%로 10년 전보다 여성은 18.9%, 남성은



22.3% 감소하였고, 비혼 출산 동의에서 여성은 38.8% 남성은 40.2%로 10년 전보다 여성은 10.5% 남성은 8.9% 증가하였다. 청년의 의식 변화와 무관하게 '결혼'을 복지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한국의 저출산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성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다. 자칫 사회의 책무를 청년세대에게 전가하여 청년세대를 대상화 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미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결혼'보다는 '결혼, 보육'을 '돌봄'으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 물론, 정책적으로 '돌봄' 개념이 협소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나, 자기돌봄과 상호돌봄의 가치를 배우고 돌봄역량을 강화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청년 원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돌봄역량 부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청년의 삶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복지 지원 영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 해당 조항의 개선(안)

제·개정안	수정(안)
<p>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p> <p>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기획·행정·문화·복지·건설·경제 등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한다.</p> <p>⑤</p> <p>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p> <p>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기획·행정·문화·복지·건설·경제 등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한다.</p> <p>⑤</p> <p>6. <u>청년정책과 관련한 활동 경험이 있는</u> 젠더전문가</p> <p>7. 전북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p> <p>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제10조(청년정책포럼단)</p> <p>④ 포럼단은 대표 1명, 부대표 2명(남,여)의 임원을 포함하여 포럼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도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p> <p>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p> <p>①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 불안정 요소 해소,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건강, 안전, 결혼, 보육 등에 대한 청년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의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청년정책포럼단)</p> <p>④ 포럼단은 <u>대표 2명(여, 남), 부대표 2명(남, 여)</u>의 임원을 포함하여 포럼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도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p> <p>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p> <p>①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 불안정 요소 해소,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건강, 안전, 돌봄 등에 대한 청년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

## 2)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다. 조례는 2014.10.22., 2015.05.01., 2022.10.21. 세 차례 일부개정 하였다. 모두 행정기구 변화와 관련 조례명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21.12.21.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명시하였으나,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제5조(실태조사), 제6조(위원회),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내용 수록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방안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조례 내용의 성별 특성 분석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특정 성별을 명시하거나,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제1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1항에서 각종 위원회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개정된 「청년기본법」제15조 1항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 2항에 의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을 명시하는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위촉 위원의 자격조건에 청년 일자리 관련 근무나 경험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성불평등한 사회사로 인해 여성의 공직 및 기업경영 경험은 남성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자격 조건 완화 및 민간 영역의 비율 확대가 요구된다.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와 제7조(교육기관 활용)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의 협력만 명시하고 있다. 청년을 학력에 따라 배제하고, 고졸과 비교해 비교적 우위에 선 대졸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할 필요 있다.

제5조(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의무와 위탁 기능에 관한 조항이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42조(성인지 통계)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적극적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의무 조항이라면,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별 통계 작성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 ■ 해당 조항의 개선(안)

제·개정안	수정안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②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② 5. 「 <u>초·중등교육법</u> 」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p>제6조(위원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제6조(위원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위촉 위원의 10분의 3이상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	---

### 3)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라북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년 10월 11일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제정된 이후 개정된 적은 없다.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실태조사), 제6조(지원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 제8조(사무위탁),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준용),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다.

#### ■ 조례 내용의 성별 특성 분석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성별과 관련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존재함에도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청년농어업 종사자 수는 남성청년농어업 종사자 수보다 적다. 농촌사회의 남성중심적 성차별적 문화는 여성의 유입을 어렵게 한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5조(실태조사)에 성별 통계와 성평등 농촌문화 개선을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과 농업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시설만 제시되고 있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평등한 마을문화 조성이 여성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 최근 한 지자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체류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면접에서 심사위원에게 ‘마을 어르신에 의해서 성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 청년 스스로 안전에 대해 위협을 감수할 때 농촌 정착이 가능하다면,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에서 성평등 농촌문화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한다면, 정책의 수행방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 해당 조항의 개선(안)

제·개정안	수정안
<p>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p> <p>6. <u>크</u>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p> <p>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p>	<p>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p> <p>6. <u>성평등한 농촌문화 조성</u> 등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1.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p> <p>2.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p>

제6조(지원사업) 8. 크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8. <u>성평등한 농촌문화 조성</u> 등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4)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위한 안 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10일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근 ‘대구 청년 간병살인사건’으로 인해,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청소년 및 청년들이 화두에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영케어러(young carer) 즉,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함. 그러나 최근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인식된 만큼 관련 지원규정이나 정책이 미흡하고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조기발굴하고, 이들의 돌봄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지원사업),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사무의 위임·위탁),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다.

##### ■ 조례 내용의 성별 특성 분석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닿아 있음에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민법」 제

779조에 근거하여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민법」 제779조는 2005년에 개정된 조항으로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보다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이혼 후 부모의 형제자매와 돌봄공동체를 꾸리는 사례도 존재하며, 부모의 재혼 후 직계혈족이 아닌 가족을 구성하는 사례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상승 추세로 2015년 이후 남녀 모두 30세를 넘겼으며, 35세 이하 혼인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급감하였다. 둘 중 한 명이 재혼인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기준 22.6%이다. 다양한 가족 구성과 돌봄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돌봄의 책무는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다. 사회가 충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한 현실에서 개인의 관계망을 통해 돌봄을 수행할 때 사회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조례명에 '가족'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어 다양한 돌봄공동체 배제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 안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독립을 위한 자원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 사회적 관계망, 자산, 소득, 돌봄 경험 인정 등의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으로 돌봄 수당 지급과 지자체에서 돌봄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실상 고용단절을 의미한다. 이력이 있어도 고용단절을 겪는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연령은 확대되어야 하며, 가족돌봄의 종료 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사회 경험을 통해 학업과 역량을 쌓아야 할 시기 돌봄 수행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청년세대에게 미래를 그릴 힘을 주는 조례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 ■ 해당 조항의 개선(안)

제·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신체 또는 정신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신체 또는 정신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u>45세</u>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가족의 범위 확장 항목 신설, 돌봄 수행 진행자에서 경험자까지 확대 항목 신설, 돌봄 수행 기간별 인증제 실시하여 지원 기간 세분화

## 5)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거주 지원 조례

### ■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전라북도 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전북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현재의 조례명으로 2023.11.10.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근거 법령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리하고, 대상자를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장하였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절차), 제7조(재원), 제8조(관리),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10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다.

### ■ 조례 내용의 성별 특성 분석

제2조(정의)에서 적용하는 ‘청년’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다.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는 무주택 조건과 함께 소득기준이 존재한다.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대상자) 3항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거주자에게 우선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서 1인 가구는 총 주거 면적 14㎡로 매우 협소한데, 전북은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면적이 최저 기준보다 넓은 편이다. 청년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고와 세부적인 우대조항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과 청년세대 주거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가 청년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청년 대상자를 포함하여 개정된 이유는 청년의 자립과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안정 도모일 것이다. 향후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 방향과 추진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복지 기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도 요구된다. 또한, 주거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 주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거주지 선택에서 안전성을 우위에 두어야 하며, 지역·마을·네트워크·관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택의 폭을 확장하기 위한 주거 근거리에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해당 조항의 개선(안)

제·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과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제시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u>가구와 청년을</u>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4조(지원대상 주택) * 주거지 선택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 가능한 방안 마련

## 나.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분석

전라북도의 2023년도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은 분야별로 일자리 36건, 주거 6건, 교육 16건, 복지·문화 24건, 참여·권리 12건의 사업이 있다. 이 중 전라북도 청년정책과에서는 분야별 핵심과제를 분야별로 5건씩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전라북도의 2023년 청년정책 중 분야별로 선정된 핵심과제 내용 중 성별 요구도와 차이가 드러나는 사업들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들과 논의하여 3개 분야(일자리·주거·복지/문화)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1) 일자리 영역(창업)

#### (가) 전북 미래산업 청년 기술 창업 지원(자체)

##### ■ 사업개요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근거로, 미래산업 유망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과 향후 도내 일자리 구조 변화 계기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전북 미래산업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2020년~2021년)에 따라 2022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이어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 공고를 통해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기술창업 20개 사(20개 팀 선정)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유망 산업 분야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과 기술 파트너 지원단 구성, 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보육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창업’이란 ‘지속 가능 경영(그린뉴딜), 디지털 전환(웹/app), 첨단 제조, 사회적 가치’라 규정하고 있고, 추진체계 중 시행 방법은 간접사업으로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통계적 차이

먼저, 사회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미래산업 분야(지속가능 경영, 디지털 전환, 첨단 제조 등)의 고용인력 여성 비율은 저조하고 기업 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중은 더욱 낮다(지은희, 2019). 이에 미래산업 분야의 경영과 기술 관련 컨설팅 가능 세대 또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이 당연하다. 최근 4차 산업 대비 디지털 전환 등 미래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 변화를 야기하고 점점 더 많은 미래 산업에 대한 노동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 미래산업 분야의 성별 격차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산업 분야에 청년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는 미래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경제적인 필요와 더불어 양성평등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다. 이에 미래산업 분야에 여성 인재 양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적 차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미래산업 분야는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고 장애물 또한 많기에 여성의 비율이 낮고, 관련 직종으로 진출하는 여성 또한, 소수이며 성공한 여성 롤모델도 극소수다. 이에 미래산업분야의 임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은 여성들이 미래산업 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 혹은 꺼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미래산업 분야의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의 차원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절실하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신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청년 중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청년들을 고려한 사업 추진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여전히 임신·출산·육아 담당자가 여성으로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보다 수요가 있음에도 창업의 어려움이 크고 창업의 방해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청년 남녀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방안이 함께 고민 되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 통계 차이를 나타내는 전북 사업체 대표자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여성은 전체의 38.5%이며, 3년 연속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의 증가율보다 높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여성 대표자 비율은 약 25% 이하로 더욱 낮아 이를 고려한 성별을 분리한 사업 목표 건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 ② 사업 수혜 성별 통계

사업 지원자의 성별 통계, 선정자의 성별 정보, 성별 지원자 대비 선정 비율이 사업 대상자 선정 공지에 포함되어야 하나, 본 사업은 지원하여 선정된 대상자의 성별 정보가

전혀 공표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시행된 ‘전북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지원 사업 지원자는 여성 50.0% 남성 26.4%로 여성의 수요가 남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29.2% 남성은 22.4%가 본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여성의 경우는 약 반절 정도가 탈락하였고, 남성의 경우는 지원자 대부분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 지원자 대비 선정자 성별 비율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미래 산업분야의 성별 균형의 필요성과 청년 여성의 창업 수요가 높음을 고려하여 창업 지원 사업 관련 성별 통계를 지속 공개하고 관리할 필요 있다.

### ③ 사업 추진체계(사업 공고, 홍보 등 포함)에서의 성별 차이

본 사업은 간접사업으로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전북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지원 사업 미신청 사유의 여성은 ‘창업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해서’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해서’가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혜택이나 효과가 작을 것 같아서’와 ‘자체 해결이 가능해서’에 대해 남성은 각각 6.0%, 16.0%로 응답한 반면, 여성은 모두 0.0%로 응답하여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청년남성 보다 청년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맥락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사업신청서 양식에 성별란을 신설하고 성별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여성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방식의 점검 및 수행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④ 본 사업의 성별 격차 및 원인 분석

본 사업의 신청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별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전북 청년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근거로 청년여성의 선정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 선정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면접위원의 성별 균형 관리와 성평등 교육 실시 및 성평등 면접 가이드라인 개발과 공유 등 사업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 ■ 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 사항

본 사업의 주요 문제는 ‘지원 서식’에 성별 기입란이 없고 성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음

며, 사업의 성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에서 대상자 선정 시 성인지적 관점의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과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 지원단, 교육 강사가 갖는 위계를 고려할 때 사업 참여자의 (성관련)안전을 위한 사업 수행 방식도 요구된다.

본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컨설팅과 심사 위원단 대상의 성평등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신청서 양식 내에 성별 기입란을 추가로 사업 지원자 및 선정자, 멘토와 지원단 등을 포함하여 성별 통계 생산·구축과 공개가 필요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대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며, 본 사업 홍보 시 여성청년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각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최종 선정 결정권자인 심사위원단 대상의 성평등 교육과 면접 성평등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작·공유하여 선정 심사 단계에서 불평등한 인식을 예방해야 한다.

## (나)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자체)

### ■ 사업개요

본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을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시군에 타 시도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의 청년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에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즉시 농업 경영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정착 지역 결정 및 농업부지가 확보된 청년 농업인(수료생)에게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가족 단위로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경영을 유도’(23년 사업 지침 중)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대상은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인구소멸지역(전주, 군산, 완주 제외) 11개 시·군 우수 청년 농업인이며, 연령기준은 18세부터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며,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지원 자격요건으로 사업 부지와 사업비 중 자부담이 확보된 자로 제한을 두고 있다. 지원 단가는 개소당 440백만원이고, 지원 내용은 크게 두 영역으로 (H/W)기반조성, 온실신축, 재배시설 및 ICT 기자재 설치, 냉난방시설과 (S/W)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융화 교육 등이다. 2031년까지 858억을 투자하여 195개소의 청년 스마트팜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행 방법은 직접 사업으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도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통계적 차이

먼저 사회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은 가족단위 경영이 일반적으로 많고, 남성이 농업경영의 대표자인 경우가 비울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가부장성 의식이 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강하여, 청년여성이 농촌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촌사회에 여성농업인으로 정착하기에는 상황적·여건적으로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여성 농업인·창업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농작업 여건 개선, 다양한 교육(농정아카데미 운영) 기회 제공, 찾아가는 종합 컨설팅 등 청년농업 여성의 눈높이와 수요 맞춤형의 세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 반영해야 한다.

경제적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청년의 경제적 자원은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 자격요건으로 사업 부지와 사업비 중 자부담이 확보 되어져 있어야 하기에 본 사업 지원에 대한 청년여성의 수요는 높을 수 있으나 토지부지 소유 및 자부담이라는 자격 제한으로 사업 대상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이에 청년여성 대상의 스마트팜 창업에 대한 사업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 조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스마트팜은 첨단기기를 활용하기에 기기의 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노동강도도 상대적으로 덜해 여성에게 맞는 여성친화적인 시스템의 농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청년여성의 본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강화 및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청년남성과 신체적 차이

와 노동강도 차이를 고려한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청년창업 보육과정 내용 구성에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 통계 차이를 보면, 전북의 농어업 인구 내 여성 비율과 농어업 사업체 대표자의 여성 비율은 남성과 비교해 저조하며, 청년 농업인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청년 여성의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할 수 있는, 즉 성별 균형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② 사업 수혜 성별 통계

본 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에 대한 성별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 관련 서식에 성별 기입란을 추가하여 매년 신청자 및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본 사업 관련 기사와 뉴스에 실린 사진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청년여성보다는 청년남성의 참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자료 : 전북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 인기, 농축유통신문(2023.6.8.)

### ③ 본 사업의 성별 격차 및 원인 분석

‘창업’이란 명칭, ‘스마트팜’이라는 명칭 자체가 청년여성 인식 내에서 자동적으로 어렵겠다라는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 청년이 농촌에 스마트팜 농업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정착·정주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들을 홍보하고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진행되는 교육 기간동안 농촌사회의 문화에 친숙한 강사와 멘토 매칭으로 청년여성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적응 기간을 통해 여성 청년이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여성농업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 사항

(현 문제) 본 지원사업은 여성친화적인 시스템의 농업방식으로 청년여성들의 창업과 지역사회 내 정착 및 높은 금전적 수입 등이 가능함에도 창업,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불러일으키는 기존 성별 고정관념 인식, 즉 남성중심의 이미지와 표준화된 성별고정관념의 문제로 신청자 및 참여자가 양적으로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여성들에게 본 지원사업이 매력적인 지원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홍보, 성과물 공유, 청년여성에게 유리한 점 등) 사항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 사항) 성별균형적 관점에서 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성별 통계 작성과 관련된 내용의 공식적인 발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들이 추가되어 개정될 필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신청서 양식에 성별 기입란과 신설과 함께 사업 신청자의 성별 통계 생산, 관련 사업 대표자 성별 통계 생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 참여 인력 각각(지원사업 선정팀, 참여자 지원팀, 사업담당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과 더 나아가 청년여성 농업인에 적합한 스마트팜 시설과 작목 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 2) 주거 영역

### (가)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

#### ■ 사업개요

본 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를 근거로, ‘젊은 귀농귀촌인이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에 가족 단위 귀농귀촌 유입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내용은 장기 거주시설 20호, 실습농장, 부대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귀농귀촌 세대로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이수자이다. 다자녀 젊은 귀농귀촌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직접 사업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통계적 차이

먼저 사회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 청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거주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단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편, 귀농귀촌이 가족단위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귀농귀촌하고 있는 여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혼 여성 중에서도 1인가구 혹은 청년여성 소수 그룹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거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수요 파악 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따른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범죄로부터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 등 안전 욕구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경제적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일자리 질적 수준 등에 따른 차이로 소득과 자산에서 있어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기에 적은 자본으로 적은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여성 1인 가구에 실질적인 임시거주시설 지원과 세트로 농지·부지관련 정책적 지원이 입주자 지원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 단위 거주시설 입주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예상하여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별 통계 차이를 보면, 여성 농어업인의 수가 남성 농어업인의 수보다 작으므로 여성의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

### ② 사업 수혜 성별 통계

사업 수혜 성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다. 귀농귀촌 교육 관련 보도된 기사를 참고로 하면, 여성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사업대상이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이므로 귀농귀촌교육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성별 균형 관리가 요구된다.

### ③ 사업 추진체계(사업 공고, 홍보 등 포함)에서의 성별 차이

2023년 추진계획은 귀농귀촌 보금자리 2개소 조성 공사 추진이 주를 이룬다. 향후 사업대상자는 귀농귀촌 세대가 되므로 예상 실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입주자들이 농촌에 실제 정착에 이르기 위해, 입주자의 네트워크 공간,

입주 공동체 교육 공간 마련이 요구된다.

#### ④ 본 사업의 성별 격차 및 원인 분석

농촌사회의 가부장제 문화, 귀농귀촌 교육시 만나는 남성중심적 문화는 여성청년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여성 청년이 귀촌을 선택하기에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설 및 공간 조성뿐 아니라 성평등 농촌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농촌 문화의 가부장성으로 비혼의 청년 중 여성 청년이 귀농귀촌 교육과 임시거주시설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청년의 귀농귀촌 유도를 위해 가족 단위를 넘어선 공동체 단위의 입주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 ■ 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 사항

(현 문제) 귀농귀촌 임시 주거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입주자 공동체 공간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별 통계 생산도 필요하다. 사업의 목적이 가족단위 유입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배우자 없는 남녀청년 유입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동체 입주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혼 여성 1인으로 사는 경우 주거 안전의 문제와 함께 보수적인 농촌문화의 어려움이 동반되기에 비혼 여성들은 남녀 혼합의 귀농귀촌교육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여성들이 귀농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개선 필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은 귀농을 위해 평균 24.5개월, 귀촌은 15.7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짧지 않은 임시 거주시설 제공 시 성평등 문화 분위기와 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항들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 있다. 이와 함께 임시거주시설 내에 입주자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며, 특히 비혼남성과 여성들의 농촌지역 정착과 영농활동 밀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 귀농·귀촌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의 경험과 요구의 차이가 무엇이며, 정책적으로 성별에 의한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연구와 조사도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및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제31조(성평등한 도시 공간 및 시설조성)에 근거하여 성평등 귀농귀촌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귀농귀촌 관련 시설 조성 교육 및 체류프로그램 내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지

원사업 내용에서 임시거주시설 사용단위를 ‘가족단위’에서 ‘공동체 단위’로 전환하여 결혼하지 않은 비혼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그룹을 유입하고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 (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 사업개요

본 사업은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금리 인상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융자)하여 주거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북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예정자 포함)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는 연령 제한 없이 혼인 7년 이내인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적용하며, 가구당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융자)한다. 최장 10년<sup>6)</sup>(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로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해 준다.

추진체계는 전라북도 및 시·군, LH, 전북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이 사업 주체로 간접 사업으로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주택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등이 있다.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통계적 차이

먼저 사회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면,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불안정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청년 - 결혼·신혼부부 - 유자녀 가구라는 전형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생애주기 단계

6) 신혼부부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가구 4회 연장(최대 10년)

를 벗어난 여성과 남성 비혼가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비혼 1인 가구와 사실혼이 증가하면서 삶과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현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남녀 비혼 가구와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주거의 안전성·주거 안전 비용이 부담되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은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 기준 자료이기는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성 1인 임차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월 임대료·관리비에 전월세 보증금 전환비 6%를 더한 값) 비율이 31.9%로 전체 가구 평균인 10.2%의 약 3.1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 비혼 임차가구의 비율 또한 22.1%로 전체 가구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바깥의 다양한 공동체 형태의 관계 맺음과 연대가 청년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현실도 반영하여 결혼(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한 신혼 부부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 ② 사업 수혜 성별 통계

부부 대상의 사업이므로 부부 수혜자는 여남 비율이 각 50%이다. 사업신청자 및 계약자에 대한 성별 통계는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 방향 개선에 필요하므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 ③ 사업 추진체계(사업 공고, 홍보 등 포함)에서의 성별 차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을 확인하고 선정하여 공급업체로 직접 임대보증금을 전달한다. 사업 대상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예정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2년 단위로 지원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른 임대보증금 확대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우선지원은 적합하나, 자녀 수에 따른 계약기간 제한은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자녀계획을 일정한 방향으로 강요하는 효과를 지닌다. 청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인구정책의 도구로 보는 정책 방향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사업은 신청자격을 유지 여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다. 즉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혼인 관계를 중단할 시점이 부부로 만난 두 개인이 가장 취약한 시기임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없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이념에 맞게 자산과 소득 증대라는 이유가 아닌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지는 혼인 종료로 인한 지원중단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본 사업의 성별 격차 및 원인 분석

2023년 신규 사업 진행 후 계약자 성별 통계를 분석하여야 하며, 동등한 혼인 계약을 고려하여 부부의 이름을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세대주가 되고 여성이 세대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석하고 성평등한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 ■ 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 사항

(현 문제) 결혼(혼인신고)을 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과 경제적 소득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남녀 비혼 가구 및 사실혼 부부 대상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해당사업의 신청 및 지원 자격 유지 조항, 자녀 수별 연장 횟수 제한 등의 내용이 사업 선정 이후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개선 필요 사항) 본 해당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컨설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혼인 유지 조항과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연장 횟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과 혼인신고를 통한 신혼부부 대상 이외 남녀청년 비혼가구, 사실혼 청년 가구 대상 등도 해당 지원사업에 포괄해야 한다.

### 3) 복지·문화 영역

#### (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 ■ 사업개요

본 사업은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을 근거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활동 촉진 및 청년 생활 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청년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이다. 14개 시군 총 2,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간접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자 지원을 받아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포인트(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월별 지급하고 차감하는 방식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도와 시·군이 사후 관리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생애 1회) 지원하며, 구지역량강화교육을 4개월 이내에 2회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해당 사업 참여 기간동안에 취업·창업에 의해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3개월 근속 혹은 매출 발생 여부를 확인 한 후 50만 원을 1회 지원하고 있다.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통계적 차이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2023년 신규 정책으로 추진되는 청년 활력수당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 집중하여 선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에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은 선별적 지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청년활력수당이 취업(창업)과 구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로는 그리 높지 않음이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해당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실제 구직 활동과 구직 성공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단과 점검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정보 접근성에 따라 신청자의 규모와 참여가 성별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성별 특성과 미취업자 특성 상 청년 남성보다는 청년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청년 여성들이 더 높아 청년 여성들의 신청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청년남성들의 관심과 신청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청년남성 대상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한정된 재원에 따른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경험담들을 통해 살펴보면 청년활력수당이 현금성 지원으로 취업과 구직을 위한 역량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 단지 미취업상태에서의 알바비를 대신하는 생활보조비용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에 청년활력수당이 미취업청년들의 구직과 취업 동기 제고와 취업·구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재·자격증·학원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취업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 ② 사업 수혜 성별 통계

2023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성별 통계 생성과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해당 사업의 지원 신청자와 최종 선정자 및 연령대 등 성별과 연령별 통계 생성 및 관리를 통한 정책적 성과와 효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 ③ 사업 추진체계(사업 공고, 홍보 등 포함)에서의 성별 차이

사업 신청 자격 조건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이다. 명칭은 ‘청년 활력 수당’이지만, 수당은 구직을 돕는 활동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30대 여성 청년 중 육아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은 본 사업에서 ‘활력’을 얻기는 힘들다. 실제 해당 사업 홍보 포스터에서의 청년 이미지는 다양한 청년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 구직활동으로 한정하여 사회 활동 촉진과 생활 기반 지원하는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에 적합한 사업 방향과 추진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청년은 매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은 매달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시민 기본권 및 사회적 안전망 확보의 개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청년세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조건부로 포인트를 주는 인상을 받는다. 포인트의 사용 목적과 금액도 구분되어 있어, 항목에 따라 이월 여부도 다르다. 전라북도가 진정 청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면, 청년 시민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기여는 경제활동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문화 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으로 전라북도의 문화와 내일을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 ‘활력 수당’에 걸맞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 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 사항

(현 문제)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제한과 명칭이 주는 청년 배제 효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청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호명하지 않는 추진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 필요 사항)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 해석과 정책 반영에 대한 제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 방식과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에 있어서 향후 인권 전문가와 젠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사업 홍보

포스터에서의 청년 이미지는 다양한 청년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 구직 활동으로 한정하여 사회 활동 촉진과 생활기반 지원하는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에 적합한 사업 방향과 추진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 기본권 및 사회적 안전망 확보의 개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매달 지급되는 포인트 지급 수당에 대한 항목 구분 유연화가 필요하고, 진정 청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면, 청년 시민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구직/취업활동 뿐만 아니라 활력수당이란 명칭과 부합하게 문화 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방향 및 목적이 전환될 필요 있다.

## (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 사업개요

본 사업은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를 근거로 전북도가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1탄으로 농업과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본 사업의 목표는 '취업 초기 청년 대상의 고용 안정과 지역 정착유도 및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청년 활동 증대에 따른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업·임업·어업 및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및 연구소기업 내 취·창업자 청년(18~39세)이면서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업종과 사업체 규모 및 근속 기간 등의 제한이 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며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로 지급하고, 지급된 포인트는 청년 당사자의 건강 관리와 자기개발 및 문화·레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포인트를 지급받는 형식이다.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통계적 차이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속 증가하면서 성별 격차와 성불평등이 노동 현장에서 점진적 감소·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환경이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전라북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9.2%이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대비 12.1%p 높은 71.3%로 나타났다. 고용률 또한 여성고용률은 57.5%이나 남성고용률은 68.8%로 여성 보다 11.3%가 높았다. 경제활동 연구 연보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 직종에 있어서 여성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남성은 제조업(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 지원 신청자의 모집단이 청년남성이 청년여성보다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업 최종 선정자가 청년여성보다 청년남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해당 사업을 추진 시 청년여성의 비율이 일정 수준 선정될 수 있도록 성별 할당 선정을 고려하는 사업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경제적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 남성 보다 여성이 보다 높다는 통계치를 반영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성별 할당 선정이 고려된 사업 수립이 요구된다.

성별 통계 차이를 보면, 경제활동률 비율이 여성이 낮고 30대 연령에서는 남녀의 경제활동률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 또한 청년남성보다 청년여성 비율을 고려할 때, 농업·임업·어업 및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및 연구소 기업이라는 특정한 업종과 사업체 규모 및 근속 기간 등의 제한을 둔 해당 사업이 '지역 정착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청년층의 계층화 및 청년의 등급화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 ② 사업 추진체계(사업 공고, 홍보 등 포함)에서의 성별 차이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 3항 1호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지역사회 내에 정착하길 바라는 청년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 그룹을 선택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 처음 시행한 이후 사업의 내용과 방향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청년여성의 비율이 높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업종과 사업체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전라북도 청년기본조

---

례」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의 취지에 맞는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으로 방향과 내용 전환이 요구된다.

■ 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 사항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지속 사업으로 지속적인 성별 통계 생산과 공개가 필요하며, 연말이나 연초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내용 및 예산에 대해 젠더전문가 및 인권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임업·어업 및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및 연구소기업이라는 특정한 업종과 사업체 규모 및 근속 기간 등의 제한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야 하며, 해당사업 선발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 있다.

### 3. 전북 청년 대상 심층 면접 결과분석

#### 가. 심층 면접조사 개요

##### 1) 면접 참여 대상자

청년의 연령 범주가 지속 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심층면접조사의 참여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청년(18세~39세)과 청년 연령 범위를 벗어난 40대 초반까지를 포괄하여 선정하였다.

18~39세 및 40대까지의 청년들은 각기 처한 다른 여건과 상황이 복합적이고 이에 따른 다층위적인 문제와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이질성을 띄고 있기에 심층 면접 참여 대상자를 성별·지역별·연령대별(20대·30대·40대)·직장 유무, 결혼유무, 동거형태 및 근무형태(학생, 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분·선정하여 각기 다른 경험과 정책수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최종 20명이었다.

한편, 청년정책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실무자 관점에서든 현 청년정책의 제한점과 성별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전북 청년층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심층 면접 참여 대상자 섭외 및 모집은 지역 내 대학과 직장 근무처, 청년정책 사업장, 성평등정책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심층 면접 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지한 후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 2) 면접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심층 면접조사 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1:1 개별 대면 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접근성 한계를 반영하여 전화 면접도 병행하였다. 또한, 면접 내용을 함께 공유해도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 2명 정도 집단 구성하여 집단 면접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조사는 약 1시간 내외로 실시되었으며, 면접 장소는 연구원 이외 면접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하여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기간은 2023년

11월 초부터 말까지 약 1달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 3) 주요 면접 내용 및 자료 분석

심층 면접 내용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청년정책의 정책 대상의 범위, 체감되는 청년정책·사업과 체감되지 않는 이유, 청년정책·사업 경험 유무와 정책·사업의 만족·도움 정도와 한계점, 정책·사업의 정보 인식과 경로, 정책·사업의 성별 차이에 따른 한계점 등 정책·사업의 경험 실태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령대별·성별·지역별·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결혼여부 등 다양한 입장에서 청년정책·사업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추가 필요 정책·사업, 추진체계의 한계와 개선 및 필요 지원 내용, 홍보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심층 면접내용 분석은 면접 시 면접대상자에게 사전 동의한 녹음 내용을 녹취한 자료와 면접 시 키워드 중심으로 필사한 필기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한 뒤, 그 범주 내용들을 위계화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6]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영역	세부내용
청년정책·사업 경험 실태 및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의 정책 대상 범위</li> <li>• 체감되는 청년정책·사업 내용, 청년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이유</li> <li>• 청년정책·사업 경험 유무, 만족·도움 정도 및 한계점</li> <li>• 청년정책·사업의 정보 인식과 경로</li> <li>• 체감되는 혹은 경험한 청년정책·사업의 성별차이에 따른 한계점</li> </ul>
청년정책·사업의 개선 및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들여다 본다면</li> <li>• 연령대별 입장에서 청년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li> <li>• 현 청년정책·사업 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li> <li>• 현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li> <li>• 성별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가·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청년정책·사업</li> <li>• 향후 청년정책 추진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항목이나 요건은</li> <li>•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체계 등의 한계(문제점)와 개선 및 필요 지원 내용</li> <li>• 청년 대상 청년정책·사업 홍보 활성화 방안</li> </ul>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연령, 거주지역, 주거유형, 혼인상태, 동거 형태, 현 상황 및 근무 형태</li> </ul>

## 나. 심층 면접조사 결과분석

### 1)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0명(남 4명, 여 16명)이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2.8세였고, 20대 참여자 5명, 40대 참여자 2명, 그 외 13명은 30대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참여자 5명, 독립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하여 독립 생활하는 참여자 9명으로 1인 가구 생활 1년차에서부터 15년차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내년 결혼예정자까지 포함해 기혼(예정)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보면, 아파트 10명, 오피스텔 및 원룸 6명, (단독·생활)주택 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소유형태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 5명, 보증금 있는 월세 6명, 전세 5명, 자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휴학생 2명, 취업 준비생 3명, 사회복지종사자 3명, 자영업 1명, 사무직·생산직 4명, 청년활동가 4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표 4-7] 심층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사례	거주 지역	성별	나이	동거 형태	주택 유형	혼인 상태	현 상태	직종	비고
1	전주 (광주)	여	25세	주말/방학 본가	기숙사	미혼	대학생		
2	전주 (경기)	여	35세	독립 (1인가구 3년차)	생활주택	미혼	취준생	퇴직 (전문직)	유학 준비
3	전주	여	33세	모와 동거	아파트	미혼	정규직 (10년차)	사회복지	
4	전주	여	36세	남편·자녀(초1)	아파트	기혼(9년)	자영업	서비스직	
5	전주	여	31세	조모와 동거	주택	미혼	정규직 (3년차)	사회복지	
6	군산	여	25세	독립 (1인가구 1년차)	아파트	미혼	계약직	사무직	
7	전주	여	30세	독립 (1인가구 2년차)	원룸	미혼 (내년 결혼)	시간제	사회복지	경기도 신혼
8	군산	여	34세	부모와 동거	아파트	미혼	계약직	사무직 (이직 4번)	

9	전주	여	32세	부모와 동거	아파트	미혼	취준생	무직 (1년6개월째)
10	원주 (대구)	여	30세	독립 (1인가구 5년차)	투룸	미혼	정규직 (3년차)	청년정책 활동가
11	전주 (보성)	여	23세	독립 언니와 생활	원룸	미혼	휴학	아르바이트
12	군산	여	37세	독립 (1인가구 1년차)	원룸	미혼	정규직 (8년차)	연구직
13	군산	남	38세	독립 (1인가구 2년차)	원룸	미혼	정규직	생산직 (중소기업)
14	군산	남	39세	부모와 동거	아파트	미혼	정규직	사무직
15	전주	남	27세	부모와 동거	단독주택	미혼	취준생	인턴 활동
16	익산	남	41세	결혼	아파트	기혼(5년)	정규직	전문직 (제조업)
17	전주 (김제)	여	30세	결혼	아파트	기혼(1년)	정규직	연구직
18	전주 (진안)	여	28세	독립 (1인가구 3년차)	원룸	미혼	비정규직	청년정책 활동가
19	전주	여	39세	독립 (1인가구 10년차)	임대아파트	미혼	비정규직	청년정책 활동가
20	전주	여	44세	독립 (1인가구 15년차)	임대아파트	미혼	정규직 → 비정규직 이직	청년정책 활동가

## 2) 심층 면접조사 결과분석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면접 내용을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경험 실태, 청년정책의 한계와 청년정책의 개선 사항 및 정책 수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정리하였다. 심층 면접의 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심층 면접 내용 분석 결과 요약

영역	상위주제	하위주제
청년정책 인지도 및 경험 실태	청년정책의 정책대상 범위	現 연령 범주(19~39세)에 결혼 여부 고려 필요 시대·사회적 특성 반영 청년 정책대상의 연령 상향조정 필요 청년간 이질성과 니즈 고려 정책대상 범위 세분화 지원 필요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청년정책의 체감도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정책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조 혹은 부재 정책 지원대상 대학생·미취업자에 한정, 청년 직장인 대상 정책 저조
	경험한 청년정책과 도움 정도 및 한계	현금성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청년대상 사업·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현금성 지원사업의 이용 한계: 까다로운 소득기준, 비현실적인 지출 항목 금액, 일회성 등
	청년정책의 정보 인식경로와 접근성	의지·목적 갖고 정책 탐색 및 지인 통해 우연히 취득 청년정책의 홍보, 여전히 부족·충분하지 않음
청년정책 개선 사항 및 정책 수요	청년정책 분야별 개선 사항	(일자리)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상 세분화 지원 필요 (일자리) 청년친화적인 기업 양성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 (주거)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필요 (복지·문화) 전북 정착유도를 위한 보편적 경제지원과 교통·편의시설 구축 필요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위한 개선 사항	온·오프라인 상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청년정책 전담부서, 청년 공무원 중심 지정 등 행정체계 재편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피드백 강화 청년정책의 부서·대상별·분야별 중복과 성과 분석통한 효율성·현실성 제고 청년 지원정책의 참여 제한 횟수 완화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고려 사항	중소기업 대표·관리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필요 여성친화적인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필요

## (가) 전북 청년정책의 인지도·경험 실태 및 한계점

### ■ 전북 청년들이 인지하는 청년정책의 정책대상 범위

(現 연령 범주에 결혼 여부 고려 필요) 심층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청년이란 정책대상의 연령 범주를 사회적 변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연령 범위인 18세에서 39세까지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결혼 여부인 미혼과 기혼인지에 따라 개인이 처한 사회·환경적 여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고 하며 청년의 정책대상 연령 범위 내에서도 결혼 여부를 고려한 청년정책 지원과 내용 등이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청년을 대체적으로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유기적으로 20대 초반부터 이런 정책들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내가 이 청년 정책의 수혜로 좀 안정적이고 좀 행복하게 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서.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이제 많은 정부 정책이 이제 제정하고 있는 그 나이 연령대가 전 적합한 것 같아요.. [참여자 15]

저는 연령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30대 후반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참여자 1]

이제 연령뿐만 아니라 내가 미혼이나 기혼이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혼인데 45세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34세인 사람이 원하는 정책이나 지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참여자 16]

(시대·사회적 특성을 반영 청년 정책대상의 연령 상향조정 필요) 지속 증가하는 평균 및 기대수명, 취업 연령, 초혼 연령, 출산연령, 그리고 인구 전체의 증위연령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농어촌사회 특성 등을 반영할 경우 청년의 정책대상 연령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제시되었다.

특히 농어촌지역과 소도시 지역의 경우 청년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연령대가 지속 높아지고 있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이란 정책대상의 연령 기준과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도 나타났다.

청년 나이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혼 나이가 이렇게 좀 지연됐잖아요.. [참여자 11]

고창군이나 진안군으로 가면 군대는 45세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지방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위주의 소도시를 가게 되면 당연히 40대까지도 굉장히 젊은 연령대이고 청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여자 15]

기대수명 길어지면서 그리고 거기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도 높지 않나요? 군단이나 이런 지역 내 평균 연령이 있으니까..60 넘으셨어도 거의 청년 이장으로 되게 어린 축에 속하시니까 이게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뭔가 고령화 정도나 평균 연령 정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 그 청년의 연령을 늘리는 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자 16]



(청년 간 이질성과 니즈 고려 정책대상 범위 세분화 지원 필요) 청년의 정책대상 연령 범주가 18세부터 39세 혹은 49세까지 그 범주의 폭이 넓어 20대 초반,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30대 중·후반, 40대 등 각 세부 연령별 고용 상황·사회적 여건 및 처한 환경들이 동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질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지고 있는 니즈와 정책적 수요 또한 상이하기에 연령을 세부범주로 묶어 구분하여 지원해 주기를 언급했다. 즉 대학 재학청년, 취업·이직 준비하는 청년, 직장근무 청년,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 출산을 생각하는 청년 등 각 세부 연령대별 필요로 하는 욕구와 지원의 이질성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밀한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던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사실상 좁혀야 뭔가가 사업이나 뭔가 정책적으로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사실상 만 39세면 40대까지 30대 초반까지 되는 나이인데 18세에서 40까지 너무 그 연령대별로 인생에서 제일 변화가 크게 너무 청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하나까 그 불균형이 일단 심한 것 같아서. [참여자 9]

왜냐면 이게 직장을 처음 가지는 게 20대 중반 정도잖아요 사람들이 그 직장을 이게 내 평생 직장이야 해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 번의 이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는데 그게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직을 한 번 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 정책을 좀 한번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자 10]

청년의 스펙트럼이 만 18세부터 39세로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의 각각 영역 각각의 여건에서의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또 각기 이질적이잖아요. [참여자 11]

## ■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청년정책의 체감도

(청년 당사자의 청년정책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조 혹은 부재) 청년정책 활동가를 제외한 심층 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분야별 사업 내용을 대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본인 자신을 포함해 주위 해당 청년들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거나 지역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어떠한 내용과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 투자해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원정책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 혹은 청년층의 일부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거나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책의 지원대상 주로 대학생·미취업자에 한정, 청년 직장인 대상 정책 저조)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청년층이 알고 있고 청년의 정책대상이 조례상 18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청년정책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대학생과 취준생·미

취업자이거나 정책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적 여유 등이 맞지 않아 정책 수혜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청년정책과 비교했을 시 정책지원의 대상 수, 지원의 예산 범위, 지원 자격조건 등이 매우 좁고 협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 취업한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하는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토론했다.

항상 전북 청년허브센터를 이제 방문을 하면 뭔가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뭔가 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취득 취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이렇게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참여자 1]

청년정책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20대에 국한된 청년 정책이 되게 많죠. 요즘은 직장을 많이 바꾸잖아요.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취업 전 청년들한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을 한다면 구분해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참여자 11]

경기도와 비교하면 일단 혜택 인원 수라든지 커버하는 범위가 좁고 적고 알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의 한계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랑 지원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 고요. 정작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조건에 미달이 되거나 막상 이게 그렇게 막 이걸 내가 한다고 해서 나한테 내가 나한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참여자 1]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는 이제 이제 아이를 낳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진짜 커요. 그리고 세금도 이렇게 계속 세금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커서 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원받는 게 왜냐하면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은 우선 워킹 조건에서 나와요.[참여자 11]

## ■ 경험한 청년정책과 도움 정도 및 한계점

(현금성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 등 취업에 필요한 현금성 정책지원을 받아서 교재구입 부담이 감소 되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 받은 경험, 전라북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및 모니터링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생활과 직업 체험 및 생활비로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청년정책들 중 특히 경제적 소득과 연결되는 청년정책과 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년도약계좌, 월세 지원 등 경제적·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경쟁률이 높았고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도움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외 진로와 취업을 위한 청년인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직업 현장과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정보 등이 청년 자신의 진로·적성을 발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토론했다.

자격증 취득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정책 이름은 모르는데 자격증 같은 거, 개인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월 30씩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한 그 웹사이트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수강도 할 수 있고 그걸로 교재도 살 수 있고 그러가지고 좀 자격증도 취득하고 도움이 꽤 많이 됐어요.[참여자 13]

전북에서 하는 서포터즈 모니터링단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이번에는 전북 기업지원센터에서 서포터즈로도 활동했고 익산에서 이제 다양성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하고 여행 서포터즈 하는 것도 했고.[참여자 3]

대외 활동 같은 그런 느낌들의 프로그램들을 서포터즈라든지 정책으로 어디 해외로 보내준다던가라든지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기업이나 박람회에도 서포터즈를 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어요.[참여자 9]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거 도약 계좌는 아닌데 청년 관련해서 나라에서 하는 적금형을 처음으로 이번에 하나 받았고 그 외에는 받은 게 찾아봤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참여자 5]

청년 도약계좌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이상씩 넣으면 이자 조금 더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참여자 9]

(청년 대상의 사업·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대가 평일 오전·오후 시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간적 여유와 시간을 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 준비 청년 등의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직장인들은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근무조건과 시간 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적임도 지적하였다. 이에 청년층 대상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시 청년 직장들의 의견과 수요 및 여건·환경 등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층 대상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및 시행 장소·공간이 대체적으로 전라북도 중심이 되는 전주시로 한정되어 있거나 도시권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외곽 및 도농과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취업 청년과 취업 청년들의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과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안 하는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하는 청년들은 좀 너무 배제.. 소득과 관련 없이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교육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수요일 2시부터 4시 목요일 10시부터 12시예요..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 청년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참여자 8]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또 소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전주가 인구가 많고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이 핵심이 됐지만 진안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도 한 번씩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8]

(현금성 지원사업의 한계 : 까다로운 소득 기준, 비현실적인 지출 항목 금액, 일회성) 취업하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현금성 지원 성격의 경제

적 정책지원의 자격조건인 소득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대부분 해당 지원사업을 수혜받지 못하고 있음에 불만과 아쉬움이 크게 나타났다.

취업(정규직)했다고는 하지만 나름의 어려움과 다음의 생애 단계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정책들의 까다로운 자격조건(소득수준, 가구수준 등)에서 탈락하여 지원 조차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과 자격조건에 대한 완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예로 전북형 청년수당의 경우 직장에 재직 중인 회사의 유형이 비영리 기관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조건 유무가 결정되고 있기에 경제적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 사업으로 경쟁률도 높고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식비 지출 금액에 대한 한도액이 고물가 시대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것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소득 기준으로 나뉘어서 못 받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정책이 이미 직장이 가진 상태에서 중간에 생겨서...[참여자 5]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그때는 또 월급이 180 이상 찍하면 안 된다고 해서 또 그게 찍어버리니까 그것도 놓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소득 기준에서 항상 초과가 돼버리니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주거지원을 받으려면 까다롭더라고요. 자기 명목어야 되고 소득도 보고 뭐 그런 거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조건을 단순화시켜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6]

저도 이제 말했듯이 소득 이제 마무리 180 훌 미미어도 그게 181만 원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1만 원 때문에 못 받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는 한 5만 원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러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참여자 7]

청년 월세 정책, 전북형 청년 수당 이런 거에는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실제 그 청년들한테 해당하냐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나도 신청하고 싶다 해서 해도 뭔가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참여자 8]

아쉬운 점이라고 뽑으면 이 50만 원 안에서 이제 식비는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지출 불가 교통비는 10만 원 이상 지출 불가 이렇게 2개의 항목에 제한이 걸려 있는데 교통비는 괜찮은데 식비 한 달에 10만 원으로 솔직히 청년들 그렇죠 이제 취업 준비 활동한다고 이제 스타디 같은 거 하려고 카페만 가봐도 음료 한 잔에 요즘에 5~6천 원 하는 시대이고 밥 한 번 사 먹으려고 해도 한 끼에 거의 이제 8천 원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참여자 15]

## ■ 청년정책의 정보 인식경로와 접근성

(의지·목적 갖고 정책 탐색 및 지인 통해 우연 취득) 지역 대학의 경우 학교 게시판과 공문 등을 통해 대학생들은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외 청년들은 본인 자신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어떠한 혜택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청·시청 및 청년허브센터 등 기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하고 이

를 통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청년정책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했던 지인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보 내용은 제한적이고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홍보, 여전히 부족하고 충분치 않음)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대부분은 타지역과 대비해서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청년 당사자가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탐색 활동을 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한 정보제공이 없다면 거의 알지 못할 만큼 전라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이것저것 많이 그리고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좀 많이 들락날락해요. 거기서 이제 관련된 무료 수업 있으면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참여자 3]

아는 분이 원래 사회적 기업 그런 걸로 창업을 해가지고 했던 분이 있어서 그분이 좀 한번 이런 사업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겠냐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분이 해서 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하기는 했었는데...[참여자 163]

광주에 있었을 때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청년 관련 정책이 있다는 건 어디서든 주어 들고 누가 이런 거 있대라고 말을 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그 정책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정책 홍보 관련된 거라든가 근데 전주에 와서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대 이런 게 있대 한번 신청해 봐 이런 걸 뭔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대라고요.[참여자 1]

이게 꼭 굳이 막 어디 막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고 진짜 관심 있어서 검색해 봐야 되고 그러지 않은 이상 제가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부족해요...공익 광고의 개념, tv 광고로라도 지나가면서 해준 것도 없었던 것 같고, 누가 주변에서 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걸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면은 주변에서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참여자3]

## (나) 전북 청년정책의 개선 사항 및 정책 수요

### ■ 청년정책 분야별 개선 사항

(일자리)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상별 세분화 지원 필요 이직을 고민 중인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직에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기개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청년의 정규직 전환, 장기 근속을 지속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청년 대상의 고용안정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해 주기를 참여자들은 희망했다.

또한, 직장인 대상의 자격증 취득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 5일로 한정하지 않고 주 1회에서 3회 정도 직장인 청년들이 직장업무 강도와 일정 등을 조절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재직자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근데 되게 듣고 싶은 것도 많고 예전에 비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아서 배우고 싶은데 조금 망설여지고 안 배우게 되는 계기는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요.요즘은 운동도 막 주 1회 2회잖아요. 이렇게 주 5회를 다 투자하기가 힘드니까..주 2-3회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길게 하더라도요.[참여자 12]

근데 이제 그런 훈련 기관을 좀 양질의 훈련 기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대 때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훈련 기관을 들어갔지만 다 툴만 배우고 나온 느낌이거든요 거기 그냥 수박 겉핥기식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참여자 9].

자기 개발, 향수 만들기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계획서를 써서 내면 심사해서 지원비를 주면 좋겠다 페이백 형식으로든 뭐든 해가지고.[참여자 7]

(일자리) 청년친화적인 기업 양성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전북지역 내 청년을 유입하고, 유입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친화적인 기업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직장 내 청년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환경의 조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도 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청년친화적인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눈높이 맞춤형의 다양한 복지제도, 출산·육아정책 확대, 근로시간 등 청년친화적 요건들을 찾아 청년친화적 요건들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과 우대 및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책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직하게 전북에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기에..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요건들을 잘만 갖추준다면 젊은 청년층이 전북도를 떠나려고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직장내에서 바라는 청년친화적인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충족시켜 준다면 연봉은 조금 적더라도 직장을 이직하거나 전북을 떠나지는 않을 거구요. 제 주위의 직장 친구들도 그런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9]

서울이라는 같은 대도시권에서도 대기업 이외 중소기업을 찾는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이 요구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중소기업에서도 잘 충족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기업들을 찾아 취업하는 거구요. 그러니 전북도 차원에서 그러한 청년친화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나 우대조건을 주거나 혹은 청년친화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참여자 10]

(주거)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필요 주거는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출산 등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의 부담이 크면 클수록 주거 독립과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거 문제는 결국 청년들의 만혼화·비혼화 및 결혼 이후 자녀 출산 여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 주거 안정지원금(월 임대료·관리비 지원, 벽지·장판 비용 지원 등), 보증금,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등 주거 비용의 부담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월세 및 내집 마련 시 주택탐색·계약·거주 준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정보 부족과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주거 전문가와의 상담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재의 주택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여 주거 지원 소득수준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의 증가와 최저임금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기혼의 경우보다 미혼의 경우 주거 지원 혜택이 높아 결혼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들이 상당히 존재하기에 미혼의 경우보다 기혼의 경우에 보다 많은 주거 지원의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최근 들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 사회적주택들이 조성되고 있으나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주택 이용이 실질적으로 미흡하거나 불만·불편의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 마련 시 거주 당사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주택 구조와 평수, 주거 공간 및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조금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같이 꺼서 계약을 해준다든지..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전세 사기도 당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불안정성을 국가가 조금 반치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7]

일단 지금 집이 중점이에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 장려금이라고 해서 전세금에 보낼 수 있게끔 해준다면 결혼도 더 당길 수 있고 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참여자 13]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하나가 전월세를 대신 계약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그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지자체는 이제 손해를 봐도 청년들은 손해는 안 보는 거..그 지자체가 그것을 쉽게 이렇게 정책을 또 진행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시장형 공기업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전담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그런 정책 사업을 좀 하나 발굴할 수 있으면..[참여자 15]

가장 관심 갖는 건 주거 복지거든요. 왜냐면 그 용어조차 모르거나 전세 사기처럼 사기가 많이 당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청년이더라구요. 컨설팅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집에 나와서 누군가가 자립을 할 때 필요한 것들..가져오라는 서류도 뭔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가져오는지, 용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내가 그래도 살펴봐야 되는 어느 부분이나 문구가 필요한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는 데도 모르는 거죠.[참여자 5]

주택지원정책에서 보통 소득수준으로 자르는데 소득기준이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맞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계속 혜택이 계속 지원 기준에서 계속 탈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참여자 16]

주택 청약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소득이 생각보다 되게 낮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월세는 계속 상승하고 전

세나 이자 같은 건 계속 늘어나서 1인 가구로 살면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갔을 때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이 주거 임대주택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소득은 계속 높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향선이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참여자 18]

최근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부에서 지원한다, 완주에도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평수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거의 6평 7평 그러니까 청년들을 너무 임시 거주인으로만 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집은 결국 사람이 오래 살기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거주형 임대 주택의 질 자체가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참여자 19]

**(복지·문화) 전북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보편적 경제지원과 교통·편의시설 구축 필요** 우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 및 정주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 등 결혼 준비 비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북 14개 시군의 출산·양육 관련 지원 내용과 규모가 서로 상이한 지점들을 지적하면서 청년들의 출산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보편적인 지원의 확대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전북지역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이동이 불편한 버스 교통 시스템과 문화생활의 제한, 열악한 의료환경을 꼽았다. 대중 교통비 지원,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 전북지역에 있는 대학 입학 등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전북지역에 정착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착금 지원 등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혼장려금 1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냥 지원금이잖아요. 한데 좀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려면 그래도 남녀 각각 300에서 500 그 정도 되면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 제 입장,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 정도면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참여자 13] 근데 전주가 일단 너무 애기 낳고 키우는 거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너무 지원이 적다... 완주는 이런 데 전주는 그러니까 진안 시골로 주소지 옮겨서 애를 낳으면 지원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년 귀농 정책도 지금 엄청나고 완주도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참여자 4]

타 지역보다 조금 메리트가 있게끔 하려면은 현재 여기에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해야 되는데... 교통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업도 안 했는데 인프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뭘 하려면 저기 멀리 가야 되고 근데 또 차가 버스는 막 60분 간격으로 있고 그러니까 [참여자 7]

전북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청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공연 같은 거나 전시회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없고 솔직히 전라북도에 백화점도 딱 한 개잖아요.. 쇼핑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점점 도태되지 않나 이 청년들이 보는 것도 시야도 적어지고. 이러한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참여자 8]

가장 시급한 건 사실 어디서나 나오는 문제긴 한데 교통이고요. 시골에서 살려면.. 기반 없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사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구나..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완주 버스가 없다 보니까. 완주에서 전주 나가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요. 완주에서 전주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의료가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지금 지역에 다 의사들이 안 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조금 더 도시보다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참여자 9]

전주에서 광주로 진짜 정말 매주 가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매 갔었는데 만약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건 교통비 지원. 생각보



다 전북대강 전주대 포함해서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경제적 지원 같긴 하지만 차라리 교통비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면.[참여자 1]

## ■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

(온·오프라인 상 청년정책의 정보 접근성 제고 필요) 우선 청년정책의 주요 대상인 대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대학교 연계 홍보 강화와 온라인상에서 청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을 통한 홍보 확대, 인스타그램, 카톡알림 등 SNS의 적극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 외 청년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라디오, TV, 현수막 등의 매체를 자주 접하고 있기에 출·퇴근시간 중심의 라디오·TV 등을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가 필요하고, 현수막·'2023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소책자(청년정책이 집약된 책자발간)' 등을 통해 정책에 지속적인 노출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청년이 직접 홍보(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와 홍보·마케팅 전문가 및 전문인력을 통한 집중·전문적 홍보가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구두·서면 등으로 전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심층 면접 참여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청년정책에 대한 성별 접근성, 홍보의 다양화, 매체의 다각화 등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홍보의 확대·강화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지속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SNS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접근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홈페이지로 연동을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기억에 남고..[참여자 5]

저는 인스타그램 광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도 다 인스타로, 그리고 저는 학교 공지사항을 좀 많이 봐서 제법 관심은 것 같아요.[참여자 11]

이걸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기회를 받는 사람들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게 그 결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찌 됐든 지원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까지가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지원을 받아서 결과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까지가 완성이잖아요.[참여자 9]

그런 협의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한 끝발 날리는 친구들이 그런 거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13개 읍면에 사는 청년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다 알 수가 없으니 친구들의 또래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해줘 이장의 역할을 해주셔.. 이거는 경제적인 베네핏이 있긴 해요.[참여자 10]

라디오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퇴근할 때 라디오는 다 듣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하는 광고들을 듣게 되더라고요..그 출퇴근 시간에 시간대가 또 중요하구나..라디오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사업을 만들 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참여자 12]

제가 출근할 때 90.1하고 99.1을 듣거든요. 김차동 전주 방송국인가 그 MBC 거기서는 가끔씩 지역 소식들도 많이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군산 얘기도 나오면 좀 좀 집중하게 되고 그러긴 하죠.[참여자 13]

그 지역 내에서 현수막, 전광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현수막에 걸려 있으면 이렇게 주차 정차 신호 대기하거나 이럴 때 보거든요.[참여자 16]

이런 걸 좀 모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이런 정책이 인덱스가 a부터 z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주관 부처는 어디고 연락처는 어디니까 어디 연락을 하고 지원하고 싶으면 어디에 연락을 안 하세요라는 것 정도만이라도 그게 조금 사업 단위로 해마다 정리가 돼서 청년들이 열람할 수 있으면 그래도 접근이 쉬울 텐데.[참여자 15]

홍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이제 채용하여 그 사람이 좀 더 역할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차라리 좀 더 돈을 써서 뭔가 그런 어떤 그런 팀에다가 일정 부분 이렇게 단기로라도 맡기든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참여자 16]

(청년정책 전담부서 공무원, 청년 연령대의 공무원으로 지정 등 행정체계 개편)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발굴 및 현장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북도 및 기초지자체의 고위 공무원과 의원 등 청년정책 결정권자들을 청년 연령대(18~39세)로 해서 전면 배치하고 추진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청년 당사자이기에 현실 맞춤형의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 청년에 대한 이해가 높기에 작게는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을 청년 연령대 해당 공무원들로 배치하는 행정체계 재편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시말해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공무원들을 조례상 규정해 놓은 연령대 중심의 청년공무원들로 배치하여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들이 청년정책의 발굴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부처마다 각자 청년 일을 조금씩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는데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청년팀이 그걸 다 주관하기에는 이제 인력이 안 되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김선태 주무관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청년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군에서도 전북에서도 다 청년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좀 그 일을 담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담당 주무관님의 연령대가 높고, 주무관이 바뀔 때마다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죠 해석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확장됐다 줄어들었다 하기도 하고, 하고 싶어도 커트 당하면 저도 그렇게 돼요. 공무원처럼 그냥 하던거 하자.[참여자 9]

사실 위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시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 청년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에 대한 니즈나 욕구 파악이 조금 덜 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냥 성과 없는 사업들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참여자 16]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관련 내용 피드백 강화)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정책이기에 청년정책 발굴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한에 대한 아쉬움과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청년 당사자를 위한 청년정책이기에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토로했다.

지자체별 청년들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과 사업들이 다양하나 청년 참여자들은 참여와 활동과 더불어 발굴하고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이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청년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자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던 한데 저는 오히려 좀 사실상 좁혀야 뭔가가 사업이나 뭔가 정책적으로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사실상 만 39세면 40대까지 30대 초반까지 되는 나이인데 19세에서 40까지 너무 그 연령대별로 인생에서 제일 변화가 크게 너무 청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하나까 그 불균형이 일단 심한 것 같아서. [참여자 9]

왜냐면 이게 직장을 처음 가지는 게 20대 중반 정도잖아요. 사람들이 그 직장을 이게 내 평생 직장이야 해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 번의 이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는데 그게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직을 한 번 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 정책을 좀 한번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자 10]

끝이 아니라 피드백이나 거기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대관계나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를 또 확인받고 싶어. [참여자 9]

(정책의 부서·대상별·분야별 중복과 성과 분석 등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현실성 제고) 지역 청년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 중 일부는 해당 지원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 부합한 성인기로의 전환에 도움받고 성장하여 생애주기의 다음단계로 이행해 나가기 보다는 오히려 구직활동의 동기와 동력을 잃고 그 자리에 머물거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토로했다. 대상과 내용 및 예산 등이 과도하고 중복되는 청년정책을 양적으로 양산 및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청년들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저는 좀 취업 전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는 거 반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연수를 제한을 두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구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무작정 지원해주는 거는 조금 제한을 했으면 하는 게 있고요 [참여자12]

제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이 생각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걸 새로운 정책들이나 뭐 그런 걸 계속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을 그냥 그거 해나만 잘 운영이 돼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참여자 1]

결혼 수당이나 결혼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봤는데 저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과소비도 심해요. 결혼 지원금 같은 경우는 주면은 결혼을 많이 하겠다 싶겠지만 조금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런 비용을 쓰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15]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이에 우수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것들이 홍보가 잘되다보면 나도 농촌에 가서 시작을 해볼

까. 인식의 전환도 그다음 스텝으로 찾아올 것 같고[참여자 15]

청년 지원이 설계 자체를 좀 안 하고 제대로 못한 게 있으니까 효과가 당연히 그냥 떨어지고 그냥 이제 예산만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성과 관리 해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항상 이제 모든 거에 다 있잖아요.[참여자 16]

(청년 지원정책의 참여 제한 횟수 완화) 일반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한 번 수혜를 받은 정책에는 재차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심층 면접 참여자들을 지원의 효과 및 성과를 보다 드러낼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내기 보다는 성과 대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속성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한 아쉬움이 크며, 청년정책 참여자들의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 제한이 완화되기를 희망하였다.

한 번씩밖에 못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받았더라도 지자체에서 못 받고 지자체에서 받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못 받고.. 소관 부처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사업이나에 따라서도 또 그런 횟수 제한이나 그런 게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생애 최초 수혜와 이제 이미 1회 이상을 수혜를 한 대상자들하고는 좀 선별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완화해서 이제 다음 차수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5]

## ■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고려 사항

(중소기업 대표·관리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 필요) 청년 여성의 경우 청년 남성들보다 면접 시 면접관들(주로 기업 대표, 상급자 등)로부터 남자친구의 여부, 결혼계획의 여부 등 사적인 영역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면, 청년 남성에게는 이러한 사적영역의 질문들은 없는 것에 대해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이 잔재하고 있음을 토론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적영역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 내용이 청년 여성들 취업 시 합격 여부와 기업 입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고, 면접관으로 주로 등장하는 기업의 대표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이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첫 면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른 진입장벽이 암암리에 여전히 있고, 초저출산이란 국가적 위기에서 여성의 근로가 당연시 되면서도 기업 내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등을 성별을 구분지어 취업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에 대해 아직도 사회적 분위기가 양성평등지 않음을 지적했다.

취업위해 면접을 보면, 아직도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는 하지만 남자친구 있냐,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등을 질문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안타깝죠. 물론.. 알죠. 결혼과 출산 등으로 기업의 지장을 주고 생산에 차질이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이런 질문들을 청년 남성에게는 하지 않잖아요?.. [참여자 9]

저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취직하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기 위해 결혼이라든가를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죠.. 저도 저의 자아실현이란 것이 있고, 한데.. 저출산이라고 사회적 국가적 위기라고는 하나.. 기업에서 우선은 싫어하죠. 바쁘게 돌아가는 생산 현장에서 어느 누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눈치보게 되요 [참여자 10]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저하같은 중소기업, 제조업 하는 직장 환경 분위기상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어 취업 당락을 결정하게 되나보다구요 [참여자 11]

(여성친화적인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사회적주택, 행복주택 등 청년을 겨냥한 주택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청년의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여성 친화적인 주거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여성친화적인 주택 구성과 마련 및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이라고 했을 때보다 여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안전이라는 부분 아주 외딴 곳에 그 사회주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주택이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성 공동체가 들어가려고 하면 주변에 좀 어느 정도 안정장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을 뚫고 들어가는 사회주택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골목이 정비되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 [참여자 20]

여성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한 여성친화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비혼일 까구요 여성들이 함께 모여사는 공동체 모임을 만들고 싶구요. 그래서 주거와 주거 근거리 환경이 안전을 포함해 조성되었으면 해요 [참여자 20]

## 4. 요약 및 시사점

### ■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성과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주도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 한 결과, 일자리 분야 정책 중 3건의 사업(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학생 직무인턴, 청년취업 희망디딤돌)에 대한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고, 1건의 사업 제안(청년 해외일경험 프로그램)이 도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산업이 중소기업 및 제조업 비율이 높아 청년여성의 대학 전공연계와 취업연계의 어려움에 대한 한계를 지적 하면서 사업추진 시 대상기업의 확대와 청년여성이 중소 및 제조업 일자리에 취업 가능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되었다.

복지·문화분야 정책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부재한 반면, 청년 시각에서 필요하다 판단된 사업(남성 육아휴직 제고 방안, 청년경험 포인트, 청년 문화예술비 지원, 가족 돌봄청년 지원)들이 4건 제시되었다. 한편, 전라북도 주거분야 정책이 건수 자체가 소수로 정책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서 개선 사항이나 새롭게 제안된 사항은 없었다.

###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분석

(조례 부분)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 구성 조항,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 수립, 성별 통계 생산과 정보 공개 등을 명시한 조례는 부재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청년정책 관련 조례들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청년 관련 조례 조항과 내용에 각종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및 성별 통계 생성·공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전라북도가 발간한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성별 구분된 실태조사가 있으나,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연구와 관련 계획이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전북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법 규들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향후 청년의 연령 제한에 대한 제고가 요구된다. 양극화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연령을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역별 청년정책) 전라북도 청년정책은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 성별에 따른 수요 맞춤형 보다 지역 상황의 필요에 따라 청년을 일하는 존재로, 인구를 늘려주는 존재로 대상화·

도구화하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청년여성은 사회에 참여하고 일하는 존재로서의 맥락이 삭제되어 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전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화와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자원 투입보다, 청년을 성별·연령별·소득수준별 등으로 구분하고 등급화하여 선택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연령대별·소득수준별 청년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와 분야별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젠더 전문가와 인권전문가의 자문 혹은 컨설팅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 수행방식에서 여성 청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대와 30대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자원의 성별 격차가 도드라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생애주기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자격조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청년 개인에게 수당 형식으로 포인트와 현금 지급시에는 청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고, 청년들의 결과 행위를 증명하는 방식의 활동 보고서 증빙보다 기본소득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심층 면접조사 결과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청년정책 인지도 및 경험 실태와 한계점) 청년정책의 정책대상 범위는 현 연령인 19~39세도 적합하지만 결혼 여부와 평균·기대 수명, 초혼·출산 연령 상승 등 사회적 특징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40대까지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청년 상이한 수요와 니즈를 고려하여 연령대 범위를 세분화하여 관련 지원정책이 확대되기를 요구하였다.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했고, 청년정책이 대학생과 미취업자·취준생 및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 대비 정책 지원 대상 수, 지원 범위, 지원 조건이 협의적이고 직장 청년 대상의 정책과 지원 기본자격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취업 지원비, 서포터즈 활동, 청년활력수당, 청년도약계좌 등 현금성 혹은 경제적 지원에 해당되었고, 청년직장인들에게는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과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책의 정보 인식과 경로는 청년이 능동적으로 탐색하지 않으며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청년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청년 정책대상으로

---

연령 범주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청년 연령대별 세부 수요 맞춤형의 세밀한 지원정책과 청년 눈높이 맞춤의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며, 취업한 직장인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개선 사항 및 정책 수요) 먼저 전북지역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청년의 정규직으로 전환, 장기근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고용안정 정책을 희망하였다. 청년들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전세 사기로부터 대응책 마련, 정책 지원 기본조건으로 소득 기준 완화 및 청년 수요 맞춤의 거주 및 주택지원 현실화가 요구되었다. 이외 교통·편의시설 재편과 지원으로 전북으로의 청년인구 정착·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더불어 과도하게 중복되는 청년정책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 수요 맞춤의 홍보의 다각화 및 매체의 다양화와 더불어 주거 분야 정책에서 1인가구 여성의 안전을 고려한 여성친화적인 주거지원 및 주택 마련 등의 세심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 제 5 장

###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개선방안

1.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진단 논의
2.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안





## 제 5 장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 내용에 대한 요약과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성 형평성 수준 제고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향과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 1.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진단

#### 가. 청년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중요성과 필요성 확대 증가

전국 청년인구 비중은 26.9%인 반면, 전북 청년인구 비중은 22.8%로 전국평균 보다 -4.1%p 더 낮다. 게다가 전북 청년인구의 여성 청년 비중 또한 전국평균 보다 낮으면서 매년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 청년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청년여성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이동 분석 결과, 매년 전북의 청년인구가 타 시도로 순유출되고 있고, 20대에 가장 활발한 이동이 일어나며 30대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청년인구 중 청년 여성의 타 시도로의 유출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년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등 주요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 특히 군 단위 지역 청년인구의 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전체 여성인구 중 청년층 비중도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청년여성이 전북지역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여성들의 정책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성별 구분에 따른 수요 파악, 정보 접근성, 정책 만족도 분석 등 전라북도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성별을 초점으로 한 성인지적 관점의 진단·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생성·구축 필요

청년 수요기반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검토 및 진단과 조정의 기초진단 자료가 되는 성별 분리 통계 생성·구축이 필수적이고 또한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분석 시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성별 분리 통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성별에 따른 사업의 명확한 수혜 분석이 어려웠다. 사업에 대한 신청자, 수혜자, 중도탈락자, 취업자, 수료 인원 등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간 사업 만족도(조사) 통계 구축도 필요하고 이러한 성별 분리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 사업별 성별 분리 통계는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정도(성불평등, 성평등 정도 등)를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단위 자료라 할 수 있다. 성별 분리 통계는 청년정책의 사업 계획 방향 수립 및 사업의 기본조건 세팅 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기초적인 성별 분리 통계자료 부족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수혜가 돌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청년정책 사업별 성별 분리 통계 생성·구축은 지금까지 추진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함께 효과성을 측정하는 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성별 불평등 정도를 개괄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시계열적으로 측정된 성별 분리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청년 수요 기반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생성 및 시계열 구축이 기반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축한 성별 분리 통계를 통해 청년정책의 성별 요구도와 정책 효과의 성 형평성 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성별 현황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사업별 각종 서식에 성별 기입란이 필수적으로 신설·추가되어야 하며, 성별 분리 통계 생성 및 집계를 시계열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성인지 관점의 청년정책 기획·집행·환류 체계 기반 조성

전북은 2013년 「전북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2017년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청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응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전북지역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그 원인 진단 및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가 재생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정책, 활동들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매년 타 시도로 유출되는 반면, 유입은 저조하는 등 그간의 전라북도 청년정책이 보여주는 성과가 우수하다고만 말하기 어렵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년정책은 지역 청년들의 문제와 상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수립해야 하고, 청년 수요 기반의 정책적 체감도 제고, 청년 성별의 경험과 실태를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이 되어야만 하며, 청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제고 등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은 가족과 개인적 배경, 교육과 사회진출 과정 등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성별에 따른 격차는 고용단계 진입에서부터 생애주기 단계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이에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집행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에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젠더 전문가와의 정책 협의 논의 과정 단계 생성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집행 및 추진 단계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혹은 젠더 전문가 자문 등을 투입하여 지역별 청년정책 집행 과정의 정합성 높을 필요 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인력 각각(지원사업 선정팀, 참여자 지원팀, 사업담당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과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컨설팅과 심사위원단 대상의 성평등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정책 사업의 최종 선정 결정권자인 심사위원단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과 면접 성평등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작·공유하여 선정 심사 단계에서 성 불평등한 인식을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를 청년과 젠더 전문가 및 정책 업무담당자 등과 함께 지속하여 정책적 보완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 라. 청년층의 이질성과 수요를 고려한 정책 대상 세분화 지원 필요

청년의 정책대상 연령 범주가 18세부터 39세 혹은 49세까지 그 범주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같은 청년층으로 동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 청년 개인과 그들이 속한 가구(부모) 상황과 사회적 여건들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경험 차이를 크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생애주기과정에 따라 대학생 청년, 취업·이직 준비하는 청년, 직장 근무 청년,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 출산을 생각하는 청년 등 각 세부 생애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욕구가 이질적이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에서도 30대 여성은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고용시장에서 경력단절 등 불이익을 겪고 돌봄 부담으로 취업의 어려움과 사회경제적활동 참여 전반의 어려움을 겪기에 청년 후기에 결혼과 출산 변화와 함께 고용시장 내 경쟁과 직장 내 일·가정양립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과 이질적 욕구와 각기 다른 수요들을 반영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20대와 30대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자원의 성별 격차가 도드라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생애주기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자격조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 마.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의 요건

청년정책이 성별 격차와 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적 체감도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행정체계 내 담당부서 조직 인력이 청년연령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 있다.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 담당부서 내 청년정책 실행 주체가 바로 청년 범주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 주요 실태들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지역 청년들의 삶과 밀접하고 상관관계 높은 정책들이 발굴·집행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정책 부서의 담당자 본인이 청년이기에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성 높은 청년정책들의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책 담당부서 공무원을 청년 공무원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성인지적 감수성과 성

인지적 관점을 민감하게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과 참여형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이 발굴·수립·집행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담당부서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는 청년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정책이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인 정책 환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과 성인지적 관점을 융합하고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성인지 분석·평가 업무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 바. 전북 청년정책 분야별 성별 격차 분석

### ■ 전북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전북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령구간별 세분화하여 보면, 청년 여성의 경우 25~29세 구간에 결혼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이 나타나고, 30~34세 구간에 들어서면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더해지고 있었다. 이는 전북 청년 일자리 정책이 성인지적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북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성별과 생애주기과정 특성에 따른 성인지적 요소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나, 2023년 기준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 사업 36개 중 구직을 위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상의 취업·(예비)창업 지원과 교육, 직무인턴 및 영농기반의 지원·육성 사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북 청년 성별 요구도 분석과 심층면접조사 결과, 동일한 청년층이라고 해도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일자리 분야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고용률은 청년 남성 고용률보다 낮았다. 청년 여성의 고용형태는 계약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청년 남성보다 높았고, 계약기간 역시 짧아 청년 여성들의 고용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 여성 취업의 취약성은 취업률에 더해 면접 과정과 채용 과정 및 직장생활 모든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이 많았고 청년 여성의 많은 비율이 취업장벽을 절감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면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 청년 여성들의 취업준비(교육·훈련, 구직, 면접 등) 및 취업경험 실태분석 등을 통해 각 단계별 장애요인과 문제점, 취업 시 여성으로 경험한 불이익과 차별적 요소, 인식, 직업경력을 위한 필요지원 등 정책적 요구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한 면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산업별 청년 취업자도 성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청년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성별 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전북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전북 청년정책의 일자리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은 주로 지역 특화·유망 산업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제공과 지원이 대부분으로 전북 청년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년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자신의 경력이나 향후 진로와 무관한 산업체와 직종에 취업하거나 하향 취업하는 경향이 높으며, 질적으로도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배치되어 경력에도 도움되지 않으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경력 단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청년 여성의 타 시도로의 순유출 인구 규모가 2022년 기준 약 4천 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동하였고, 주된 이동 이유가 ‘진학’과 ‘직업’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는 어느 특정 산업군에 특정 성별이 집중되지 않고 전북 청년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산업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인지적이고 청년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정책 지원 방안 모색과 사업별 신청 자격요건 등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 청년 노동시장에서 청년여성들이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전북 청년정책의 주거 분야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주거분야 정책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의 성별, 생애주기, 부모동거여부, 직장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성별과 관련해서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있어 주거의 의미는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의 생애주기 과정과 연동되어 부모동거가구, 1인가구, 부부가구, 자녀출산가구 등에 따라 그 욕구와 수요가 매우 크게 차이를 보였고, 청년의 주거 관련 정책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청년들의 성별과 생애주기 따른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혼인상태와 부모동거 여부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년 가구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청년 여성 주거는 ‘안전 비용’까지 포함한 주거 비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주거정책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양적인 공급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 수요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분양 제도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북 청년정책의 복지·문화 분야

전북 청년정책의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전북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신청서를 보면 소득기준, 특정 연령, 특수지역 거주자, 취업유무, 기업형태, 유사사업 기수해 여부 등 제약적인 조건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북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복지·문화분야 사업에 대한 보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위기·취약 청년층 대상의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층, 경제적 결핍에 의한 빈곤 청년층, 구직을 단념한 청년(NEET, 청년무직자), 가족돌봄청년 등을 위해 기존 정책의 자격 요건 완화, 정책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전북과 중앙의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정책적 체감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 접근성과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정보 접근과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지적했다. 즉 SNS와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홍보 시 청년여성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각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2.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가.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개선 방안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항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높은 청년 조례 5건을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의 성평영향평가지표에서 활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청년 관련 조례 5건(7)의 공통된 사항으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 구성 조항, 성별 특성 고려한 계획 수립, 성별 통계 생산과 통계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조례에 부재했다. 이에 관련 내용들을 조례에 명시하고 개선할 필요 있다. 한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근거 청년실태조사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분석이 실시되었음에도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청년정책으로 정책 수립이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성별 분리 통계 및 성별에 따른 실태 분석을 반영한 성인지적 청년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촉 자격조건 상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청년의 참여 보장 자격조건이 미흡하다. 이에 성별 균형 참여 기준을 추가하고 젠더 전문가 참여 보장 조항이 필요하며, 청년정책포럼단 위원도 부대표 1인 자리만 여성으로 할당하기 보다 성별 균형 참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표도 남녀 공동으로 할당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제·개정안	수정(안)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기획·행정·문화·복지·건설·경제 등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기획·행정·문화·복지·건설·경제 등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7) 5건의 조례 : 전북 청년기본 조례, 전북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거주 지원 조례

<p>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청년정책포럼단)</p> <p>④ 포럼단은 대표 1명, 부대표 2명(남, 여)의 임원을 포함하여 포럼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도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p>	<p>한다.</p> <p>6. 청년정책과 관련한 활동 경험이 있는 젠더전문가</p> <p>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청년정책포럼단)</p> <p>④ 포럼단은 <u>대표 2명(여, 남), 부대표 2명(남, 여)</u>의 임원을 포함하여 포럼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도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p>
---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경우, 성별과 관련된 조항과 내용이 부재하다. 남성중심적 성차별적인 농촌사회 문화는 청년 여성의 유입을 어렵게 하고 농촌지역 내 정주·정착의 어려움을 야기시키기에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한 조항과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개정안	수정안
<p>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p>	<p>제4조(종합계획 수립·시행)</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p> <p>6. <u>성평등한 농촌문화 조성</u> 등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p>

<p>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li> <li>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li> </ol> <p>제6조(지원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u>크</u>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li> <li>2. <u>성별 특성을 고려한</u>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li> </ol> <p>제6조(지원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u>성평등한 농촌문화 조성 등의</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

성별균형적 관점에서 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성별 통계 작성과 관련된 내용의 공식적인 발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들이 추가되어 개정될 필요 있다.

## 나.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안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모니터링, 청년정책 성인지 분석 및 정책적 수요(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양식 기준) 관련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지적 관점의 전라북도 청년정책 개선 방향을 크게 (1) 전라북도 청년정책 분야별 개선사항, (2)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2개로 구분하고 세부 정책과제(안) 12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5-1] 전북 청년정책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개선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안)
전라북도 청년정책 분야별 개선 사항	(일자리) '전북 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 사업개선, 청년여성 오픈채팅방 운영
	(일자리) 청년 여성 특화 미래산업 (중소기업)분야 취업박람회 및 취업캠프
	(일자리) 청년여성 특화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공모전 및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거)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북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설
	(주거) 전북 청년 주거 지원 센터 운영
	(주거) '(가칭)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복지·문화) 청년 자산 형성 아카데미 및 사례관리 센터 운영
	(복지·문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개선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정책 사업별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생산·(시계열)구축·활용
	청년정책 행정체계 조직 구성원 성인지적 관점 강화
	청년정책 사업 대상 선정 결정권자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
	청년정책 분야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 1) (정책방향 1) 전북 청년정책 일자리·주거 및 복지·문화 분야별 개선 사항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와 고용 문제는 일자리와 고용에만 국한되었다기 보다 청년의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등 전반적인 생애주기로의 이행과 삶의 질에까지 효과를 미친다. 한편, 경제성장률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 내 좋은 일자리 기회 축소로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청년 여성은 청년 남성보다 임금근로자 중 비

정규직과 계약직이 높고,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기업체 규모와 근로형태에 따른 성별임금격차도 커지고 있어서 전북지역 청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복지 및 일·가정양립제도 등에 대한 수혜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요소를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여 생애주기과정 특성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주거 문제도 청년층의 생애주기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모동거 대학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및 자녀가구 등 그 대상별 유형이 다양하고 필요 지원 욕구와 수요도 각기 다르다. 특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과 주거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행복주택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년의 수요와 의견을 토대로 한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세부과제 1) [일자리] '전북 미래산업 청년실업 지원 사업개선, 청년여성 오픈채팅방 운영

미래산업 분야에 청년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는 미래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경제적인 필요와 더불어 양성평등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다. 이에 미래산업 분야에 여성 인재 양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은 먼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컨설팅과 심사위원단 대상의 면접 성평등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작·공유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신청서 양식에 성별 기입란을 추가하여 사업 지원자, 선정자, 멘토, 지원단 등을 포함하여 성별 통계 생산·구축과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본 사업 홍보 시 여성 청년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각화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들이 전북 도내 중소기업 중심의 미래산업 유망 분야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유망 분야의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연령대별로 분석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과 맞춤형 밀착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산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구직 관심과 수요가 높은 청년여성들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지원도 필요하다. 이상의 기능을 청년여성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하여 청년여성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와 청년여성간의 소통 창구, 청년여성간의 멘토링, 그리고 중소기업과 일자리 매칭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사례로 대구경북창업포럼 오픈채팅방에서는 스타트업, 중견기업인, 멘토, 예비 창

업가들의 정보교류 장소로 애용되는 플랫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다.



청년여성 오픈채팅방 운영

청년여성 특화 미래산업분야 취업박람회

■ (세부 과제 2) [일자리] 청년여성 특화 미래산업(중소기업)분야 취업박람회 및 취업캠프<sup>8)</sup>

중소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청년여성 근로 비율이 낮은 남성 집중 일자리 분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공계 내 여성비중이 낮고 비정규직 비중은 높으며 성별 직종과 직무 분리로 경력단절이 많다는 이유로 청년 여성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청년 남성을 주로 배치하고 있다. 이에 청년여성은 지역에서의 취업을 선호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 부족과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족으로 미래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북 도내 미래산업분야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여성 친화기업 등) 중심으로 청년 여성 특화 취업박람회 및 취업캠프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년 여성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소개와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관련 기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여성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여성들은 향후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로 취업 준비와 어떠한 직무역량과 활동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파악하게 함으로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 조경옥, 전이람(2020). 전라북도 청년여성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전북연구원 정책제언의 일부분 참고

■ (세부과제 3) [일자리] 청년여성 특화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공모전 및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미래산업분야, 디지털분야 등 향후 4차 산업 대비 확대할 산업분야(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빅데이터, 첨단소재, 핀테크, 지능형반도체 등등)에 청년여성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 특화 관련 지원사업과 관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적인 미래산업 기술 창업 산업에 청년여성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여성 특화 예비창업자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원활한 창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사업자금, 멘토링 등의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 (세부과제 4) [주거]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북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설

청년 부부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도는 가장 낮고, 민간주택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도 가장 높다. 이에 청년(19~34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북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을 배정할 필요 있다(청년층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의 민영 및 국민주택 대상). 현재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 및 국민주택 공급 물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지자체 승인을 득한 경우 15%까지 가능). 기관추천 외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중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있으나, 전북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청년(19~34세)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을 신설하여 청년부부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파일	조회
익산 부송 데시앙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다...	여성가족과	2022-12-26		402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앞선 대상지(다...	국재협력과	2022-06-29		223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앞선 대상지(다...	국재협력과	2022-04-05		119
전주만성예코르2단지(A2) 10년공공임대주택 대분화거족 ...	국재협력과	2021-12-08		166
전주 만성예코르 2단지(A2)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	국재협력과	2021-11-30		166
전주 만성예코르 2단지(A2)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	국재협력과	2021-11-15		349
전주만성 A1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장애인특별공급 안내	노인장애인지과	2016-03-28		3433
전주만성 A1블록 공공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의사상자) 신청...	사회복지과	2016-03-17		3573
공공임대주택 의사상자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안내	사회복지과	2014-11-03		2454
전주완주 혁신도시 1개단지(B-15블록) 공공임대 장애인 ...	노인장애인지과	2014-10-27		3257

『군산 더샵 디오센시티 2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p>■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지(당첨예정지) 및 예비대상지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감정원(청약망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p> <p>■ 예비대상지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부칙적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감정원(청약망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등·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제권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 신청자가 등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b>1. 공급개요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운동 2-28번지 일원 (디오센시티 A5블록)</li> <li>■ 공급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7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li> <li>■ 주택형 : <b>84㎡ A, 84㎡ B, 84㎡ C</b>, 106㎡, 124㎡, 143㎡, 154㎡</li> <li>■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460세대, 특별공급 311세대 중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b>총 58세대</b></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84A</th> <th>84B</th> <th>84C</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td> <td>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td> <td>10</td> <td>2</td> <td>1</td> <td>13</td> </tr> <tr> <td>장기복무제대군인</td> <td>7</td> <td>2</td> <td>-</td> <td>9</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7</td> <td>2</td> <td>1</td> <td>10</td> </tr> <tr> <td>청예연</td> <td>13</td> <td>3</td> <td>1</td> <td>17</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7</td> <td>2</td> <td>-</td> <td>9</td> </tr> <tr> <td>합 계</td> <td>44</td> <td>11</td> <td>3</td> <td>58</td> </tr> </tbody> </table>					구분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	10	2	1	13	장기복무제대군인	7	2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2	1	10	청예연	13	3	1	17	중소기업 근로자	7	2	-	9	합 계	44	11	3	58
구분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	10	2	1	13																																			
	장기복무제대군인	7	2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2	1	10																																			
	청예연	13	3	1	17																																			
	중소기업 근로자	7	2	-	9																																			
합 계	44	11	3	58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세부과제 5) [주거] 전북 청년 주거 지원 센터 운영

전북허브센터 내 청년주거 정보지원 및 상담센터(혹은 주거지원센터)에 주거 전문 상담·컨설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북지역 청년들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주거지를 선택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다차원의 정보·컨설팅·현장 지원 등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지 선택을 위해 체크리스트 지원, 맞춤형 상담 강화, 지역 기반의 주거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부모동거로부터 독립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 - 계약과정 - 이사/주거 정착 과정 등 일련의 전 과정을 지원해 줄 필요 있다.

전북허브센터 내 윈스톱 주거 상담·컨설팅서비스 플랫폼 운영부터 잦은 이사로 인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벽지·장판 비용 등 이사와 관련 비용(바우처 지급 검토), 청년 여성을 위한 이사·주택관리 서비스 이용 시 불만감 해소와 안전 확보하기 위해 안심 업체 인증 및 여성 기술자 동행 서비스 고려, 마지막으로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수 가전제품·가구 대여(혹은 렌탈료)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상담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청년주거상담센터

## ■ (세부과제 6) [주거] ‘(가칭)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

전북지역 거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 및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는 청년기본조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여성가구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

다는 지적과 청년 여성 주거는 '안전 비용'까지 포함한 주거비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 기반 강화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례를 성인 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표 5-2] 전국 시도별 청년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지원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제정일)	주요 내용
서울	청년 주거 기본 조례 (2018. 3. 22)	3조(정의) 청년 39세 이하인 자, 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5조(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7조(청년주거사업), 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주거사업 : 전월세보증금 등 용자지원, 청년주택공급, 임대료 보조사업, 주거관련 정보 제공사업,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등
경기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2021. 7. 14)	4조(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5조(청년주거실태조사), 6조(청년주거지원사업), 7조(위원회), 8조(지원), 9조(기관과의 협력) 등
부산	청년주거 지원 조례 (2023. 4. 5)	2조(정의) 39세 이하인자,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3개월 이내 혼인예정 부부, 3조(기본원칙), 4조(기본계획 수립), 5조(주거기준의 설정), 6조(청년주거사업), 7조(주거실태조사) * 6-2조(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의정부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2023. 9. 22)	3조(시장 책무), 4조(주거관련계획수립), 5조(청년주거실태조사), 6조(청년주거지원사업) 등

자료 : 저차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기준 2023. 12. 20)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과 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지역정착·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용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2(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한 사항 안내
  3.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정상가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피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세부과제 7) [복지·문화] 청년 자산 형성 아카데미 및 사례관리 센터 운영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들은 자산 축적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자산 및 금융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고급 및 핵심 정보들을 지속 제공 받고 관리받는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이에 청년 대상 자산 형성 및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저축과 자산 형성 방법과 노하우, 재무 관련 지식과 정보, 대출 및 재테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관념과 미래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청년 자신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해 보다 밀착된 컨설팅 지원의 수요도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필요도 있다. 전 북 허브센터 내 자산 및 금융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하여 전북지역 청년들이 자산 축적 및 금융 관련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세부과제 8) [복지·문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개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을 근거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활동 촉진 및 청년 생활 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전북 거주 청년(만 18세에서 39세)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하며, 구직역량 강화교육을 4개월 이내에 2회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 한정된 재원에 따른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언급되고 있었고, 경험담들을 통해 살펴보면 청년활력수당이 현금성 지원으로 취업과 구직을 위한 역량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 단지 미취업 상태에서의 알바비를 대신하는 생활 보조비용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해당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실제 구직 활동과 구직 성공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과 취업 동기 제고와 취업·구직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자격증·학원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취업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은 매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은 매달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포인트의 사용 목적(교통비 10만원, 식비 10만원)과 금액도 구분되어 있어, 항목에 따라 이월 여부도 다르다. 이에 매달 지급되는 포인트 지급 수당에 대한 항목 구분 유연화로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고 진정 청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면, 청년 시민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청년의 구직·취업 활동 뿐만 아니라 활력 수당이란 명칭과 부합하게 문화 활동, 여가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방향 및 목적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 2) (정책방향 2)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정책의 분야별 모든 사업에서 성별 요구와 성별에 따른 상이한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 통계 생산과 시계열적인 자료 구축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청년정책 행정체계와 추진·집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면밀하고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 (세부과제 1) 청년정책 사업별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생산·(시계열)구축·활용

청년 수요 기반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 그리고 청년정책의 검토 및 진단과 조정의 기초진단을 위해 성별 분리 통계 데이터 생성·구축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성별에 따른 사업의 명확한 수혜 분석을 위해 사업에 대한 신청자, 수혜자, 중도탈락자, 취업자, 수료 인원 등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생성과 공식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간 사업 만족도(조사) 통계 구축도 필요하고 이러한 성별 분리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성·구축한 성별 분리 통계를 통해 청년정책의 성별 요구도와 정책 효과의 성 형평성 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청년정책 분야별 및 사업별 성별 현황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사업별 각종 서식에 성별 기입란이 필수적으로 신설·추가해야 하며, 성별 분리 통계 생성 및 집계를 시계열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세부과제 2) 청년정책 행정체계 조직 구성원 성인지적 관점 강화

청년정책의 성별 격차와 성 불균형 해소 및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적 체감도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행정체계 내 담당부서 조직 인력이 청년연령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구성과 함께 성인지적 감수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민감하게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참여형 활동을 지원할 필요 있다.

이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이 발굴·수립·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정책 환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의 한계를 해결하고 청년정책과 성인지적 관점 융합을 통한 청년정책의 성인지 분석·평가 업무를 전담해 줄 인력 배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청년정책이 성별 격차와 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 당사자들

---

의 정책적 체감도와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세부과제 3) 청년정책 사업 대상 선정 결정권자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

청년정책 집행 및 추진 단계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혹은 젠더 전문가 자문 등을 투입하여 지역별 청년정책 집행 과정의 정합성 높을 필요 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인력 각각(지원사업 선정팀, 참여자 지원팀, 사업담당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과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컨설팅과 심사위원단 대상의 성평등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정책 사업의 최종 선정 결정권자인 심사위원단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과 면접 성평등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작·공유하여 선정 심사 단계에서 성 불평등한 인식을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를 청년과 젠더 전문가 및 정책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지속하여 정책적 보완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 ■ (세부과제 4) 청년정책 분야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청년층은 개인과 가족적 배경, 교육과 사회진출 과정 등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성별에 따른 격차는 고용 단계 진입에서부터 생애주기 단계별 지속 확대 재생산된다. 이에 성인지적 관점의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집행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북지역에서 청년 여성의 유출이 심각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청년 여성들의 정책적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성별 구분에 따른 수요 파악, 정보 접근성, 정책 만족도 분석 등을 성별에 초점을 맞춰 성인지적 관점으로 진단·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하는 것이 강조된다.

이에 성별에 따른 요구와 필요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수립하여 집행·시행하는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성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주류화의 도구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 형평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법령, 사업이나 계획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류유선, 2019).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강이수, 신경아, 이은아, 박옥주, 류임량, 황수옥, 남우근, 문지선, 정한, 홍예슬(2019). 최근 노동시장의 성평등 효과 연구. 서울: 일자리 위원회.
- 강인순(2005). 새 세상의 창, 성인지적 관점 갖기, <https://m.blog.naver.com/wndtla9/16396953>
- 공주, 최유정(2020). 서울시 청년 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김강산(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 배진우(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2020).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통권 제284호), 70-82.
- 김기현, 유민상, 배정희, 신동훈, 정지운(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지, 이경숙(2022) 대구지역 청년여성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김수아(2021).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 젠더관점의 고찰. 이화젠더법학, 13(2). 251-286.
- 김연화, 노필순, 이화영(2019).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충북여성의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 충북여성재단.
- 김영미(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 학회,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18(5), 386-396
- 김영신, 고보혜, 정재명(2017). 광주지역 범죄안전정책에 대한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광주여성가족재단.
-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소년정책네트워크(2019).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현, 임희정(2020). 행복주택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대한부동산학회지, 38(4), 69-87.
- 류유선 (2019). 대전청년 좋은일자리 창출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전세종연구원
- 박미선, 조윤지(2020).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 양성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국토정책

Brief, 749호, 국토연구원 p.6.

박주희(2018). 광주지역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광주여성가족재단.

배은경(2016). 젠더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1-45.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배진우, 이민정(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꾸무조 정실국무총리비서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경아, 김영미, 류정아, 박미선, 박정미, 안운정, 이은아, 최윤선, 최지은(2021). wp1ck 청년정책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신경아, 이은아(2022). 젠더관점에서 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취업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문, 39(2), 3-38.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현황과 고용정책 과제.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3(2), 41-63.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오유진, 김교성(2019). 성별, 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19(3), 1-35.

유민상(2023).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 출산 인식과 함의(발표자료).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저출산 대응정책 평가와 과제). 보건복지부.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정미(2017). 청년시대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33(1), 155-175.

이경숙, 최종순(2019). 대구시 안전정책에 대한 성인지분석 및 개선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이경하, 김정인(2019). 충남 데이트폭력 현황 및 대응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재경 (2020)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재경, 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1-33.

임현정(2022).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장미현(2013).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지연(2019). 성주류화 기반 정책수행의 효율성 강화 방안 : 전남 22개 시군 여성정책 담당자를 중



심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조경욱, 전아람(2020). 전라북도 청년여성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 전북연구원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86>

지은희(2019) 디지털 인재전쟁 시대의 여성 인력 활용. SPR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칼럼.

최운선, 남승연, 장미(2016). 청년 여성 일경험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통계청(2023) 지역별 고용통계조사 2023년 상반기 자료

홍선영, 이옥경, 황인주(2014). 성인지적 관점의 시민 참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s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London.

## SUMMARY

---

###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Jeonbuk You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Focusing on Policy Monitoring

Juyeon Lee · Kyung-wook Cho · Heejin Jun  
Jihoon Choi · Ahram Jeon

####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

#####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 (Background) While policy and budget support are being increased qualitatively to create a community favorable for the youth, there has been no discernible improvement in the outflow of Jeonbuk's youth population to other cities and provinces.
- Among the Jeonbuk youth, there is a relatively higher outflow level of females. Therefore, gender perspectives must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Jeonbuk youth policy.
- (Objective)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gender balance and policy perception by analyzing the 2023 Jeonbuk youth policy (focused on three field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based on youth demand. For this, a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requirement analysis, youth-led youth policy assessment and monitoring, and in-depth interviews deduced a youth policy improvement plan reflecting the youths' voice on policy demands.

## 2) Research Method

1. Literature and administrative data were reviewed, including relevant policy research reports, academic journals, and policy trend data.
2. Source materials were reanalyzed, including the population census,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us, population migration statistics, regional employment surve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esidential condition survey, and youth living condition survey (2022), identifying the population status and gender requirements of the Jeonbuk youth.
3.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analyzed by a gender specialist to determine an ordinance related to Jeollabuk-do youth and a youth policy improvement plan reflecting the gender perspective.
4. Youth-led policy monitoring from the gender perspective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youths' policy demands.

##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 Summary And Conclusion

- The following were found to be important and necessary conditions:
  1. Continuous increased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a Jeonbuk youth policy gender perspective analysis.
  2.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gender-disaggregated data.
  3. Establishment of a gender perspective youth policy planning, execution, and reflux system.
  4. Subdivision of policy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and

demands of the youth.

- 5. A dedicated department for implementing a gender perspective youth policy.

### ■ Improvement of the Jeonbuk You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 Based on key research results of youth-led youth policy monitoring, youth policy gender perspective analysis, and policy demands (based 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gender perspective improvement plan for the Jeollabuk-do youth policy has been divided into two major parts: (1) Improvement of the Jeollabuk-do youth policy according to field, and (2) establishment of a base for improving the you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wherein 12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are proposed.
- Policy Direction and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for the Jeonbuk You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Policy Direction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Improvement of the Jeollabuk-do Youth Policy According to Field	(Job) Improvement of the “Jeonbuk Future Industry Youth Technology Startup Support” project and operation of a young women’s open chat room.
	(Job) Career exhibition and career camp for future industry fields (small businesses) that are specialized for young women.
	(Job)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prospective startup founder idea contest and development program specializing in young women.
	(Housing)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Recommendation Special Supply” for youth and newlyweds.
	(Housing) Operation of a Jeonbuk youth housing support center.
	(Housing) Enact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Youth Housing

	Stability Support Ordinance.”
	(Welfare and Culture) Operation of a youth asset formation academy and case management center.
	(Welfare and Culture) Improvement of the “Jeonbuk Youth Vitalization Allowance.”
Base Establish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Youth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Production, (time series)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data according to the youth policy project.
	Strengthening the gender perspective of individuals in the youth policy administr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gender perspective of decision-makers selecting the targets for youth policy projects.
	Specific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research regarding key projects in the youth policy field.

**Key Words**

Jeonbuk youth policy, Youth population,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perspective

기본연구 2023-14

성인지적 관점의 전북 청년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책모니터링 운영 중심

---

발행인 | 이남호

발행일 |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511-1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